

정책담당자가 만드는 경제전문지

나라경제

제 6 호
1 9 9 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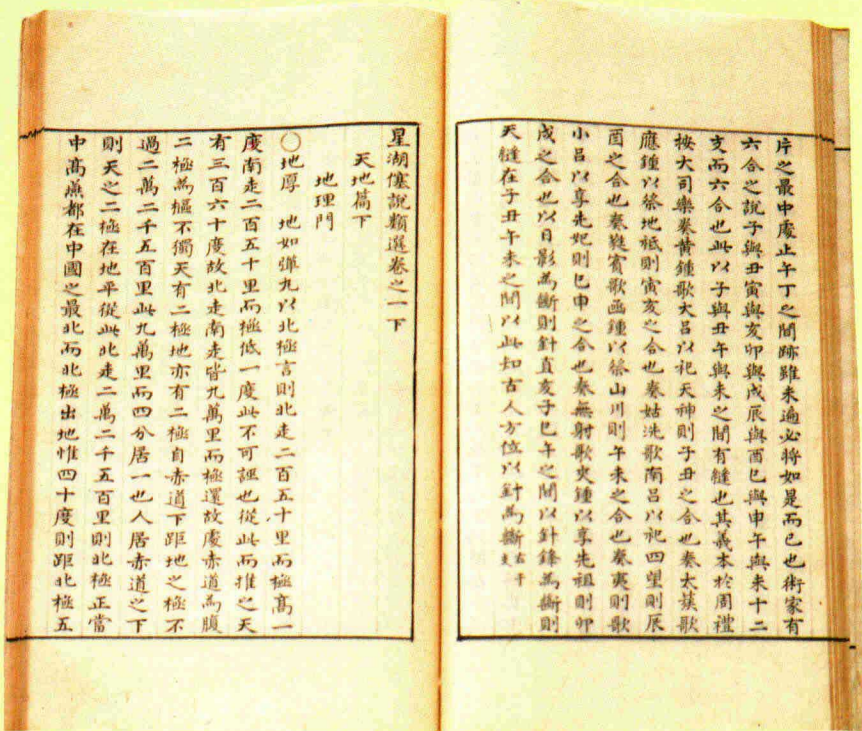
나라경제 · 1991년 5월 4일 발행 (매월 1회 발행) 제2권 제5호 (총권 제6호) · 1990년 11월 14일 등록 · 등록번호 라-4859호 · 발행처 국민경제제도연구원 · 135-27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1-12 · 135-619 서울 영등포구사서함 1947 · 대표전화(02)561-1400 · FAX (02)561-1410



특집 / 제조업 경쟁력강화대책과 중소기업 육성
논단 / 성과배분제도 : 도입방법 및 사례
만남 / 극작가 신봉승이 만난 최각규 부총리
경제정책해설 / 여신관리제도 개편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

편집 /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행 / 국민경제제도연구원

天地·萬物·人事·經史·詩文에 걸친 학문과 사상의 集大成



이익(1681년~1763년)

조선조 영조 때의 대실학자로서 호는 성호(星湖) 자는 자신(自新)이었다. 본관은 驪州이고 부친은 대사헌을 지낸 이하진이였다. 1705년에 증광시(增廣試)에 응시하였으나, 그의 형인 이잠이 당쟁으로 희생되자 벼슬을 버리고 학문에만 몰두하였다. 특히 반계 유형원의 학문을 계승하여 더욱 대성하였는데, 천문과 지리에서부터 경사·역산(曆算)·경제·군제·서학(西學), 시문에 이르기까지 해박한 지식을 갖추었다. 그의 높은 학행 때문에 1727년에는 선공기감역(繕工假監役)에, 그리고 1763년에는 노인 대우로서 첨중추부사(僉中樞府事)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성호는 부친이 1678년에 중국 연경에서 구입한 방대한 서적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타고난 준결하고 영명한 덕성으로 그의 새로운 학문을 대성할 수

있었다. 성호의 저술은 그의 학문과 사상의 진면목을 보여준 『성호사설』을 비롯하여, 『사서삼경』, 『소학』 등에 대한 질서(疾書), 『곽우록』, 『사철신편』, 『예설』 등의 저술, 그리고 『성호문집』과 그 속록 등으로 방대한 양에 이른다.

그는 향리에서 실증적 사상에 기초하여 비판정신에 입각한 고증적 역사인식을 주장하였고, 당쟁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토지경제의 안정을 기본적인 경제정책으로 보고 이를 위해 한전론(限田論)을 시행하자고 제안하였음은 유명한 일이다. 성호의 학문과 사상은 안정복·이가환·이중환·윤동규·권철신 등의 제자들에게 의해 계승되고, 마침내 다산 정약용에 의해 집대성됨으로써, 우리 실학사상의 중조(中祖)적 면모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토지경제의 안정을 경제정책의 기본으로 보고 토지점유의 균형유지 위해 限田論을 주장

『성호사설(星湖僿說)』은 영조 때의 대실학자인 성호 이익이 40여년에 걸쳐 그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해박한 지식과 비판정신을 집대성한 저작이다. 성호는 이 책을 40세 전후부터 “보는 데 따라 생각나고 의심나는 것을 적어두고는 다시 펼쳐 보지 않았던 것”이라 하면서, 거름과 땀감과 같은 미천한 것들도 비료와 미찬(美饌)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책을 잘 보는 자가 백의 하나의 수확이라도 거둘 수 없겠는가”라고 겸손해 하고 있다. 성호가 죽은 후 정본(正本)을 만들지 못한 채 여러 제자들이 초본만을 각각 베껴 갔기 때문에, 이 책은 따로 정본이 없으며 규장각본, 재산루(在山樓)장본, 동양문고본 등의 여러 편의 사본들만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했으므로 이를 바로잡는 작업이 高足弟子인 순암 안정복에 의해 『星湖僿說類選』이란 이름으로 이뤄졌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의 사료적 가치는 반감되기 마련이었다.

사설의 내용은 천지문(天地門)·만물문(萬物門)·인사문(人事門)·경사문(經史門)·시문문(詩文門)의 다섯 부문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먼저 천지문은 천문과 지리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특히 서양과학 지식과 더불어 우리 강역의 문제와 깊이 관련되는 지리고증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만물문에는 생활과 깊이 관련된 여러 사물에 대하여 평소에 상고한 것들로서 복식(服飾)에서 각종 의복·농업·가축·곤충 등에서부터 심지어 옷놀이에까지 세밀히 그 생태와 고증을 밝힌 내용이다. 성호가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인사문은 주로 정치·제도·사회·경제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인사문을 통해 그는 우리의 정치풍토와 관료제도를 전면적으로 고쳐야 하며, 경제면에서는 나라의 토지를 독점한 소수의 권문세가와 격심한 빈부격차 그리고 화폐의 유통에 따른 극심한 사치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성호는 토지점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1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토지소유에 대해서는 매매를 자유롭게 하고, 그 이하 규모의 매매에 대해서는 국가권력으로 이를 금하는 한전론(限田論)을 주장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는 토지측량, 호구조사를 철저히 하여 과다한 잡세(雜稅)를 없애고, 10분의 1세를 준수하여 농민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상업발달과 더불어 야기되는 화폐의 악순환과 농촌의 파멸을 근절하기 위해 화폐사용을 점차 억제하여 자급자족적인 농촌경제의 부활을 꾀하는 색다른 주장을 펴기도 했었다. 또한 성호는 노비신분 세습제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양천(良賤)과 사농(士農)의 신분구분을 철폐하고, 근검을 덕목으로 재능 있고 실적이 높은 인재를 등용하라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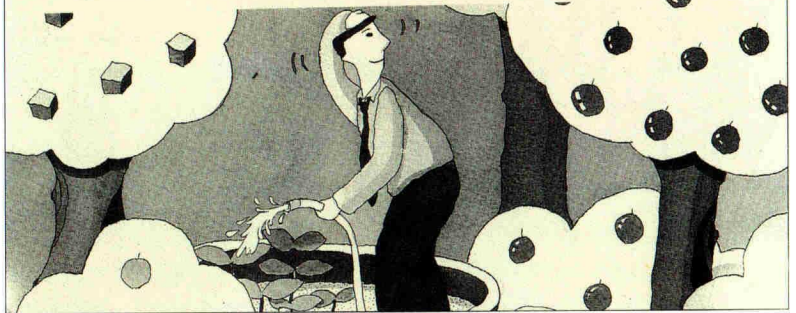
한편 경사문에서는 공자 당시의 유학으로 회귀하는 ‘수사학(洙泗學)적’ 측면을 진하게 가졌으므로 역사에 고증적이면서 객관적일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시문문에서는 선현의 시문에 대해 자세히 논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성호사설』로 표출된 이익의 사상은 조선사회의 內發的인 발전에 기반한 주체적인 비판의식과 자각의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특히 그의 사상은 중국경전에 기반을 둔 당시 조선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비판이었으며, 그런 점에서 그의 의식은 근대적인 사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성호는 역사를 설화적으로 인식하는 데서 벗어나 실증적 방법을 도입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을 문화전반에 적용함으로써 이후의 학문문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른바 『택리지』로 유명한 이증환과 『동사강목』의 안정복 등은 이러한 『성호사설』의 방대한 학문체계를 자기 나름의 세계에서 각각 계승한 학자이기 때문이다.

나라 경제

1991.5 제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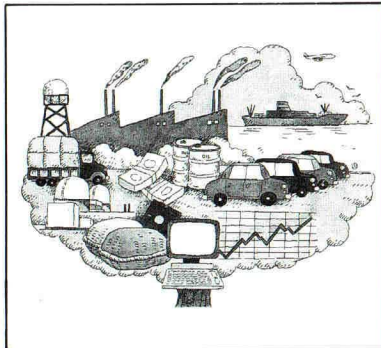
특집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과 중소기업 육성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정책기조 / 한덕수 · 상공부	14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추진상황 / 이재길 · 상공부	18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방향 / 한영수 · 상공부	22
금융 · 세제상의 중소기업지원 / 서승일 · 재무부	26
중소기업의 생산기술개발 촉진방안 / 박영기 · 상공부	30
전문 · 계열화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 / 안길원 · 상공부	34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방안 / 김용달 · 노동부	38
중소기업의 공장부지 확보 및 입지지원방안 / 채덕석 · 건설부	42



경제정책해설

여신관리제도 개편 / 김종창 · 재무부	72
농업구조개선에 부응하는 농지제도의 정립 / 나승렬 · 농림수산부	76
중소기업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방안 / 류명현 · 특허청	80
걸프사태 관련 우리 정책의 성과와 반성 / 김관영 · 동력자원부	84
水資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 / 하진규 · 건설부	88
에이즈 예방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 / 김문식 · 보건사회부	92
산재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 이강만 · 노동부	95
화물유통 정책방향 / 김한영 · 교통부	99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 주현정 · 체신부	102
동아시아지역의 원자력기술 협력 / 이순철 · 과학기술처	106





만남 / 최각규 부총리



명산순례 / 화왕산

권두칼럼

한국경제 '제2의 도약'을 위하여 / 김윤환 · 단국대 교수 6

경제정책의 산실을 찾아서

신도시 건설의 견인차
-건설부 신도시건설기획실 / 이백만 · 객원기자 8

경/제/수/상

새 경제질서를 창출해야 한다 / 신국환 · 상공부 46

우리의 '삶의 질', 어느 수준에 와있나? / 주경식 · 보건사회부 48

기술선진국 독일을 다시 생각한다 / 박승덕 · 과학기술처 49

경제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중 · 고교 경제교육이

밀받침되어야 / 김주일 · 경제기획원 50

더 훌륭한 준비를 위해 / 이동규 · 동력자원부 51

땅 값 조사 / 손선규 · 건설부 52

정보통신과 기업의 경쟁력 / 이인학 · 체신부 53

경제동향

나라안 물가불안 속 경기회복세 지속 / 송하성 · 경제기획원 54

나라밖 '90년의 미 · 일 · 독간 무역불균형과
각국의 무역추이 / 김성철 · 산업연구원 57

해외통신

로마와 농업국제기구
/ 원광식 · 농림수산부 / 주이태리대사관 농무관 60

일본관 신조어 '3K'
/ 오중남 · 경제기획원 / 일본에세이경제연구소 파견 61

언어가 풍부한 나라 / 최재유 · 체신부 / UPI 파견 62

나라경제 화랑 63

만남 극작가 신봉승이 만난 최각규 부총리

나라경제의 새 사령탑 64

명산순례 화왕산

가리마 같은 능선따라..... 68

노영하 바둑교실

희한한 라디오 중계방송 109

출입기자코너

정상 바라보며 현위치 확인하는 노력을
/ 유석기 · 한국일보 기자 / 경제기획원 110

'차량10부제 운행' 해제 유감
/ 함승용 · 매일경제신문 기자 / 동력자원부 111

세미나 지상중계

소련경제와 한 · 소 경제협력
요약 · 정리 / 조원희 · 국민경제제도연구원 112

나라경제논단

성과배분제도 : 도입방법 및 사례
/ 정인수 · 한국노동연구원 116

중국의 경제개혁 성과와 전망 / 김창선 · 경제기획원 120

국제산업재산권 분쟁과 대응방안 / 이상열 · 특허청 125

노사갈등 해소를 위한 제언 / 고광섭 · 경제기획원 129

경제부처동정 정책일지 · 인사이동 / 편집실 133

경제부처 발간자료안내 / 편집실 138

나라경제를 읽고 141

한국경제 '제2의 도약'을 위하여

김운환
단국대 교수

우리는 지금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는 냉전 종식을 계기로 동서화해와 경제협력시대로 들어갔고, 우리나라는 구체제를 점차 청산하면서 민주화와 경제성숙화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하여 발돋움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시대적 흐름의 방향이 바뀌는 전환기에 있어서는 한 나라의 정책구상이나 정책목표도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60년대초 경제개발계획 실시 이후 중진국단계에 이르는 기간에는 빈곤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인내를 강요하는 고도성장, 수출중대, 경쟁력강화 위주의 경제정책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경제개발의 그늘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었고, 땀흘려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분배가 고르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생겼으며, 사회의 기강이 풀리고 범죄와 폭력, 환경오염과 자연파괴가 만연되어 생활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서 생존의 위협마저 받게 되었다.

시민의 생활수준과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나라경제가 중진국 단계에서 성숙화 단계를 지향하는 전환기인 현 단계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경제개발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욕구를 반영하고 시민의 생활을 돌보아 주는 방향으로 정책구상과 정책목표가 새로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로부터의 정부선호와 아래로부터의 시민선호가 조화되지 못하여 官·민간의 갈등이 조성될 것이며 시민적 지지기반이 형성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정부는 지난날의 성장일변도 경제정책과 그 功過를 반성하고 재평가하면서 시민의 절실한 욕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의 대담한 정책전환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이론적이거나 거창하고 巨視인 정책보다 당장 자기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보다 안정된 경제생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범죄·사고·질병으로 인한 인명피해로부터 보호되는 생활의 안전보장을 바랄 것이다. 그러기에 가난한 시민들에게는 평수가 넓고 값비싼 '2백만호 주택건설계획'이 자기들을 위한 정책으로 별반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경부고속전철도 좋지만, 그에 앞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대책을 세운다면 시민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다. 재원조달이 어렵다는 3차국도개발계획, 서울시 지하고속도로 건설, 4大江 환경대책 등은 의욕적이기는 하지만 그 실현가능성에 회의를 갖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정책이 시민의 피부와 마음에 와닿도록 자상하게 손질되고 재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그간의 경제성장정책의 결과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던가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재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로스엔젤리스 타임즈」지는 4월 7일자 기사에서 한국경제가 겉으로는 건강한 듯이 보이지만 속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세계경제가 불황이었는데도 한국경제는 9%나 성장하였으나 이제 자신감을 잃었다고 평하고 있다. 이 신문은 경제자유화에 따른 대재벌에 대한 통제력 약화, 재벌의 부동산투기 및 이로 인한 근로자의 사기저하, 물가 및 임금상승에 의한 국제경쟁력 약화를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더욱이 미국 등의 개방압력으로 국내산업에 대한 보호도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외부의 비판을 냉정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한국경제 成熟化의 디딤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적 외에도 빈부격차문제, 과소비문제 등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더욱이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설비개선·기술개발 등 생산성향상을 위한 부문에 투자하지 않고 財테크에만 열중함으로써 제조업이 空洞化되는 가운데 서비스업·건설업만이 번창하여 내실없는 성장을 이루고 있다. 국내 언론에서도 재벌기업들이 과소비조장, 물건사재기, 속임수장사, 부동산투기, 폐수흘리기 등으로 무슨 수를 쓰든 돈만 벌면 된다는 부도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족벌경영체제에서 빨리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어쨌든 기업경영의 건전화로 자유기업주의를 살려 공정경쟁에 의한 경제효율화를 기하고 근로의욕을 양양시킬 수 있는 공정분배와 노조 건전화에 의한 산업평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민주화에 편승한 사회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정치민주화와 그 전제조건이 되는 法治民主化 내지 건전한 시민정신의 함양이 필요하다.

경제의 성숙화를 지향하는 나라경제정책의 논리는 이상과 같은 반성 위에서 경제를 건전화시키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복지향상에 중점을 둔 것이 되어야 한다. 요컨대 오늘의 한국경제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 주체인 근로자·기술자·중간관리층·중소기업가·공무원 등 시민일반에게 응분의 보상이 돌아가고, 앞으로의 경제발전을 다지기 위한 민주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장중심주의의

경제정책은 시민생활의 향상과 안정, 생활환경의 양적·질적 개선을 대폭 수용하는 방향에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복지에 중점을 둔 정책이념과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시민생활의 안정 및 경제성장과 수출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시급하다. 기업은 물가안정의 기반 위에서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한 생산성향상투자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한국경제의 제2의 도약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해문제, 국민건강문제, 주택문제, 교통문제, 소비자보호문제, 교육문제 등을 시민복지향상이라는 관점과 지방화시대에 따른 시민참여라는 관점에서 원숙한 정책구상으로 정책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농촌문제, 여성문제, 민생치안문제를 슬기롭게 처리하여 사회안정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자유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우리는 공산주의와 대결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의 내용을 反共民主主義로 받아들였고, 급속한 공업화를 위하여 자유자본주의를 官主導의 재벌경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시민을 위한 정책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고 경제효율과 경제공정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이익과 국민전체의 이익이 조화되는 진정한 민주화와 자본주의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라

신도시 건설의 견인차

건설부 신도시건설기획실



신도시 건설계획은 지금까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분당지구 건설현장.

“뭐 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도시 건설은 당초 일정대로 추진됩니다.”

“신문에 발표됐지 않았습니까? 경제 여건상 일산 신도시의 착공을 연기한다고 말입니다.”

“명백한 오보입니다. 그럴 리 없어요. 건설부가 그런 계획을 세운 사실이

없습니다. 발표자료를 일부 기자들이 잘못 파악, 확대해석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4월 9일 일부 석간신문들이 ‘일산신도시 착공연기’라는 제목 아래 정부의 신도시건설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보도하자 건설부 신도시건설기획실의 전화에 불이 났다. 업무가 마비될

지경으로 확인전화가 빗발친 것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분당은 물론 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건설을 차질없이 완료할 것”이라고 입이 닳도록 설명했다.

신도시!

수도권 중산층의 꿈으로 일컬어지는 신도시가 과천종합청사 지하후생관 한모퉁이에서 영글어 가고 있다. 신도시건설을 총괄지휘하는 신도시건설기획관실이 바로 지하후생관에 있다. 과천청사가 비좁아 사무실을 얻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지하후생관을 빌려쓰고 있는 것이다.

집없는 서민의 한과 고통을 체험해 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은 물론 아니지만, 신도시건설기획관실이 번듯한 사무실 한 칸 제대로 얻지 못하고 남의 집(그것도 지하) 신세를 지고 있다는 것은 무척 아이러니컬하다.

신도시건설기획관실은 신도시건설기획실의 후신이다. 그러나 아직도 신도시건설기획실로 불리고 있다.

정확히 말해 신도시건설기획실은 이제 간판만 남아 있다. 정부는 지난 '89년 신도시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업무를 전담할 신도시건설기획실을 건설부 산하에 설치, 신도시건설이 끝날 때까지 限時機構로 운영키로 했다.

실장에는 1급이 임명됐다. 초대실장은 現 건설부 제1차관보인 柳常悅씨. 신도시건설의 기본구상이 이때 마련되어 신도시별 개발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해 3월 신도시건설계획의 중요업무가 완료되어 실행계획만 남겨 놓은 상태에서 신도시건설기획실을 신도시건설기획담당관실(국장급)로 축소개편했다. 따라서 이제

는 정부조직표상으로는 건설부직제상으로는 신도시건설기획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식적인 정부기구가 아니다. 다만 간판만 남아 신도시건설정책이 입안될 때의 정부의 의지를 대변해 주고 있을 뿐이다. 과천 청사 지하후생관이 발소옆에는 '건설부 신도시건설기획실'이라는 큼지막한 문패가 눈길을 끌고 있다.

건설부는 이에 대해 기구만 축소개편되었을 뿐 신도시건설기획관실을 차관직속으로 운영, 기능면에서는 신도



시건설기획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혹시 기구축소를 정책의지의 약화로 이해하면 큰 오산이라는 지적이다.

신도시건설과 관련, 골치아픈 문제는 거의 대부분 해결됐다. 도시계획·학교시설·교통시설·상하수도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확정됐고, 용지보상도 완료됐다. 이제는 정해진 계획에 맞추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면 된다.

국장급인 신도시건설기획관에는 건설부의 인사이동으로 徐主煥 駐사우디대사관 건설관이 내정된 상태에서 미처 부임하지 않아 4월내내 공석이나

마찬가지였다. 신도시건설기획관 밑에는 金錫周 기획담당관 孫鶴來 택지담당관 崔容默 건축담당관 李秉憲 시설담당관 등 4명의 담당관이 있다.

통상 신도시건설기획실로 통하는 이곳은 주택 29만 4천가구를 짓고 있는 정부기구로 이해되고 있지만, 그러나 단순한 주택건설이 주임무가 아니라는 것은 기구의 이름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신도시건설기획실의 주임무는 5개의 도시를 건설하는 일이다. 도시건설이라는 차원으로 시야를 넓히면 신도시건설 기획실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짐작해 볼 수 있다.

담당관별 주요업무를 간추리면, 우선 기획담당관은 기본계획의 점검이나 주택공급(분양) 등에 대한 정책의 집행을 맡고 있다. 택지담당관은 단지 조성, 택지보상 등 신도시건설과 관련된 토지문제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건축담당관은 도시설계에서부터 건물배치, 조경 등에 이르기까지 지상건물 관계를 전담하고 있다. 또 시설담당관은 상하수도·지역난방·통신설비 등 주거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스트럭처의 건설을 담당하고 있다.

신도시건설정책은 홍보가 너무 잘된 덕분에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사람이 너무 많다. 건설부장관이 매일매일 업무추진실적을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에서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또 신도시 열기를 반영, 일반 국민들의 감시도 대단하다. 언론매체에 신도시 관련기사가 조금이라도 게재되면 즉각즉각 반응이 온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공사간에 큰 일을 하다 보면 조그마한 차질이나 실수가 생기는 게 당연한 일인데도 신도시건



설에 대해서만은 모든 사람들이 완벽을 요구하는 것 같다”며 “신도시건설과 관련해 조그마한 차질이라도 생길라치면 이것을 신도시건설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대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또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적 감사가 철저하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나 너무 지나쳐도 곤란하다”고 시중의 신도시 열기를 겨냥했다.

음지(지하)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심정을 과연 누가 알아 주겠느냐고 푸념하는 직원도 있었지만 사명감이 어지간하지 않고서는 업무추진이 어려우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신도시건설계획은 지금까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89년 11월 분당시범단지주택 4,030가구를 최초 분양한 이래 지난해 11월까지 총 9차에 걸쳐 8만 8,400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됐다. 금년에도 연간 8만 7,300가구의 아파트를 분양기로 확정해 놓고 있다. 특히 오는 9월경에는 분당 시범단지의 입주가 계획되어

“
신도시건설기획실의
주임무는 5개의 도시를
건설하는 일이다.
도시건설이라는 차원으로
시야를 넓히면
신도시건설기획실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짐작해 볼 수 있다.
”

있다.

문제는 도시기반시설이 과연 제대로 갖추어지느냐 이다. 건설부 등 정부당국에서는 ‘호연장담’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신도시건설기획실은 이 같은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때에 따라서는 정권의 운명까지도 걸어야 할 신도시 건설정책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추진할 ‘바보’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다. 한마디로 코멘트할 가치조차 없다고 단언했다.

“신도시 건설정책은 이미 주택정책 차원을 떠나 6共 경제정책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신도시가 對국민 약속대로 건설되지 않고 차질이 생길 경우를 상상해 보세요. 정부의 신뢰성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두고보십시오. 6공정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신도시건설만은 제대로 해낼 것입니다.”

정부는 5개의 신도시를 지역적 특성과 도시규모 등을 감안, 저마다 독특한 도시기능을 갖는 ‘기능타운’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도시기능을 달리할 뿐 정책추진상의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수용인구 38만명으로 신도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분당에는 정보산업과 공공기관·연구기관 등을 유치, 두뇌집약적 첨단정보산업도시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또 일산은 평화와 통일을 상징하는 ‘平和市’의 배후도시로 개발기로 하고 호수공원을 동반한 전형적인 전원도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산에는 예술·문화·관광·외교 등과 관련된 기관을 적극 유치한다는 것이다. 일산의 수용인구는 28만명으로 분당보다 10만명 적다.

평촌·산본·중동 등 3개 신도시는 수용인구 17만명의 비교적 소규모이지만 수도 서울과 인천·안양·부천 등의 보조도시로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신도시건설정책은 건설부만의 노력이나 힘만으로는 추진될 수가 없다. 대규모 도시를 인위적으로 만드는만큼 범정부차원의 공조체제유지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건설부는 총괄사무부처이고, 신도시건설기획실은 실무총책 정도

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다.

따라서 건설부와 신도시건설기획실은 관계기관합동회의를 정례화시켜 놓고서 부처간의 협조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특별한 사안이 생기면 임시회의도 소집한다. 한달에 한번꼴로 열리는 건설부장관 주재 관계부처회의에는 경제기획원·내무·재무·교육·체신·동자·철도청·서울시·경기도 등의 부기관장이 참석한다. 또 건설부 제1차관보 주재의 관계부처국장급회의와 민관합동대책반회의도 월 1회 이상으로 정례화되어 있다.

집만 지어 놓았다 해서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아래에 관계부처별 소관업무를 요약해 놓은 것을 보면 신도시건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거꾸로 얘기하면 관계부처의 협조 없이는 신도시건설 자체가 불가능하다.

◇ 경제기획원 : 학교·경찰서 등 공공시설 유치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예산확보와 지원

◇ 통일원 : 통일관련부서의 일산이전 계획수립 및 지원

◇ 총무처 :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

◇ 교육부 : 입주시기에 학교가 개교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시설의 건설계획 수립 및 소요예산확보 지원

◇ 보사부 :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위한 병원시설의 조기착공지도와 보건소의 적기 개소

◇ 내무부 : 동사무소·파출소·소방서 등의 행정기관이 주민입주와 동시에 개소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또 행정구역 및 도시명칭의 조정·확정



수용인구 38만명으로 신도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분당에는 정보산업과 공공기관·연구기관 등을 유치, 두뇌집약적 첨단정보산업도시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사진은 분당 신도시 건설현장.

◇ 체신부 : 우체국 등 통신시설 확보

◇ 교통부(철도청) : 분당·일산·과천선 전철사업의 계획기간내 건설

◇ 법무부 : 등기소 등 사법 행정기관 설립

◇ 동자부 : 지역난방시설 도입에 따른 협조지원

◇ 서울시 :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양재~수서) 및 일부 전철사업비(수서~왕십리) 분담

◇ 경기도 : 경기도 관할구역내 신도시관련 도로사업 추진

이처럼 신도시건설사업은 방대하다. 신도시건설기획실에서는 최근의 인력난이나 건자재난의 주범이 마치 신도시건설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대해 못마땅해 하고 있다. 현재는 일부인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물량의 건자재나 인력이 투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사진척도는 전체적으로 7%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한다. 전체 신도시 아파트 가운데 33%가 분양되었다 하여 공사진척도를 33%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인력난이나 건자재난의 주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하는데 이것이 잘못 인식되어 신도시가 주범으로 몰리면 신도시 건설 자체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도시건설정책이 모두 화려한 것은 아니다. 그 이면에는 인간적 고뇌의 상처가 수북이 쌓여 있다. 대표적인 예가 택지수용과 관련한 현지주민의 저항이다. 일부 주민의 경우 금전적 탐욕에 눈이 멀어 비이성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했지만,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생활터전을 송두리째 포기해야 하는 그들의 고통을 어찌 모르랴.

‘일산농민 또 자살’이라는 신문사회면의 제목만큼 격무에 시달리는 신도시건설 관계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없다.

개발정책의 빛과 그림자를 운명적으로 동시에 체험해야 하는 실무자들은 ‘차질없는 정책추진’만이 넓게 보아 자살농민의 한을 풀어주는 일이 아니며 자위한다.

“두고보세요. 잘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 찬 목소리로 작별인사를 했다. 남관

객원기자 이백만 (서울경제신문 기자)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정책기조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별대책을 수립했는데,

- ①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고 ② 투자자원을 **비인플레이적** 방법으로 조달하며
- ③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체계 및 **분업화**를 촉진하고
- ④ 정부·민간의 역할분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경제의 산업발전단계는 대개 농업중심의 전통사회에서 노동집약적 경공업중심의 1차 수입대체와 수출확대기를 거쳐 자본·기술집약적 중공업중심의 2차 수입대체 및 수출확대기로 이행된 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대되는 후기산업사회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30여년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줄곧 제조업이 전체 성장을 주도하고 그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왔으나 '89년 이후 제조업 성장률이 전체경제성장률을 하회하면서 제조업의 비중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제조업의 부진은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와 경제규모에 비추어 볼 때 미국·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후기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기술혁신의 부진과 제조업의 경영여건의 악화로 인한 정상적 산업화과정에서의 이탈로 보아야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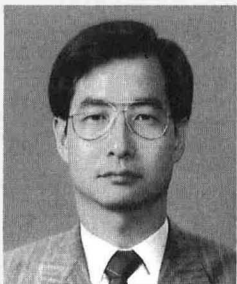
것이다.

왜냐하면 제조업이 호조를 보였던 '88년에는 우리의 총 국내생산 중 제조업 비중(불변가격 기준)은 34.3%로 대만의 38.1%에 비해서 낮은 수준에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80년대에도 기술혁신에 바탕을 둔 첨단산업의 확충과 재래산업과 첨단산업의 효율적 접목을 통한 재래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제조업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그 비중이 34%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세계 제1의 채권국의 위치를 확보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중요성 및 역할

제조업은 우리처럼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국내시장이 협소한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선 제조업이 발전해야 하고, 제조업을 지원하는 정보·통신·유통산업 등 제조업 보완적 서비스업이 발전하면서 생산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이를 소비하는 관광·유흥업 등의 서비스업이 상호의존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제조업이 발전하지 못하면 제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이 창출한 잉여가치를 소비하는 서비스업도



한덕수
상공부 산업정책국장

장기적으로 계속 발전할 수 없다. 세계 금융의 중심이 18세기 산업혁명의 중심이었던 영국에서 19세기, 20세기에는 미국으로 옮겨 갔고 20세기 후반부터 일본의 국제금융에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현상은 경제발전이 제조업의 발전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제조업은 한 나라의 발전이 지속성을 갖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국제수지의 안정을 이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농업이나 서비스업의 발전을 통하여 국제수지를 방어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제조업발전을 통한 국제수지의 적절할 흑자기조 유지야말로 장기적 안정성장을 이루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 하겠다. 이렇게 보면 제조업은 성장의 機關車요, 서비스업 등 기타산업은 경제발전의 貨車라 하겠다.

제조업발전의 대내외 여건

경제성장의 기관차인 제조업의 발전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낙관을 불허하는 상황에 있다.

국제화가 급속히 추진되어 국경은 경제에 관한 한 그 의미를 상실한 단계에 와 있고, 교역·투자·생산·판매에 있어서의 세계화의 진전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구매·생산·판매를 가능케 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기업은 과거처럼 국경에 의한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전 세계의 모든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고 그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생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치의 오차도 조그만 비효율도 이익의 감소차원이 아니라 존립기반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국제화 추세에 부응한 경제주체의 대응미비와 능력부족으로 인한 제조업의 경쟁력약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제조업 취업자

수는 최근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감소 추세에 있으며 수익률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생산성향상을 초과하는 임금의 상승은, 기술력의 제고와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여건에서 국제경쟁력 약화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자금공급측면에서는 제조업부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고 특히 제조업에 대한 예금은행대출비중도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기계·전자·자동차분야와 같은 우리의 유망·주력산업은
조립산업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특정기업 어느 하나가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할 수는 없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特화된 생산체제를 갖추으로써
전문적 생산업체로 육성되어야 한다.**

기술력의 향상 노력은 산업기술수준의 향상과 직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인력 공급도 산업의 변화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에 필수적인 입지공급은 각종 규제와 재원의 부족으로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정부의 경제운용방식도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협조와 경쟁력제고 노력을 촉발시키기에는 미진한 수준에 있다.

경쟁력강화 대책의 특징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했는데, 이번 대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국제화추세에 부응

첫째, 국제화추세에 부응하는 정책을 선택하였다. 제조업경쟁력강화에 설사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통상 마찰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정책, 예를

들면 새로운 수입제한제도의 도입이나 특혜금리의 적용 등의 정책은 채택하지 않았다. 제조업의 경쟁력강화대책으로는 최근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허용되는 기술개발지원·교육·입지·도로확충 등 사회적 접자본의 확충, 지역균형발전정책 등에 국한기로 하였다.

또한 가격보조적 수출지원시책을 지양하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근원적으로 강화하여 그 결과로 수출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하는 근본대책을 수립하였다.

투자자원, 非인플레이티브방법으로 조달 둘째,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제안정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조업경쟁력확보를 위한 투자자원 조달에 있어서 비인플레이티브 방법을 고수하였다. 새로운 대출재원은 추가예금을 통하여 조달토록 하였으며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도 歲計剩餘金の 활용등으로 세입내 세출

원칙을 준수하여 재정부문에서 인플레이 자극효과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 및 분업화 촉진

셋째, 제조업의 경쟁력강화를 이제까지의 산업구조적 정책차원 일변도에서 산업조직정책을 포함시키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다.

대기업군에 대하여는 여신관리제도를 주력기업 중심으로 완화함으로써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주력부문에 집중투자하여 '투자의 심화'를 이루도록 유도하였다. 이는 대기업군의 비관련 다각화의 추진에 따른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세계 초일류기업과 경쟁해야만 하는 여건변화에 기업이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정부가 誘因과 불이익의 체계를 확립하여 대기업군의 전문화를 유도하는 정책은 기업의 자율적인 변신노력과 상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였다. 즉, 주력기업의 선정은 대기업군이 주거래은행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주력기업의 변경을 허용하며 관련다각화는 가능토록 하였다.

이러한 대기업군의 전문화는 여신관리상의 유인만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는 없고 경제전반에 걸친 자율·개방·국제화의 실현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민간자율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방향으로 민간의 노력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정부의 유인을 통한 역할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대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중 국민적 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을 만큼 주식소유가 분산된 기업은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토록 하였다. 주식소유가 분산된 기업은 개별적으로는 독립성을 강하게 보유하고 있고 각기업별 전문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경쟁력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업어음 재할비율 인상기간 연장 등 지원조치를 강화하였는데, 이는 대기업의 전문화 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분업적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제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기계·전자·자동차분야와 같은 우리의 유망·주력산업은 조립산업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특정기업 어느 하나가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할 수는 없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特화된 생산체제를 갖추므로써 전문적 생산업체로 육성되어야 한다.

기계·전자·자동차분야의 중소기업 중 70~80%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계열화 관계를 가지고 있어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이 없이는 최종제품의 경쟁력확보가 어렵게 된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아직 자금·기술·정보면에서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개발·제품개발능력은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조립제품을 경쟁력 있게 제조하기 위하여 母企業은 설계생산, 품질관리

등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도 부담을 안고 있고 이것이 모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서는 중소기업에 보다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대기업은 기업 자신의 노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쪽에 정책의 역점을 두고 직접적인 자금, 기술지원 등은 중소기업에 집중되도록 하였다.

분야별 정부·민간역할 분담

넷째, 정부와 민간과의 새로운 협력 방식의 창출이 향후 제조업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것으로 예상되어 분야별로 정부와 민간간의 역할을 분담토록 하였다.

생산현장에서 정부는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서비스분야에 대한 자금흐름 등을 차단하고 불로소득의 원천을 봉쇄해 나가는 한편 민간기업은 근로자의 역할인정, 인센티브 급여체제의 확충 등을 기해 나가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노사분규 등에 있어서는 엄정한 규칙을 정립하여 강력히 집행해 나가고 이러한 틀 내에서 민간기업은 근로자와 노사관계를 勞·政關係가 아닌 문자 그대로의 勞·使關係로 이끌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부문에 있어서도 민간과 정부의 협력이 요구된다. 정부는 대학의 증원과 교육내용에 있어 민간기업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민간기업의 장비의 증여, 투자비의 일부 분담 등을 통하여 산학연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투자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도 정부·민간의 합심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민간이 산업의 경쟁력 및 수급전망을 좀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민간·학계·전문가·정부로 이루어지는 분야별 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정보의 공유를 통한 개별기업의 투자결정을 합리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민간은 투자결정에 대한 책임을 저야 하는 주체라는 인식 위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우리경제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은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부응하여 우리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발전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증진, 민족통일의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이라 하겠다.

이제까지의 제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보완하는 성격의 대책이면서도 국제화, 경제의 안정,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정부·민간간 새로운 협력방식의 창출을 근간으로 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인 것이다.

이 모든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된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도약의 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라경제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추진상황

국내·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제조업은 일종의 전환기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 상황을 여하히 극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느냐가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력을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정부는 우리 제조업이 당면하고 있는 성장에요인을 재점검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산업기반을 튼튼히 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술개발·자금·인력·공업용지·사회간접시설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지난 3월 14일 수립하였다.

금번의 종합대책은 올해 경제운용의 최우선 목표인 ‘제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것이다.

제조업의 경쟁력실태와 정책방향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는 제조업의 성장활력을 회복시켜 새로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난 30년간 우리 경제는 제조업이 성장과 고용을 주도하여 왔고, 그 결과 가전·자동차·섬유 등 주력산업은 세계적인

생산·수출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이들 산업의 경쟁력이 한계에 부딪쳐 제조업의 성장기여율은 '89년 19% 수준으로 '86~'88년간의 47%에 비해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90년에는 제조업의 성장이 일부 회복되었다고 하나, 경쟁력기반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저생산성과 인력난·자금난·공장용지 등 사회간접시설 부족 등 제조업을 둘러싼 기업환경이 아직도 만족할 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고, 특히 기술개발능력이 취약하여 경쟁력향상의 가장 큰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외적으로는 기술력을 중심으로 한 국제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전자·정보분야의 기술혁신으로 생산자동화가 가속화되고 생산성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어 모든 산업에 걸쳐 고부가가치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국제화와 개방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 아니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세계시장의 통합진전으로 우리 제조업은 ‘임금’으로부터 ‘기술’을 원천으로 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도록 구조를 전환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재길
상공부 산업정책과장

경쟁력 확보가 경제성장의 관건

이같이 국제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데 반해 대내적으로는 제조업의 경쟁력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기술개발이 강조되어 왔으나 공공부문의 기술개발투자도 산업수요에 연계되지 못한 점이 많았으며, 기업도 해외기술의 도입·모방에 주력하여 자체기술능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자금배분면에서도 최근 2~3년간 농업·주택 등 비제조업 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제조업체는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산업인력의 공급 또한 수요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여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질적·양적으로 크게 부족한 상태에 있으며 사회간접자본 애로도 기업의 물류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의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제조업은 일종의 전환기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 상황을 여하히 극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느냐가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력을 좌우하는 관건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번의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은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지난해 4·4 경제활성화종합대책 이후 추진되어 온 경쟁력향상대책을 보완하고 업종별로 구체적인 경쟁력 애로요인을 타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① 기업의 핵심기술개발 지원 ② 국산기계구입자금의 공급

확대 ③ 기술 및 기능인력의 공급확대 ④ 입지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⑤ 불필요한 행정규제 완화 등이다.

경쟁력 강화대책

산업기술개발 촉진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수준을 보면 핵심기술인 설계기술, 가공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60~70% 수준에 불과한 반면에 조립기술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조립기술만으로는 새로운 상품개발이 어렵고 한 분야의 기술축적이 다른 분야에 파급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금상승을 극복할 수 있는 생산성향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이 기술수준이 낮기 때문에 우리 산업의 해외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준에 있으며 기술도입에 따른 사용료는 '89년 연구개발비 대비 21% 수준으로 일본의 6%, 미국의 1% 수준과 비교가 되지 않고 있다. 이는 기업과 정부가 지금까지 기술개발투자에 소홀했던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89년 2.14%로 일본의 3.1%, 미국의 4.7%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관련예산의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나라는 2.3%인 데 반해 일본은 3.5%, 미국은 5.6%에 달하여 우리나라의 기술개발투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선진국은 핵심기술의 이전을 더욱 기피하고 기술보호장벽을 더욱 높이 쌓아 올리고 있어 앞으로 중요한 기술의 도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의 확보가 가능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핵심부품 및 생산기반기술의 획기적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내외 기술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는데 대응하여 이번에 정부는 제조업분야의 경쟁력 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919개 생산기술을 '95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키로 하고 구체적인 추진대책을 마련하였다. 이 과제들은 지난해 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여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된 과제로서 그중 902개 과제는 중소기업의 공통애로요소기술이며 전자부품·반도체·가전제품 등 27개 부문이 망라되어 있다. 이 생산기술들을 '95년까지 개발완료하기 위하여 5년간 총 1조 5,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매년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3,100억원씩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금년중 財政, 한국통신 및 한전의 기술개발자금, 장기저리융자인 산업은행자금으로 총 1,5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공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생산기술개발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생산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지원과 함께 기술개발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하였다. 외국기업 또는 해외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촉진시키고 우리 기업의 해외연구



소 설립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금송출입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해외연구활동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의 핵심부품개발을 위하여 민간공동으로 '자동차부품 종합기술연구소' 및 '전자부품기술연구소'를 설립토록 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책도 강구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와 한·소기술협력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우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보완하여 1~2년 이내에 약 138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여 실용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소련의 첨단기술 중 단기간 내 실용화가 가능한 38개 기술과제를 政府出捐研究機關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키로 하였다.

제조업에의 설비자금 공급확대

첫째, 제조업의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고 국산기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우선 국산기계구입자금이 수요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원조건이 불리한 점을 개선하여 국산기계구입 자금을 '90년 2조 7천억원 수준에서 3조 8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조건도 대폭 개선하여 자금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이 국산기계구입에 대한 신용보증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국산기계구입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둘째, 해외증권발행을 통한 설비자금 조달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발행자 요건을 개선하고, 발행용도를 확대하였다. 현재 해외증권의 발행은 첨단시설제 구입, 외채 조기상환과 해외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에만 활용되어 왔으나 금번 대책에서는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시설제 구입자금 조달을 위해서도 해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여신관리제도를 부분적으로

완화하여 현행 제도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외국의 우수기업과 경쟁해 나갈 수 있도록 제조업경쟁력강화를 지원하고 업종전문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여신관리를 완화해 나가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여신한도관리대상은 현행대로 30대 계열을 유지하되 계열별로 3개의 주력업체를 선정하고 주력업체의 대출금은 여신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며 주력업체에 대하여는 자금관리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상어업 할인기간을 '91년 9월 말까지 연장하였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시 기업주 및 배우자의 주택에 대하여 제3차 담보설정을 완화하였다.

산업인력의 공급확대

현재 중소기업의 기능인력은 약 30만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문대 이상의 기술인력도 현재의 인력공급체제가 유지될 경우 연간 4~5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이공계대학(원) 및 전문대 정원을 대폭 확충하고 공고와 직업훈련 배출규모도 크게 늘려나갈 방침이다.

첫째, 이공계대학 정원을 '95년까지 첨단관련학과 1만 2천명을 포함하여 총 1만 6천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95년에는 이공계대학 졸업생 배출규모가 현재의 8만 4천명에서 10만명으로 연차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아울러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장기적 대처방안으로 대학설립을 희망하는 산업체의 특수목적대학 설립을 적극 권장하고 지방국립대의 특성화 공과대학을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하여 지방산업의 인력수요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대학원 위주로 자연계 대학원 정원을 '95년까지 1만명을 증원함으로써(매년 2,500명 규모) 연간 석·박사 배출규모를 현재 1만 7천명에서 '95년까지 2만 2천명으로 확충하며 공업계 전문대학 정원을 '95년까지 3만 6천명(매년 9천명 수준) 증원할 계획이다.

둘째, 기능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고를 중심으로 한 실업계고교의 수용능력을 대폭 확충키로 하였다. 금년부터 '95년까지 실업고생 75만명을 100만명으로, 그중 공고생은 21만명에서 45만명으로 대폭 늘려 인문고와 실업고 졸업생 비율을 50 : 50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셋째, 직업훈련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업종별 전문직업훈련원을 '91년도에 8개소, '92년도에 2개소를 건립 착수하여 업종별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해 나갈 것이며, 대상업종은 인력이 크게 부족한 정보처리·섬유·기계·금형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단기적인 인력수급 완화를 위하여 유휴인력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고령자가 취업가능한 분야의 공무원채용을 확대하여 일반기업체로의 파급을 유도하고 기혼여성·고령자 등의 시간제 취업확산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시간제근로자 고용지침'

을 제정·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공장용지 및 기반시설 확충

현재 전국의 공장용지는 9,600만평이며 2001년까지 연평균 7.5%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공장용지의 추가수요는 3,030만평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공장용지 수요의 약 50%가 기업환경이 유리한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어 공업입지 수급상에 애로가 있는 실정이다.

현재 업종별로 파악된 공장용지 수요는 공단으로 지정된 285만평을 포함하여 총 925만평 규모로 각 업종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공단개발을 추진키로 하였다.

우선 금년 중에는 대불공단 등 총 827만평의 공단을 분양하는데 이중 370만평은 공공부문에서 조성 공급하고 나머지 457만평은 실수요기업이 조성토록 할 계획으로 있어, 이와 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때 총량면에서 공장용지수급상의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공장용지 공급이 공영개발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이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입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수요자인 민간기업이 공업단지 밖에서도 직접 공장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4만 5천평까지는 시·도지사가 토지용도 변경을 허용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입지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금년 중 아파트형 공장 15개동과 10만평 규모의 임대공장을 건설키로 하였으며, 주물 등 공해업종

의 이전집단화를 추진키로 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에 '중소기업 공장입지 공급 사업단'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입지수요조사와 전문단지의 조성 등을 전담토록 할 계획이며, 대한상공회의소에도 '공업입지센터'를 설치하여 입지정보를 종합적으로 보급하고 시·군에도 공장설립민원실을 설치하여 기업의 공장설립절차를 일괄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세제지원과 기업부담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이러한 경쟁기반 확충과 함께 기업의 공통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법령을 개선키로 하였다. 우선 해외시장 개척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특히 자가상표에 의한 수출이 필요한 전자교환기·가전제품·신발 등에 대하여는 개척준비금 손금산입이 추가로 인정(외화수입금액의 1/100 → 2/100)되는 대상에 포함토록 금년 상반기중 租稅減免法 施行令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장비를 국산화하기 위하여 반도체장비와 그 부품제조업을 관세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섬유기계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13%로 되어 있는 섬유기계부품의 관세율을 완제품 관세율(10%)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할 방침으로 금년 상반기 중 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

- 현황과 과제 -

개방화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은 이제 내·외 시장을 불문하고 국내기업과의 경쟁을 넘어서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개방화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국제화는 중소기업의 생존, 그 자체를 위해 선택적이거나 필수적 전략일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의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며, 시장경제체제라면 시대와 나라를 불문하고 경제정책의 한 장(章)을 차지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소위 자본주의적 운동양식에 의한 '대자본'과 '소자본'의 양립, 그리고 양자간의 관계(흔히 '의존과 대립' 또는 '협력과 경쟁'으로 표현되는)가 갖는 時·空의 보편성 때문이다.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정책

그렇긴 하지만 중소기업의 문제는 중소기업의 숫자만큼이나 많고 복잡다기한 것 또한 사실이다. 중소기업의 문제는 한 나라의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그 성격과 내용이 다르며, 더욱이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고유성에 따라 판이하다는 데서 시대적·공간적 특수성을 지닌다.

중소기업육성, 왜 해야 하는가?

중소기업육성의 논리를 얘기할 때 우리는 경제력집중, 시장의 실패와 비효율 등 시장경제의 역기능과 관련하여 두 가지로 대별되는 논리, 즉 정치·사회적 측면에서의 '보호의 논리'와 경제논리에 보다 충실한 '필요성의 논리'를 흔히 인용한다. 결국 역사적 배경의 산물로서 이 두 가지 다른 논리의 배합 정도가 각국의 중소기업정책의 '특수성'을 결정짓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시대부터 고도성장기에 이르기까지 형성된 자본의 성격(외생對 내생) 또는 성장전략 여하(대외지향對 대내지향)에 따라 중소기업-대기업의 양립과 각각의 속성을 양분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논리라고 본다. 그러나 고도성장을 이룩한 우리 경제의 성장 전략을 특징짓는 '대외지향적 불균형성장'이-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오늘날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 중 하나인 '중소기업 문제'의 근원인 것은 부정하기 어려우며, 과거의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도 보상적 대응의 차원에서 '약자보호'의 논리적 성격이 강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 특히 '80년대 후반 이래 대량생산과 대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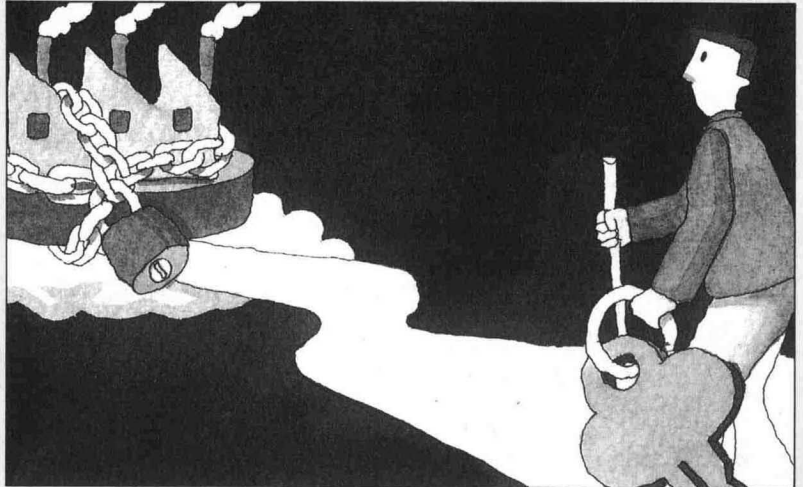
한영수
상공부 중소기업정책과장

수출을 위주로 하는 대기업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중소기업은 이제 '약자니까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필요하니까 육성해야 한다'라는 논리가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의 논리'는 바로 중소기업의 경제·사회적 역할에 귀착된다. 즉, 중소기업은 산업의 근간으로서 산업의 연관도를 높이며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고 경기변동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제조업경쟁력강화를 주도할 뿐 아니라, 창업기회의 제공과 고용의 창출로 사회적 안정과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하는 등 '90년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정책의 역할과 딜레마

중소기업정책도 기본적으로 산업정책의 틀 속에서 그 역할과 기능이 고찰되어야 한다. 프랑스의 산업경제학자인 Y.Morvan 같은 이는 산업정책을 ① 간접수단 ② 수평적 직접수단 ③ 수직적(특정적) 직접수단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정책은 이들 중 수평적 직접수단(기능별대책 및 산업조직정책)과 특정적(업종, 계층) 직접수단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산업연구원이 분류한('85.12) 산업정책의 유형을 준용한다면, 중소기업정책의 기능을 ① 기반조성(생산요소, 인프라) ② 산업조직(사업조정, 계열화, 전문화) ③ 구조조정(기술, 생산성, 업종고도화)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다.



일러스트 노희성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이러한 일반적 인 속성(직접적 기능과 광범위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정책은 몇 가지 고유한 애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과 구분되는 '특별한 지원'을 해야 하며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 그리고 각종 시책에 대한 당연시 또는 무감각이 업계에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정책목표간의 우선순위 문제이다. 통화관리·대기업의 업종진 문화와 여신관리완화·시장개방확대·수도권 인구분산 등 모든 정책목표가 '중소기업만을 위한' 시책의 실시를 어렵게 한다.

셋째, 정책의 일관성과 논리성 유지가 어렵다. 경제논리와 함께 사회적 배려를, 구조적 접근과 함께 상황적 대응을, '냉철한 논리'보다는 '따뜻한 애정'을 아직은 우리 업계가 요구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현황과 과제

그동안의 적극적인 중소기업육성시책에 힘입어 우리나라 전 제조업체의 99.3%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은 근래에 크게 높아졌다. '78~'88(10년)간의 중소기업 비중변화를 보면, 생산에서는 33.9%에서 40.7%로, 고용은 51.5%에서 61.1%로, 부가가치는 36.8%에서 44.2%로 크게 높아졌다. 또한 총수출 중 중소기업비중도 최근 수년간 계속 높아져 왔으며('86 : 35.2%→'90 : 45.3%), 중화학 제품 수출비중도 확대되고 있다('89 : 31.8%→'90 : 33.9%). 특히 '89년 3월 '중소기업 구조조정법(약칭)' 제정 이래 정부는 구조조정사업지원, 특별설비자금지원, 신용보증제도 및 상업어음할인의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한 결과 예금은행의 총 대출잔액 중 중소기업대출 비중도 크게 높아졌다('89년 43.0%→'90년 54.5%).

그러나 전체 중소기업 중 종업원 20인 미만인 소기업이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기업의 절반이 자산규모 1억원 미만의 영세기업인 우리나라 중소기업구조의 내재적 취약성, 대기업과의 관계와 시장개방에서 파생되는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기술력과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투자 비율은 0.2% 미만(대기업 : 2% 수준)인데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애로·인력부족·현실안주의 기업행태 등에 기인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은 대기업의 55% 수준에 불과하며 단위노동비용은 오히려 대기업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고임금시대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

둘째, 중소기업의 전문화를 촉진해야 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중소기업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대립·경쟁의식이 강하고, '좁고 깊게' 보다는 '넓고 얇게' 접근하는 성향이 강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며 수급기업 비율도 낮다.

셋째로, 국제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 중소기업은 자금·정보·마케팅 능력이 부족하고 국제적 감각의 결핍으로 총 업체수의 99%인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45%, 해외투자비중은 13%에 불과하다.

넷째는, 경영기반의 취약성을 해결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아직도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아서 자금애로가 상존하고 있으며 공장용지의 절대부족과 각종규

제(특히 수도권)에 따른 입지난, 그리고 근로조건의 열악으로 인한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하고 있는바, 이러한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안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제7차계획과 중소기업정책방향

제7차5개년계획기간 중 정부는 기술 집약형 창업의 촉진(매년 5천개 정도의 창업 전망)과 기존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투자 비율(현재 0.2%)을 1% 수준으로 끌어올려 전체 제조업의 부가가치 중 중소기업의 비중(현재 45%)을 51%로, 총 수출 중 비중(현재 45%)도 5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 우루과이라운드의 종료와 관련하여 개방화·국제화에 대응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비관세 장벽의 철폐와 관세인하, 지적소유권보호의 강화, 무역관련투자 및 도·소매업의 개방 등도 문제지만, 특히 수출·산업관련 보조금의 철폐는 중소기업정책의 일대 전환을 요한다. 현행 중소기업시책 중 수출 및 국산화와 관련된 각종 시책을 보다 중립적이고 기능적인 시책으로 전환해 나가되 유예기간을 활용한 집중지원도 필요하다.

둘째, 기업활동의 자율화와 관련하여 강제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보호(고유업 종제도 등) 또는 우대시책(우선구매제도 등)은 자유경쟁을 통해 자생력을

배양하는 '유도시책'으로 점차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인력·입지 등 생산요소의 제약 및 요소가격의 상승현상이 심화되고 산업의 서비스화가 더욱 진전될 것이므로 제조업으로 생산요소 및 기업활동을 유인하는 적극적 시책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지방재정을 뒷받침할 중소기업을 육성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소기업시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책의 규모별 차등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구조조정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법체계(현행 : '94년까지의 限時法)를 정비하고, 시책실시-의견수렴-시책개선의 피드백(feed-back)을 통해 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분야별 주요시책

기술개발 및 생산자동화 추진

중소기업형 생산기술과제 902개를 '95년까지 정부·민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우선 '91년 중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등 1,550억원을 범부처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구조조정자금 등을 지원하며 매년 200개의 '기술선진화기업'을 선정, 집중 지원해 나갈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생산자동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구조조정자금, 생산자동화

자금(중소기업은행)등을 지원하고, 자동화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5%), 관세감면(60%) 등 세제지원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기술집약형 창업확대 및 사업전환촉진

창업투자회사·조합을 통한 무담보 지원('91년 : 2,200억원)을 확대하고 구조조정기금 및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확대하며, '집단창업입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입지공급을 원활히 하는 한편,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91년 중 1~2개)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업체가 업종·품목을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 사업을 전환할 때는 구조조정기금 등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대기업과의 협력 강화 및 중소기업자간 공동협력 확대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이양('90 : 1,120개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대기업의 업종전문화와 연결·추진하고 대기업-중기업-소기업간 重層的 계열화와 공동협력사업의 확대를 적극 유도할 것이다. 중소기업 고유업종(현재 237개) 및 사업조정제도는 엄격히 운영되되 해제예시의 검토 등 개방화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해방지시설의 공동설치 등 협동화사업, 산업기술연구조합의 결성을 통한 공동기술의 개발, 공동구판사업 등 중소기업자간 공동협력사업이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돕기 위해 소액·소량수출에 유리하도록 무역·외환제도를 개편해 나가고,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 구조조정기금 중 국제화자금 및 중소기업전담은행의 자금으로 수출마케팅과 해외투자를 지원토록 할 것이다. 또한 KOTRA 및 금융기관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을 유망중소기업으로 우선 발굴·지원토록 하고 '유망수출상품 세계일류화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경영애로의 완화

중소기업의 기술·기능인력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 이공계 고교·대학의 정원을 대폭 증원하고 직업훈련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도를 위해 병역특례우대, 근로자주택의 우선 공급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입지난 완화를 위해서는 우선 '91년도의 공단개발예정지 925만평의 35%(325만평)를 중소기업 전용으로 개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에 '중소기업입지지원사업단'을 설치·운영하여 협동화사업과 중소기업형 전문단지의 조성·공급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자금면에서는 '91년 중 국산기계구입자금 1조 9천억원, 구조조정자금 6,500억원 등을 포함, 제1·2금융권을 통해 총 18조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상업어음에 대한 한은재할(70%)의 '91년 9월까지 유지, 신용대출 및 신용보증의 계속적 확충, 제3자담보설

정의 선별적 허용 등을 통해 운전자금을 원활히 경감시켜 나갈 것이다.

소기업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

이를 위해 국민은행 등의 소기업자금지원의 확대, 신용보증절차의 간소화, 구조조정기금 지원 및 유망중소기업 발굴시 우대방안 강구,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확충과 특화산업의 육성, 지방중소기업지원기관의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방화와 국제화 서둘러야

개방화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은 이제 내·외 시장을 불문하고 국내기업과의 경쟁을 넘어서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개방화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국제화는 중소기업의 생존, 그 자체를 위해 선택적이라기보다는 필수적 전략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술개발투자가 매출액의 0.2%에도 못 미치는 중소기업에게 아직은 '국제화'보다는 '지방화'가 더 어울릴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R협상결과의 이행과 예정된 국내시장개방(자본시장 등)의 촉박한 일정을 감안할 때 우리 중소기업은 '지방화'와 '국제화'를 동시에 서두를 수밖에 없다. 현재 0.2%인 기술개발투자를 제7차 계획기간 말까지 1.0%로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육성은 정부내 협동과 정책간 조화, 정부·기업의 협력 그리고 관심과 지지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금융·세계상의 중소기업 지원

**금년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한정된 재원이 제조업 부문에 보다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자금흐름을 개선하고, 비제조업부문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성 금융을 억제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 우리 산업의 저변을 확충하고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계 지원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와 같은 시책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되 특히 중소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둬으로써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실적

금융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제도는 과거부터 꾸준히 시행되어 왔으나, 정부는 특히 우리 경제의 부문간 균형 발전 및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88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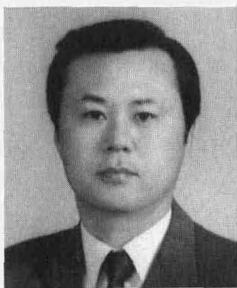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과 기술개발 및 생산성향상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설비자금 및 구조조정자금 등을 확대공급하였다. 또한 무역금융융자단가를 종전 달러당 450원에서 3회에 걸쳐 6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중소수출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다양하게 확충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 비율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요건 완화 및 절차간소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시책에 힘입어 금융지원은 그 규모면에서도 상당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바, '90년 중 예금은행 및 제2금융권 등 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을 증가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당초 계획 14조원을 훨씬 넘어선 17조 9,846억원에 달하여, '89년에 비해 34.6%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예금은행은 지난 해 총대출증가액의 69.3%를 중소기업에 공급함으로써 통화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90년 말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잔액은 70조 2,342억원에 달하여 '89년말에 비하여 34.4%가 늘어났으며 전 금융기관의 총 대출잔액 중 중소기업 대출잔액의 비중도



서승일
재무부 중소기업과장

43.8%로 나타나 해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규모도 계속 늘어나 지난해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실적이 1조 9,896억원(증가액 기준)에 달함으로써 '89년에 비하여 164.8%나 증가하는 대폭적인 신장세를 나타냈다.

세제지원

한편, 세제면에서도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창업·사업진환, 또는 지방이전을 하게 되면 5년간 조세를

감면해 주고, 노후시설개체 등 생산성 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세액을 공제하며,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일반기업보다 우대해 왔다.

또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기술개발·기술훈련·연구시설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준비금을 설정하면 그 금액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세부담을 경감해 주고, 기술개발비·연구요원인건비·위탁훈련비 등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비용

지출액의 10%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주며, 기술·인력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시설·직업훈련시설 등을 구입하면 구입가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주는 등 다양하게 지원해 왔다.

올해의 지원 시책

금융지원

정부는 올해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증가액 기준으로 예금은행을 통하여 7조원, 제2금융권 등을 통하여 11조원 등 18조원 이상이 중소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도에는 한정된 재원이 제조업 부문에 보다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자금 흐름의 개선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비제조업부문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성 금융을 억제하고 제조업 위주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금년중에 추진할 금융지원 시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자금 및 구조조정자금 적극 지원

중소제조업의 경쟁력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중소기업에 대하여 설비자금 및 구조조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이 자동화설비금융 및 구조조정자금 등 설비자금으로

〈표 1〉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증가액 기준, 단위: 억원, %)

	'88		'89		'90	
	중소기업 대출	총대출중 점유비	중소기업 대출	총대출중 점유비	중소기업 대출	총대출중 점유비
예금은행	43,640 (114.5)	76.5	66,054 (51.4)	49.0	83,380 (26.2)	69.3
제2금융권 등	30,777 (14.8)	35.7	67,571 (119.6)	62.2	96,466 (42.8)	44.9
계	74,417 (57.8)	52.0	133,625 (79.6)	54.9	179,846 (34.6)	53.6

*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표 2〉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잔액

(단위: 억원, %)

	'88말	'89말(A)	'90말(B)	비교(B/A)
중소기업 대출잔액 (총대출에 대한 비율)	388,871 (38.0)	522,496 (41.2)	702,342 (43.8)	34.4

〈표 3〉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

(단위: 억원, %)

	'88	'89	'90
신용보증순증 (증가율)	5,572 (16.9)	7,513 (34.8)	19,896 (164.8)
신용보증잔액	33,542	41,055	60,951

금년중 총 8천억원을 공급하고, 국민은행이 총 2,100억원을 공급하는 등 모든 금융기관이 설비자금을 적극 지원하도록 해나갈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년중에 금융자금 4천억원(중소기업은행 2천억원, 국민은행 1천억원, 동남은행 500억원, 대동은행 500억원), 재정자금 2,500억원 등 모두 6,500억원의 구조조정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한다.

한편 국산기계의 수요확충을 위하여, 금년중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장기신용은행·리스 및 국민투자자금 등이 총 3조 8천억원을 국산기계 구입자금으로 우선 공급할 예정인바, 이 중 50% 수준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신용보증도 원활히 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이 국산기계로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 대출·지급보증시 혜택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지급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업주 및 그 배우자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해 6월부터 부동산투기억제책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이 제3자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해 왔으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의 원활화를 위하여 시설자금을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3자 명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

하였다. 특히 금년 4월부터는 중소기업이 운전자금을 대출받거나 지급보증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기업주 및 그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신용보증 지속 확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년 중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2조원으로 하여 '91년말 보증잔액을 8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조업과 기술개발부문에 대하여 보증요건을 완화하고 보증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 금융지원시책 강화

그동안 추진해 온 중소기업 금융지원시책을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되 여건에 맞추어 신축적으로

운용토록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중소기업에 대하여 무역금융지원을 원활히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지원하고 수출산업설비금융지원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등 그동안 추진해 온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시책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시중자금사정 및 금리동향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할인을 확대하는 등 운전자금도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제지원

한편, 세제면에 있어서는 그간의 급속한 임금상승 등으로 인하여 특히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 연말 세제개편시에 중소기업에 보다 많은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금년부터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였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일반법인의 세부담률

(단위 : %)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8천만원 이하	24	1억원 이하	20
8천만원 초과	37.5	1억원 초과	34

〈표 5〉 법인세율인하에 따른 세부담경감액 예시

(단위 : 백만원, %)

과세표준	세 부 담 액		경감액	경감률
	종 전	개 정		
8천만원	19	16	3	16.7
1억원	26	20	6	24.2
2억원	62	54	8	13.5
50억원	1,865	1,686	179	9.6

* 중소기업의 86%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에 해당함.

■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크게 경감

법인세율 중 대부분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을 종전의 24% (방위세 포함)에서 4% 포인트 인하시켜 20%로 낮추어 주는 동시에 그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도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세율인하 효과가 중소기업에 크게 돌아가도록 하였다.

■ 투자세액공제제도 신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공정개선 및 자동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의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하고 이에 추가하여 모든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 시설이 아닌 일반기계장치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투자금액의 5%를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새롭게 마련하였다.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가 그 적용시한이 '91년 말에 종료되더라도 중소기업은 이 제도에 의해 투자세액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투자준비금 비용인정한도 확대

중소기업이 기계장치에 투자할 재원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종전에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15% 범위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았으나 금년부터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20%까지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그 설정한도를 올렸다.

■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높은 공제율 적용

시험연구비 등 기술·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일반기업은 종전대로 그 비용의 10%를 세금에서 공제받게 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금능력·기술개발에 따른 위험부담능력 등 제반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15%를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연구시험용 물품수입시 면세대상 연구기관 범위 확대

종전에는 기업부설연구소나 산업기술 연구조합이 수입하는 경우에만 특별소비세·관세가 면세되었으나 금년부터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연구전담요원 1인만 있어도 해당)가 수입하는 경우에도 면세되도록 함으로써 부설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관세분할납부 대상 확대

'관세분할납부제도'는 기업이 일시에 납부해야 할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여 자금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동안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정부가 대상시설·기계류 물품을 지정 고시하여 관세액의 규모에 따라 3~5년간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왔다.

금년부터는 중소기업체의 시설투자를 촉진하고 생산성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체가 수입하는 국산대체 불가능한 시설재 및 기기에 대하여 관세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모두 관세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이 구조적으로 산업의 저변을 형성하는만큼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력과 경쟁력이 곧 전체산업의 경쟁력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지금까지 마련된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는 한편, 현실여건에 맞도록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무

<표 6> 관세분납기간

관세액	3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분납기간	3년	4년	5년

중소기업의 생산기술개발 촉진방안

중소기업의 기술수준향상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금융·세제·기술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기술력 향상에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선정 이들을 중심으로 지원시책을 집중하여 기술력을 선진국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는 기술혁신에 의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히 산업의 저변인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이를 통한 품질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기술력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

최근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영여건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의 통상압력이 점점 드세어지고 있으며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선진국은 핵심기술에 대한 이전을 점차 기피하고 기술료의 증액요구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등 기술보호주의 추세는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국내시장개방에 따라 외국상품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노동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변화, 배분 욕구증대 등으로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증가율을 웃도는 등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판매난·자금난·인력난으로 고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여러 가지 징표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경제가 환경변화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성취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여도 높아 국가경제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중요한 것은 단지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만은 아니다. 중소기업은 기술혁신의 주요원천이며, 개량이나 모방형은 물론 획기적인 기술혁신에 대한 기여도 또한 대기업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 5개국에서 '53년부터 '73년까지 20년간 시장에 도입된 주요기술혁신들 가운데 약 45%가 중소기업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자료, 1976).

또한 기계·전자·자동차·조선산업 등의 완제품은 그 경쟁력이 수많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부품의 기술수준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점 및 산업의 요소인 기술을 주조·단조·열처리·표면처리·금형·용접 등이라 할 때 이들 업종이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박영기
상공부 지도과장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기술력향상 없이는 세계시장에서의 품질경쟁력 확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기술개발에 대한 인식 부족해

이처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중요하고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개발활동이 매우 취약하고 따라서 기술수준도 아직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국가의 기술수준을, 그것도 중소기업분야의 기술수준을 업종·분야를 고려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일이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기술지도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 기술자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이 선진국을 100으로 볼 때 대체로

60~70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인들 스스로도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의 기술수준이 80이하라고 생각하고 있어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이 낮은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는 중소기업인들이 기술개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또는 인식하고 있더라도 여건상 기술개발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데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기술개발비 투자 줄어들어

우선 기술개발비를 투자하는 기업체 수가 '89년의 경우 전체 중소기업의 10% 내외이며 더구나 이 비율은 '88년의 18.5%에서 격감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우리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여력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도 업체당 평균투자액이 연간 1,700만원 정도로 적은 상태이며,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비 비중도 0.3% 미만으로서 일본 제조업의 경우 평균 3.0%('86년 기준)임을 감안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하겠다.

자체기술기반 취약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추진시 느끼는 애로사항은 우선 현실적으로 자체기술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과 최근 제조업의 인력부족이 심각해지자 생산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크며 따라서 연구개발을 위한 인적자원의 여력이 없다는 점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부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촉진방안도 기업의 이와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 또는 완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일반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방법으로는, 정부에서 특정한 과제를 개발하도록 하면서 그 개발프로젝트 자체를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방법과 과제를 특정하지는 않고 광범위하게 신청받아 선별하고 그 과제에 대하여 일정률 또는 일정금액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법 및 기술개발 제품을 정부기관 등에서 구매하여 주는 방법 등 직접 지원방식과 장기적

〈표 1〉 외국인 기술자들이 본 한국중소기업 기술수준

선진국	설계기술	생산기술	제품개발기술
100	64	67	63

*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88. 5.

〈표 2〉 중소기업인 스스로 평가하는 주생산품의 기술수준(선진국=100)

조립·가공기술	설계기술	도금·용접 등 생산기반기술	품질성능	디자인·포장
72	64	69	79	71

* 자료 : 산기협, 「기업의 기술개발관리실태 및 애로 조사연구」, '90. 5.

〈표 3〉 연도별 기술개발비 지출업체

	'85	'86	'87	'88	'89	'90계획
모집단사업체수	40,480	42,941	48,876	53,089	58,496	(58,496)
지출업체(%)	14.0	15.6	15.7	18.5	10.3	8.7

* 자료 : 「중소기업실태 조사보고서」, 각연도

리의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등 간접지원방식이 있다.

그러나 대상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일반적 지원방법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앞서 보았듯이 인력·자금 등 일반적 인 애로 외에 자체기술기반이 취약하다는 점 때문에 기술자체의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기술관련 정보의 제공, 기술환경변화에 대한 비전제시 등도 기술개발촉진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보조금 지원 예산규모 확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의한 보조금지원의 경우 과제의 선정 및 사업승인시 중소기업자가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예산규모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업발전기금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91년도 예산 700억원 중 500억원이 첨단산업연구개발에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동 첨단산업의 개발에 중소기업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 하겠다. 결국 이 경우에도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첨단산업분야의 많은 과제가 중소기업에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총 기금 중 기술개발비의 비중이 20% 내외로 책정되어 있는데 기술개발분

야의 지원비중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 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기술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연구개발회계제도 정착 필요

세제지원의 경우에는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인정, 관세감면 등 다양한 제도가 있으나 그 실효성은 의문시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동 제도를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각종 조사결과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특히 현행 조세징수제도상 기업의 자진신고과세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세액공제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고 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것에 기인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중소기업에서 적극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회계제도의 정착과 조세징수제도의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표 4〉 중소기업 기술개발 추진상 애로사항

(단위: %)

기술개발수준 및 경험부족	연구조직 등 체제미비	기술개발자원 조달	기 타	계
44.2	22.1	14.0	19.7	100.0

* 자료: 산기협, 「기업의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애로 조사연구」, '88. 7.

〈표 5〉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추진시 애로사항

(단위: %)

기술축적 기반미약	기술정보제공 미흡	기초기술 낙후	기 타	계
69.3	12.7	11.3	6.7	100.0

*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요수입기자재의 국산개발투자실태」, '87. 2.

〈표 6〉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추진시 애로사항

(단위: %)

인력 확보난	시설부족	정보부족	자금 조달난	인식부족	기술·개발 성과불확실	기 타	계
20.3	8.6	7.4	22.1	7.5	11.6	22.5	100.0

*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 조사보고서」, '89.

기술지도사업의 효율적 추진

정부에서 기업의 연구개발에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의 재정규모상 정부의 지원예산은 극히 한정될 수밖에 없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수혜받는 기업이 전체의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금융지원은 한계가 있다고 하겠으며 조세지원의 경우에도 활용하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직접적인 기술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기반 확보

를 위하여 기술지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는 종래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당면하는 각종 기술적 애로에 대하여 대학교수, 연구소직원 등 관계전문가가 현장에 나가 도와주는 것이며 기타 품질관리·경영지도 등도 지도내용에 포함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도사업은 현재 공업진흥청·진흥공단·생산성본부·디자인포장센터 등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상품의 품질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하겠다.

중소기업의 기술수준향상을 위하여 정부에서 금융·세제·기술지원 등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이를 모든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기술력향상에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각종 지원시책을 집중하여 동 기업의 기술력을 조속히 선진국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이를 관련업체에 파급·확산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상공부에서는 지난해 말 120개의 기술선진화 중소기업을 지정한 바 있고 이들에 대하여 금년부터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 중에 200개의 기업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술 집약적인 의욕 있는 중소기업의 선정·지원 육성사업을 금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정부가 기술개발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하는 경우 그 자금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의 전문가가 함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므로 지원을 병행토록 할 방침이다.

기술관련정보 확산 위해 노력

한편,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의 국내외 환경변화 및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관련정보의 수집·활용이 극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작년 말 종래 산업연구원의 부설로 있던 산업기술정보센터를 '산업기술정보원'으로 분리독립시키고 동 정보원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보급토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89년 11월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은 중소기업의 생산기술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생산현장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맡게 된다. 또한 산업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는 생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기초 및 첨단기술을 생산기술화하여 산업현장에 연결하며,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연구인력과 전문기술인력을 공급하고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도입을 위한 산업기술협력의 추진 및 국내외 산업기술정보의 분석·가공·보급 등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타업종간 기술교류 적극 권장

한편 최근 기업경영여건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른 업종간 기술교류를 통한 신기술분야개척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중에 있다. 즉 다른 업종간 중소기업이 서로 모여 기술교

류를 추진하는 경우 교류에 필요한 장소제공·강사파견·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90년 말 현재 44개 그룹이 활동중에 있다. 금년에도 동 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다른 업종간 교류그룹에 의한 기술개발 추진시 장기저리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여건 조성, 선행되어야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세제·기술지도·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들이 보다 확대되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최근 우리 중소기업 경영여건악화의 주원인이 부동산 가격폭등·서비스업 활황에 따른 인력난·자금난 등에 기인하는 것이고 기업경영인의 사기와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크게 저하된 상태에서 과연 기업이 기술개발에 주력할 것인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업외적 요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중소제조업으로 인력·자금 등이 원활히 유입되도록 하는 근본대책의 추진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경제]

전문·계열화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

우리의 산업구조가 이제 중화학공업 중심 체제가 되었고,
그 중에서도 조립산업의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떻게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대외개방의 확대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제조업의 경쟁력강화가 우리에게 절실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내기업도 세계일류기업과 경쟁할 만큼 초일류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의 전면에 대표선수로 나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을 맺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는 관심의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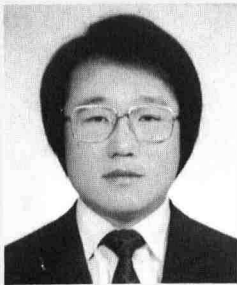
중소기업의 專門·系列화가 강조되고 있는 배경

예를 들어 하나의 연극작품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주연배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조연배우의 호흡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밖에 무대 뒤의 연출가·대본작가·무대장치거나

분장담당자의 역할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제조업에 있어서도 산업의 경쟁력은 최종완제품을 조립하는 대표적 대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제는 완제품의 생산에 관련되는 부품 등 상당부분이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전제품의 경우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받는 자재비 비중이 총 매출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가전제품 불량요인의 30% 이상이 관련부품의 원천적인 불량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한다.

美 하버드대의 마이클 포터 교수도 이러한 점을 중시하여 한 국가의 경쟁우위의 요소로서 어떤 나라가 갖고 있는 자연적·사회적 부존자원, 기업 환경과 산업구조, 국내시장의 양적·질적 구조, 그리고 경쟁력 있는 관련산업과 공급산업의 형성 및 이들의 상호관계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요인 중 네 번째인 경쟁력 있는 관련산업의 발달 여부를 그 나라 전체 경제의 경쟁력은 물론 개별산업의 대외경쟁력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손꼽고 있다.

일본경제의 저력은 부품공급업체의 경쟁력에 의존하는 바가 크며, 국토의



안길원
상공부 진흥과장

크기나 인구·기후·외교적 위치가 열악한 대만의 대외경쟁력이 우리보다 앞서고 있는 것도 중소기업체와 관련산업의 질적인 발전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산업구조가 이제 중화학공업중심 체제가 되었고, 그 중에서도 조립산업의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떻게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협력강화의 방향 :
계열화나 전문화나?**

그러나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계열화나 전문화나에 관하여 논의가 분분하다.

계열화란 간단히 말하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도급거래에 있어서 양자간의 관계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장기·안정적인 거래관계를 필요로 한다.

한편, 전문화란 일단은 소수의 한정된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이라는 면에 무게를 더 두고 있는 말이다. 전문화를 이렇게 보는 경우 전문화와 계열화는 상호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다. 수급기업의 전문성이 축적되어야 계열관계가 보다 긴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열화와 의 관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문화란



일러스트 김영근

단지 중소기업의 전문적 기술보유만을 감안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전문성에 기초해서 하나의 모기업과의 관계에서 탈피하여 수개의 모기업과 관련을 맺는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내지는 수급기업의 독립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계열화와 전문화의 개념을 이와같이 이해한다고 할 때 앞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관계를 설정할 때 어느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하는 외국의 예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열화를 이루어 중소기업의 제품을 사용하여 대기업이 생산활동을 하거나 판매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

**전문·계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대기업으로 하여금 일괄생산체제로부터
벗어나 도급거래를 확대하도록 하여
모기업과 수급기업이 장기안정적인 긴밀한
협력관계로 발전되도록 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나, 독일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열화나 어떤 연계를 통하여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보다는 오히려 전문화에 기초하여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실제로 전문화에 의하여 자사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중소수급기업이 모기업에 좌우되는 일이 없이 독자적인 경영전략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도급거래를 중지할 경우에는 모기업을 통한 기술이전, 정보수집기회가 없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바람직한 협력관계는 완전계열화나 완전전문화 중에서 택일할 것이 아니라 주위 경영환경이나 자체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 기존 계열관계 유지 범위 내에서의 기술력·생산능력의 강화 ② 모기업의 다각화 ③ 자사독자제품의 개발 등 가장 효율적인 경영전략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서는 계열화와 전문화를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문·계열화라는 복합적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여건의 변화와 관련시책 개편의 과제

정부는 전문·계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대기업으로 하여금 일괄생산체제로부터 벗어나 도급거래를 확대하도록 하여 모기업과 수급기업이 장기안정적인 긴밀한 협력관계로 발전되도록 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현행 정부시책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도급거래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업종과 품목을 계열화업종 및 품목으로 정하여 이들 지정계열화품목에 대해서는 모기업의 자체생산을 제한하고, 모기업과 수급기업이 3년 단위의 공동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중소기업이 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업종을 가려서 이를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이양토록 하고 있다.

또한 모기업단위별로 수급기업체협의회를 구성케 하여 모기업에 대한 교섭력을 강화하고, 이들 협의회를 중심으로 수급기업이 공동사업을 추진

토록 하는 한편, 모기업의 수급기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을 증대하도록 유인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대내외 여건변화는 관련시책의 개편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우선 현행 시책의 기본틀이 짜여진 것은 '70년대 후반 내지는 '80년대 초반이라 할 수 있는데, 그후 10여년을 지나오는 동안 수급기업의 비중이 크게 제고되어 전자·자동차업종의 경우에는 70~80%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수급판매 비중 또한 70%대를 상회하게 되었다. 임금수준의 급격한 상승, 노사분규의 확산, 인력수급상의 애로 등도 모기업으로 하여금 전 공정에 걸친 일괄생산체제로부터 탈피할 필요성을 절감케 하고 있다. 그밖에 기술혁신의 가속화에 따른 기술경쟁은 모기업과 수급기업간의 기술분업의 여지를 확대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제반의 여건변화는 도급거래의 양적 확대 이외에 도급거래의 질적 측면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 오게 하고 있다. 즉, 종전의 단일부품 위주의 거래형태에서 단위부품 및 완제품 형태의 발주 등으로 거래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전과 같이 어느 특정품목을 지정하여 생산을 제한한다든지 外注를 강제하는 시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전문계열화 촉진시책은 모기업과 수급기업간의 상호필요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는 방향으로 일대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이 양축진시책'이 '지정계열화품목제도'보다 더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점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이 양'은 이양품목이나 이양시기 등을 대기업 스스로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정부는 분위기의 확산, 지원제도의 확충 등을 통하여 이양을 촉진시켜 나가고 있다.

지원유인시책 확충 필요

이와 함께 모기업이 수급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토록 하기 위한 유인시책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수급기업에 대한 모기업의 지원은 지원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지원의 효과를 높여 준다. 또한 모기업에 대한 유인시책은 실제로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대기업과 수급기업간의 협력과정상의 애로를 해소해 준다는 의미가 강하다. 이와 같은 지원대상으로는 모기업 수급기업간의 공동기술개발·기술이전의 확산·공동연수시설설치·공동전산화·협동화단지의 설치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시책의 중점이 계열화촉진에 치우쳐 온 감이 없지 않았으나, 중소기업의 능력이 상당히 향상되어 가고 전문화의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점에서 수요규모가 크고 표준화된 또는 표준화가 가능한 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화 지원시책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자동차 및 전자업종을 중심으로 부품연구소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이들 기관을 통한 역할을 기대해 본다.

전문·계열화는 대기업·중소기업이 서로를 필요로 할 때 가능

그러나 전문·계열화란 인위적인 정부시책에 의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양측을 무리하게 엮어매어 이루어질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이제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필요한 존재가 될 때 비로소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문어발식 非關聯多角化에 젖어 있는 대기업의 타성이 유지되는 한, 전문·계열화는 한낱 공론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업은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건변화의 흐름을 읽고, 기업 스스로의 체질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대기업측의 경영합리화는 대내외 여건의 변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減量經營으로 연결되어질 것이고, 이는 결국 중소기업과의 협력의 필요를 한층 더 절실하게 할 것이다. 전문·계열화에는 비단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측의 체질 강화도 필요로 한다. 전문·계열화 자체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특유의 기술적 특성을 최대한 발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여러 측면에서 경제적인

힘은 약하지만, 작은 규모를 가지고 신축적인 경영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이점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또한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한 투자를 재빠르게 이행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중소기업 스스로가 전문적이고 숙련된 기술 및 노하우를 가질 경우 대기업의 필요에 한층 더 부합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제는 중소기업 스스로 정부의 보호막 안에서 안주하려는 자세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때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정보화·협동화사업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여 기술집약화함은 물론 사업전환 등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체질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기업도 이미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만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쟁의 격랑을 함께 헤쳐 갈 동반자를 발굴해 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해 가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전문·계열화는 비단 중소기업의 육성측면에서 뿐만아니라 대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도 절실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일본이든 독일이든 선진제국에 있어서의 전문·계열화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서로에 대한 절실한 필요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문]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방안

인력난의 원인은 경제·사회·문화적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나타난 현상이므로 인력정책의 기본방향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확대공급하고 산업사회 고도화에 따른 인력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와 함께 극심한 인력난으로 제조업,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노동력이 고학력화됨에 따라 젊은 근로자들을 위시한 인력이 제조업이나 건설현장에서의 위험하고 힘든 일을 기피하고 편하게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서비스산업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경우와 달리 자체 인력양성, 처우개선이나 작업환경개선 등의 방법으로 인력을 충원하거나 공장자동화 등으로 인력수요를 절감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중소기업 인력난의 실상

이러한 인력난의 문제는 기업경영의 커다란 애로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90년 7월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이 기업의 애로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기업에서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임금인상(32.4%)보다 인력부족(44.3%)이 훨씬 커다란 애로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구조 및 취업구조상으로 볼 때 현재의 산업인력변화 추세는 총량적·장기적으로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다만 부문간 인력의 수요·공급간에 너무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전망조사보고서'에 의하면 '90년 3월 현재 10인 이상 사업장 총 근로자 442만 8천명 중에서 19만 2천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전 산업 평균 인력부족률이 4.34%로 나타났고, 이 중 전문기술 및 사무관련직은 1.30%인 반면 생산관련직은 6.85%였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광업(8.0%), 제조업(7.4%), 건설업(9.0%) 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제조업의 생산관련직 인력부족 현황을 규모별로 보면, 10~20인 규모 기업이 15.2%로 가장 높고 사업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현격하게 낮아지고 있어 근로조건이 비교적 양호한 대기업에 비해 영세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김용달
노동부 훈련기획과장

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능정도별 부족현황을 보면 기능정도가 높을수록 부족률이 낮고 미숙련 단순기능자의 경우가 16.2%로 가장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제조업기술실태조사보고서'에 나타난 '90년 중 기술기능인력 부족률은 23.0%로서 더욱 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난의 주요원인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은 총량부족에서 기인하는 것보다는 인력의 비생산적 부문으로의 불합리한 배분과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공급이 미진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이 대기업

에 비하여 상대적 열위에 있어 인력 이탈현상이 속출하고 있고 여기에 대기업의 스카우트 현상까지 가세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부분이 대기업과 하도급관계에 있는 탓으로 자금면에서 대기업의 통제를 받아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임금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90년 10월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보면 10~29인 기업의 생산직 월평균임금은 500인 이상 대기업에 비하여 17만 5천원이 낮고 사무직임금은 29만 5천원이나 낮은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이에 따른 인력양성 투자 역시 미흡하고 생산자동화 등을 통한 인력수요 절감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제조업 전반에 걸친 인력난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근로자들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경향이 만연되어 있고 둘째, 학교 교육이나 직업훈련기관을 통해서 배출되는 인력으로는 필요한 산업인력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부족하며 셋째, 인력배분기능이 효율적이지 못하여 고용에 관한 정보가 취업희망자나 인력수요처 모두에게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고 넷째, 학벌주의에 따라 기업이 무조건 고학력자만을 선호하는 고용관행으로 최근 대졸인력의 실업과 저학력 생산직의 인력부족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표 1〉 기업경영의 애로요인 분석

(단위 : %)

구 분	인력부족	임금인상	생산성저하	노사분규 등
전 체	43.0	32.0	13.9	10.0
대기업	33.7	28.9	21.6	13.3
중소기업	44.3	32.4	12.8	9.6

*자료 : 국민경제제도연구원, 「기업애로요인분석과 기업환경개선」, '90. 7.

〈표 2〉 규모별 생산관련직 인력부족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전규모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현 원	2,419	298	594	558	208	761
부족인원	166	45	53	39	11	17
부 족 률	6.9	15.2	8.9	7.1	5.2	2.3

*자료 : 노동부, 「고용전망조사보고서」, '90. 3.

〈표 3〉 기능정도별 인력부족 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합계	지도기능자	숙련기능자	반숙련기능자	미숙련기능자
현 원	2,419	147	1,533	515	230
부족인원	166	6	81	41	37
부 족 률	6.9	4.4	5.3	7.9	16.2

*자료 : 노동부, 「고용전망조사보고서」, '90. 3.

〈표 4〉 제조업의 규모별 월평균 급여

(단위 : 천원)

10~29인		30~99인		100~299인		500인 이상	
생산직	사무직	생산직	사무직	생산직	사무직	생산직	사무직
442	546	433	603	430	627	617	841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 조사보고서」, '90. 10.



결과를 가져왔으며 다섯째, 여성이나 중·고령자 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은 기업경영의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금년도 경제운용방향을 중소기업에 포함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두고 가장 큰 문제점인 인력난을 해소함으로써 생산활동의 활력을 되찾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인력난의 원인은 경제·사회·문화적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나타난 현상이므로 인력정책의 기본방향을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확대공급, 신규인력의 지속적인 유입을 촉진

하기 위한 기능장려시책 및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강화, 산업사회 고도화에 따른 인력의 질 향상 등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필요인력 공급확대

중소기업위주의 공공훈련기관 운영 자체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위탁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주요공단 인근 지역에 당해지역 사업장과 관련되는 직종을 선정하여 1개소당 500명 규모의 훈련기간 1년 이하의 전문공동훈련원을 '91년 8개소, '92년 2개소를 건립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건립비는 직업훈련촉진기금에서 부담하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운영·관리토록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이 열악하여 신규인력 유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공공훈련원에서 배출되는 연간 2만여명의 수료생을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현장훈련 도입으로 고용효과 배가
산업현장의 급속한 기술변화에 따른 훈련수료생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산학협동훈련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훈련기간의 50%를 산업현장에서 훈련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모든 직업훈련이 현장훈련 중심으로 운영되면 공공훈련원 등의 집체훈련기간이 짧아져 훈련비용 절감효과는 물론 기능인력 배출규모의 확대를 기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부족한 단순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6개월 이하의 훈련과정은 100% 현장훈련만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훈련교사의 확보를 위한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실무경력이 많은 조장·반장 등이 현장훈련교사를 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소기업의 사업내훈련 활성화 지원
정부는 매년 고시하는 사업내훈련의 무비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60% 경감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훈련시설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연리 5%의 저리로 법인에게 15억원, 개인에게는 3억원까지 융자해주고 있다. 인력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의 세액공제 범위를 10%에서 15%로 확대함과 동시에 직업훈련시설에 사용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세계상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훈련교사를 파견하여 기술지원도 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시설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기업의 특성과 사정에 따른 융통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유휴인력 활용

현재 중소기업의 단순노무직 인력난은 여성·중고령자 등 유휴인력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우선 '시간제 근로자 고용지침'을 마련하고 시간제 근로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직업안정기구 보강 등으로 시간제 고용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또한 포장·상표제작 등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확대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우선 국가기관부터 중고령자의 채용을 실시한 후 일반 기업체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 촉진

기능인 우대정책 조성

중소기업의 기능인 이탈을 방지하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현대산업사회에서의 기능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장기근속 기능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에게 야간대학, 개방대학 등의 입학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계속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근속기능인에 대하여는 각종 사업의 인·허가시 우선권을 주며, 창업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근로자주택 입주우선권 및 자녀장학금지급 등의 복지혜택을 확대할 것이다.

아울러 20년 이상 장기 근속 기능인을 名匠으로 선정하여 기능장려금지급·부부해외산업시찰·정부포상을 실시하고 생산직에게도 사무직과 같은 '과장대우제' 등을 시행토록 하여 기능인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다.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강화

소비성 서비스업으로의 과다한 인력 유입을 막기 위하여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및 영업상의 규제를 계속할 계획 인바, 여신금지 부문에 포함되는 대중음식점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치성 유흥업소를 매출액에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대상에서 배제하는 한편 심야영업·신규설립을 억제하면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노동시장 정보체계 정비


인력수급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직업지도·알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직업안정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용관리 전산망을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까지 연계하고 또한 신규노동력의 취업지도와 유휴노동력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직업핸드북을 발간하여 널리 배포할 것이다.

아울러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 스카웃 규제규범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이행토록 지도함으로써 고용안정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할 것이다.

산업구조 고도화에 부합하는 인력관리

최근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부족현상은 산업구조조정의 진전과 자동화를 통한 성력화로 해소가 가능하므로 향후 중소기업의 자동화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편 기업측에서도 공장 자동화에 따른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전환배치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직업훈련과정에서 향상훈련의 비중을 높이고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의 재교육을 강화하며 NC, CNC, CAD/CAM 등 FA관련 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직종개편·교재보강을 계속할 것이다. 아울러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수행할 기능장의 확대 양성을 위하여 기능대학을 보강할 것이다.

정부는 앞에서 살펴본 여러 시책을 각 부처간 공동노력으로 추진함으로써 짧은 기간 내에 중소기업의 활력과 국제경쟁력을 높일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인력난 해소노력 등 경쟁력 강화방안이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업 및 관련단체의 강력한 의지와 근로자의 건전한 직업윤리관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고학력·고임금의 시대에 알맞는 인력정책을 추진하려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공장부지 확보 및 입지지원 방안

**제조업성장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충분한 공장용지를 공급할 계획인데 특히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업종별 전문단지 조성 및 협동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책들이 추진되는 올해부터는
점차 공장입지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공장용지는 '90년 현재 총 9,600만평이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공장용지의 추가수요는 연평균 300만평 수준으로 2001년까지 3,030만평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2001년까지의 입지공급은 개발중인 공업단지 및 검토중인 공업단지를 포함하여 약 3,400만평으로 계획하고 있어 총량적 수급계획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공장용지 추가공급계획
('91~2001) (단위 : 만평, %)

구분	면적	비율
계	3,400	100
수도권	270	8
중부권	870	25
서남권	1,200	35
동남권	990	29
기타	70	3

공장용지 수급동향 및 문제점

그러나 기업의 현실적인 수요에 맞는 입지공급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공장용지 추가수요의 약 50%가 정보의 취득, 산업인력의 확보 등 기업환경이 유리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국토의 균형개발을 목표로 하는 공업입지정책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둘째, 공업입지 개발의 공공성이 강조된 결과 공공기관이 공영개발로 공업단지를 개발하는 계획 입지 방식에 의존함으로써 기업의 자유로운 입지선택이 제약을 받게 되어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서 공장을 건설하는 데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으며, 셋째 첨단산업 육성·공해업종의 집산화·중소기업의 입지환경개선 등 부문별 입지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이다.

입지공급계획

국토의 균형발전과 기업의 경쟁력이 조화될 수 있도록 총량적인 수급을 맞추어 나가면서 공해업종의 집산화, 중소기업의 입지환경개선 등 부문별



채덕석
건설부 입지계획과장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데 입지공급정책의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

공업단지 개발확대
'91년 중에 아산, 대불, 여천 등 공업단지에서 827만평의 공장용지를 신규

로 분양하고 새로 20개 공업단지 1,954만평을 지정하며 기계·자동차·석유화학 등 주요업종별 단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기업의 입지수요에 대비할 계획으로 있다.

그리고 농업용간척·매립지를 과감히 공장용지로 전환해 나갈 예정인바 우선 영산강지구(700만평)와 남포지구(70만평)를 공업단지로 전환 이용하기 위하여 기초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기업의 개별공장 건설지원

공업단지 밖에서도 실수요 기업이 개별공장을 쉽게 건설할 수 있도록 농지나 임야를 용도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여 농지는 공장임지면적의 50% 이내에서 공장용지로 용도변경을 허용하던 것을 70%까지로 상향 조정하고, 임야는 공장임지면적의 100%까지 용지변경을 허용할 계획이며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도 공장건설이 가능한 토지인 국토이용관리법상 개발촉진지역에 대한 공장용지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실수요 기업에게 입지정보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수도권 공장용지 수급대책

아산신항만 배후공업단지를 확대하여 '91년 12월에 개발사업을 착수하여 '96년까지 조성함으로써 수도권의 공장용지 수요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공업단지의 규모를 150만평에서 350만평으로 확대하여 항만건설과 연계, 개발하고 인천항 수출입화물의 50%를 차지하고

〈표 2〉 '91년 중 공업단지별 신규분양계획

(단위 : 만평)

공업단지	분양면적	공업단지	분양면적
계 (18개)	827	옥성	10
전주	50	구미	13
시화	50	부용	12
대불	70	영암	63
군산	40	관창	34
울산	30	현도	16
이리	30	천흥	11
왜관	15	대전4	43
문막	10	여천	95
북평	10	농공단지	225

〈표 3〉 공업단지 지정계획

(단위 : 만평)

공단명	위치	면적	지정	공단유형
정읍공단	정읍군 북면	30	'91. 4	지방공단
정주공단	정주시 하북동	30	'91. 4	"
달성구지	달성군 구지면	70	'91. 5	"
청양첨단	청양군 대치면	54	'91. 4	"
영암공단	영암군 삼호면	90	'91. 4	"
김천2공단	김천시 대광동	34	'91. 6	도시계획사업
평동공단	광주 광산구	136	'91. 8	지방공단
석문공단	당진군 석문면	300	'91. 9	국가공단
대산대죽	서산군 대산면	30	'91. 9	도시계획사업
성서3공단	대구 달서구	110	'91.10	지방공단
청주첨단	충북 청주시	300	'91.10	"
대전4공단	대전 대덕구	55	'91.10	"
경인주물	인천 서구	20	'91.11	"
양산어곡	양산시 어곡동	37	'91.11	"
달성위천	달성군 위천면	93	'91.12	"
사천진사	사천군 사남면	60	'91.12	"
울촌공단	광양만 일원	370	'91.12	"
청원현도	청원군 현도면	22	'91.11	"
음성대풍	음성군 대소면	13	'91.12	"
인주공단	아산군 인주면	100	'91.12	"

있는 양곡·철강·목재 등의 관련공장을 아산만권의 공업단지로 이전유치하여 인천항 화물의 25%를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산-장항 공업단지개발도 더욱 가속화하여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공업용지 수요를 분산하여 수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입지지원 대책

자유입지의 확대

4만 5천평까지는 기업이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개별입지지정승인을 신청하면 용도변경이 조치되도록 하여 농지나 임야에서 공장건설이 용이하도록 했다.

이를 위하여 '개별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장·군수가 개별입지 지정승인시 용도변경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91년 5월부터 시행예정).

기업의 공동입지 확보제도 도입

3개 이상의 기업이 계열화·집단지 등을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한 후 대표기업을 선정하여 공업단지 지정권자(건설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로부터 공업단지를 지정받아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동입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창업지원을 위하여 창업자도 공동입지 확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에

사업단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전문단지를 체계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공장부지 및 건물의 임대제도 활성화 20인 이하 영세중소기업의 50% 이상이 임대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부문에서 임대공단 및 임대공장의 공급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아파트형 공장의 공급을 확대하여 대도시지역의 영세중소기업의 창업 및 생산환경개선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공단조성시

〈표 4〉 업종별 단지조성계획

(단위 : 만평)

업종	위치	규모	조성일정
기 계		350	
· 종합단지	군장공단	300	'91. 4. 수요조사 '92 사업착수
· 중소기업단지	창원공단인근	50	'91. 5. 입지선정 '93 사업착수
자동차		320	
· 완성차단지	달성구지공단	60	'92 분양
· 부품단지	6개 공단 (달성구지) (아산인주) (당진석문) (군산 2) (대 불) (온 산)	260 (30) (40) (100) (45) (15) (30)	'92~'95 단지조성 '92~'95 단지조성 '92~'95 단지조성 '91 하반기 분양 '91 하반기 분양 '92 상반기 공단지정
석유화학	여천공단확장	180	'91 하반기 분양

〈표 5〉 아파트형 공장건설계획

지역	규모	건축면적 (평)	입주예정 업체수	착공일	준공 예정일
10개지역	15개동	61,722	525		
서울변동	2동(지상8층)	5,106	30	'90. 1	'91. 3
하월곡동	1동(지상2층)	585	7	'90. 1	'90.12
서울중계	1동(지상6층)	2,943	24	'91. 1	'92. 5
서울성수	1동(지상7층)	3,245	32	'91. 2	'91.12
경기광명	4동(지상7층)	12,634	150	'90. 7	'91. 6
경기안양	1동(지상8층)	19,914	180	'90. 9	'92.10
남양주군	2동(지상7층)	6,033	28	'90.11	'92. 3
인천남동	1동(지상7층)	7,618	50	'91. 1	'92. 6
부산모라	1동(지상5층)	1,408	12	'90. 9	'91.11
대구월성	1동(지상5층)	2,236	12	'90.12	'91.12

일정면적을 중소기업용 임대공단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91년 중에 시화, 남동에 10만평의 임대공단을 건설하고 서울·부산·대구 등에 아파트형공장(15개동)을 건설하여 1,020개 중소기업을 입주시키도록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내 중소기업 공장용지 공급확대

발안·안중 등 수도권개발유도권역 개발계획 2단계 지구 260만평과 개발유도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의 1만 8천평 이하 소규모 공단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수도권의 이전중소기업에 한하여 입주토록 하고 아산공단에도 수도권의 이전중소기업이 우선 입주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공장설립 민원실 설치

시·군에 공장설립민원실을 설치하여 공장설립절차를 일괄처리하도록 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 설치될 공업입지센터를 통하여 기업에 대한 입지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공장용지난 해소 위해 적극 노력

정부는 기업의 공장용지난을 해소하



고자 종전의 공업배치법·산업기지개발촉진법·지방공업개발법·공업단지관리법·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등으로 다기화되어 있던 관련법률들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9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91년 3월 14

일 공장용지공급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공장용지공급대책의 기본방향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제조업 성장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장용지를 공급하는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이 쉽게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책들이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앞으로는 공장용지가 부족하여 기업경영에 애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라경제

〈표 6〉 임대공단 건설계획

공 단 명	규모(만평)	입주예정업체수	사업착수
계	10	600	
시화공단	5	100~200평 규모의 중소기업 300개	'92. 8
남동공단	5	100~200평 규모의 중소기업 300개	'93. 6

새 경제질서를 창출해야 한다



신국환
상공부 기획관리실장

그 세기의 가장 큰 변화는 공산주의의 몰락이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 대결의 시대가 종식된 것이다. 마르크시즘에 의한 경제체제는 소련이 레닌혁명 이래 70년간 운용해 본 결과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실증된 셈이다. 소련을 비롯하여 동구의 거의 모든 나라가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버리고 시장경제로 돌아서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자본주의가 몰락할 것이라는 시대착오적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이 시장경제를 해서 一見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기 는 하지만 자본주의가 지닌 자체적 모순에 의해 멀지않아 스스로 망해버릴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그 체제의 수출위험이 사라졌다는 면에서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는 다행이요, 역사의 진운이 우리 쪽에 있다는 자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체제의 모순과 갈등이 없을까? 마야흐로 중진공업국에서 선진산업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진통과 갈등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하겠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전환기적 난국을 극복하고 선진 산업사회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민족의 염원인 남북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도 우리는 현시점에서 한국적인 신경제질서를 창출해야 하겠다.

대체로 아는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경제질서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뜻에서도 소련이 시장경제로 개혁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앤더스 애스룬도가 쓴 '경제개혁을 위한 고르바초프의 싸움(GORBACHEV's Struggle For Economics Reforme)'이란 책자와 주마간산격이지마는 필자가

현지에서 보고 느낀 바를 요약해 본다.

소련경제, 즉 공산주의경제가 스스로 체제를 버려야 할 가장 큰 까닭은 경제주체가 통제된 사회에서 타율에 의해 비경쟁적으로 경제를 운용하고,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니 능률과 생산성이 떨어지고 기술혁신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공장책임자건 노동자건 모든 생산주체는 중앙에서 할당된 형식적인 생산목표달성에만 급급하지 좋은 공산품을 만들겠다는 품질관리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 40년 전의 면방설비를 그대로 가동하더라도 주어진 할당량만 채우면 되지, 제품의 유통이나 판매에 관여하지 않으니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반응을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을 것이다.

농업은 공업부문보다 더 심하다고 한다. 농장에서 토마토를 재배하면 3분의 1은 수확을 못 해 그대로 땅에 떨어지고, 3분의 1은 유통과정에서 상해 버리는 일이 다반사라고 한다.

소련경제가 기울고 있는 세 가지 주된 이유로는 효율의 저하, 서방과의 기술개발 격차, 품질저하를 들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자랑하는 분배의 정의와 사회복지도 서구의 자본주의 사회에 비해 뒤지고 있다. 일자리는 늘 마련되어 있기에 서구와 같은 실업의 공포도 없고, 일을 열심히 하든 적당히 하든 똑같이 임금이 지불된다. 언뜻 보면 노동자의 천국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생활수준은 서구 자본주의와 너무 차이가 난다. 어린 아이의 치사율이 1천명당 26명으로 세계 50위이며, 남자의 평균수명은 63세로서 멕시코 및 브라질 수준이다.

소련경제는 '79년부터 침체일로로 걷고 있으며 이제는 경제 때문에 군사·정치면에서도 국제적 지도력이 약화되고 있다. 경제의 실패에는 'Command Administrative System'의 과도한 통제와 관료의 비윤리적 경제운용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우리 경제도 1인당 GNP 5천달러대의 '魔의 소득혁명기'에서 노사간의 갈등, 근로의욕의 감퇴 속에서 모두가 제몫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쉽게 돈벌려 하고 힘드는 제조업은 기피하는 현상도 있다. 이러한 현상이 상승작용을 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약해지고 경제의 안정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세계의 모든 나라가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개혁(reforme)에 나서고 있듯이, 우리도 기존 경제질서의 개혁을 통해 '90년대 재도약의 기반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하겠다.

첫째는 경제주체의 의식구조가 개선·합리화되고 새로운 윤리관이 정립되어야 하겠다. 우리가 가고 있는 민주화와 국제화의 길에서 이제 되돌아설 수는 없다. 소련을 비롯해서 체제에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는 모두 新思考를 외치고 있다. 기존의 의식과 행태로는 새로운 발전을 이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사고에 의해 우리가 가고 있는 민주화와 국제화의 길은 자율과 규범을 바탕으로 한다. 대외적으로는 모두가 자율적으로 국제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와 합리적 행태에 의해 살아야 한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우리가 벌이고 있는 새질서·새생활운동이 곧 이를 위한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공직자는 그 누구보다도 이 운동에 앞장서야겠다. 법이 용납치 않는 것과 합리적이지 못한 것은 과감히 추방하고 새로운 윤리관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둘째로 자유시장경쟁질서를 더욱 창달하여야 하겠다. 우리 경제가 시장경제체제이긴 하지만 아직도 시장기능과 경쟁질서가 온전치 못한 점이 많다. 비경쟁체제가 경쟁체제와 겨루기 어렵다는 것은 세계경제의 경험에서 입증된 것이다. 우리 경제의 효율을 높이고 구조조정에 성공해서 국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가기 위해서는 시장경쟁 원리를 온전히 작동하는 길밖에 없다. 경제주체의 자율을 더욱 존중하고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을 줄여 나가야 하겠다. 이러한 뜻에서 국제화와 대외개방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셋째로 형평을 이루려는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한다. 지난 고도성장기에 쌓인 불균형을 시정하지 않고는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없다. 우리 경제개발은 아직 小成에 지나지 않는다. 고도선진산업사회에서의 大成을 위해서는 분배에서의 형평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복지후생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겠다. 物中心의 성장위주에서 사람을 중시하는 제도와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제도를 구축할 때 북한사람들이 남한은 스스로 붕괴할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장과 복지간에는 항상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어느 하나에 치우칠 때에는 부작용이 일어난다. 최근 스웨덴이 앓고 있는 복지병이 좋은 예이다. 복지천국을 자랑하던 그들도 누적되는 사회보장부담 때문에 기업이 문을 닫고 해외로 탈출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고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한창 선진복지사회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도 스웨덴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라경제

우리의 '삶의 질', 어느 수준에 와 있나?



주경식
보건사회부 기획관리실장

우 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인가? 우리의 발전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국제간의 비교지표로서 소득개념의 통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널리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1인당 국민총생산을 가지고 경제구조와 사회제도가 다른 여러 나라를 단순비교하는 데는 많은 위험이 따른다.

최근 일본에서는 지가상승과 주식차익 등 명목상 소득증가에 의한 거품경제를 염려하는 소리로도 높다. 또한 국민총생산규모가 크다고 해도 일부계층이 이를 독점에 버리는 상태에 있으면 일반의 생활수준은 나아질 것이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 나라의 발전수준을 국민소득으로 평가하는 기준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오히려 교육·의료·주택·환경 등의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발전수준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삶의 질'을 파악하는 데 가깝지 않은가 생각된다.

어떤 학자는 한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측정하는 데 '국민총지식'이 더 유용한 지표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연간 출판물의 종류와 양, 국민의 독서시간 등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지표로서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많은 사람들이 시도한 바 있으나 종합지표로서 일반적 공감을 얻어 내지는 못했다.

그후 '80년에 이르러 '유엔아동기금'에서 '삶의 질'의 지표를 점수로 나타냄으로써 학계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평균수명과 영아사망률, 문자해독률의 세 가지 사회지표를 가지고 각국의 경제수준과 비교평가를 시도한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소에는 인종적 특성이나 사회문화적 배경도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

되어야 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표들이다. 평균수명과 영아사망률은 영양상태와 보건의료, 소득수준 등 종합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문자해독률은 교육수준의 척도이다.


서기 2000년에 선진국그룹이 도달할 수 있는 목표수준으로서 평균수명은 77세이며 영아사망률은 1천명당 7명을 만점으로 하고 '50년대의 가장 낙후된 나라의 평균수명 38세와 영아사망률 1천명당 225명을 영점으로 하여 백분율로 점수화하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82점으로 평가되었으나 현재는 90점에 이르러 선진국 수준인 평균 93점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의 영아사망률은 이미 1천명당 12명으로 거의 선진국수준이며 높은 교육열에 힘입어 문맹률도 4%에 불과하다. 다만 평균수명은 71세로서 아직 뒤져 있는 상태이다.

전 국민의료보장시대에 들어선 지 2년, 의료혜택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평균수명도 계속 연장될 것이 확실하며 7차5개년계획이 끝나는 1996년에는 74세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무튼 총량적인 사회지표로 보면, 우리의 '삶의 질'은 90점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약 40만명의 절대빈곤인구가 있고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분배 받지 못한 소외계층이 엄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생존경쟁이 어려운 장애인과 모자가정, 그리고 노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미에서 '삶의 질'은 향상될 것으로 믿는다. 

기술선진국 독일을 다시 생각한다



박승덕
과학기술처 기술정책실장

독일의 백화점이나 일반 상점들의 진열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상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국제품보다는 오히려 외국의 상표가 더 많이 눈에 뜨인다.

변화가에서도 일본이나 한국 등 외국의 상품을 선전하는 요란한 광고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독일의 상업·무역의 중심지 프랑크푸르트 제일의 변화가에는 한국의 금성·삼성을 선전하는 대형 네온사인이나 밤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오늘날 세계 제1의 수출대국, 첨단공업국가로 뛰어오르고 있다. 이들의 저력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독일의 주된 상품은 진열대에 있는 것보다는 진열하지 않고도 팔 수 있는 기계와 노하우, 그리고 소프트웨어인데,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저력이다. 독일인들은 그들의 물건을 뛰면서 파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파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buyers' market이 아니라 sellers' market인 것이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남이 사가지 않을 수 없는 기계, 노하우, 소프트웨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기술선진국이요, 경제대국이다. 독일이 바로 이런 나라라는 것을 이번 독일정부 초청으로 기초과학전문가단과 함께 독일의 거대기초과학 연구시설을 살펴보고 난 뒤에 알 수 있었다.

독일을 기술대국,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준 저력은 무엇인가? 기초과학이 뒷받침이 된 독일기술의 저력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을 두고 차곡차곡 쌓아올린 그들의 문화·예술은 물론이고 기초과학·기초기술의 확고한 기반이 바로 그것인 것이다.


독일인들은 자기 나라의 문학·음악·그림을 사랑할

줄 알고 그들의 기초과학·기초기술을 아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인정해 주는 아량을 가지고 있다. 독일인들의 가슴속에는 아직도 '괴테'와 '베토벤'이 살아 있으며, '아인슈타인'과 '막스프랑크' 같은 위대한 과학자가 살아 숨쉬고 있다. 베토벤이나 막스프랑크가 그들의 조국에서 사랑 받고 존경 받는 풍토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오늘날 그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교과서나 문헌에 등장되는 세계적인 음악가요, 인류의 과학자로 남을 수 있었겠는가?

이러한 국민성이 2차대전에서 패망한 독일이 분단된 그들의 조국을 다시 합치는 위업을 달성하고 오늘날 세계적인 선진기술대국으로 등장하게 된 저력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독일은 앞으로 양국간에 특히 기초과학분야에서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양국간의 기술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늦어도 다음 세기까지에는 세계 7대 기술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야심적인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독일국민의 저력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또한 꾸준한 기술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기술을 하루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우리 나름의 슬기를 찾아야 한다.

우리 국민들에게도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는 과학자와 기술자를 아끼고 사랑해 주고 감싸 주는 아량과 관대함이 필요하다. 자기 나라에서 사랑 받지 못하고 인정 받지 못하는 과학자, 기술자가 기술선진대열에 나가서 인정 받기는 더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중·고교 경제교육이 밑받침되어야



김주일

경제기획원 예산심의관

구태여 쿠즈네츠나 리스트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는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것이 역사를 통해 증명되는 것을 본다.

이 '정신'의 문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과제와 쉽게 연결된다. 즉 정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국민 모두가 합리적인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정신' 즉 '의식'을 공유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의식은 어른이 되어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유년시절부터 학교교육을 통하여 완성된다. 이 학교교육 중에서도 가치관과 의식이 형성되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시절 즉 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이 중시된다. 매년 봄이면 배출되는 고등학교 졸업자 76만명 중에는 33만명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나머지는 사회에 나가서 직접 경제활동에 참여한다.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것이 이들이 사고와 행동의 기틀이 되는 것이다. 이들이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경제에 대하여 올바르게 경제교육을 받는다면 합리적인 경제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장성해가면서, 열심히 일하지도 않으면서 임금을 올려달라는 근로자,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기업가, 소득에 걸맞지 않는 소비를 하는 가게가 사라져 갈 것이며 경제가 정상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잘 달릴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유럽 선진국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미 우리나라의 대학1·2학년 정도의 경제학 공부를 마치고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만이 보다 높은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고등학교에서 경제에 관한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나 그 비중이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교 경제교육의 형편은 그렇지 못하다. 경제 관련 수업시간의 비중이 전체 수업시간의 1% 정도로서 지리, 국민윤리, 국사 등 다른 독립 사회과목의 2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로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대학입시에서 출제되는 문제수가 극히 적어 아예 제쳐놓는 실정이다. 일반사회를 가르치는 교사 중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교사가 거의 없는 점도 중·고교에서 경제교육이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지고 있는 한 요인이다.

우리가 국어·영어·수학 등 기초학문을 중시하는 것은 그 과목들이 그만큼 다른 학문을 공부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의 삶 즉 사회생활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경제교육이 너무 등한시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중·고등학교 경제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범대학교에 경제교육학과를 신설하여 경제담당 교사를 양성하면서 경제를 필수과목으로 독립시키는 한편 경제교육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모든 경제정책은 '국민개개인들이 합리적인 경제행위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수립·시행된다. 따라서 국민들이 합리적인 경제행위를 하지 않을 때 경제학이론도, 이 이론 위에 세워진 경제정책도 모두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금년이 문교부·경제기획원을 위시한 경제부처·한국교육개발원·국민경제제도연구원 등 관련기관이 같은 인식을 갖고 중·고등학교 경제교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학교경제교육 개혁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더 훌륭한 준비를 위해



이동규
동력자원부 석유조정관

지 리하던 걸프사태가 끝이 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필요로 하는 석유의 全량을 수입해야 하는 처지에서 걸프전쟁은 그 누구에게보다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염려되었던 사태였다. 다행스럽게도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원유부족, 석유의 심각한 공급위기 등 최악의 사태로 전개되지 않아 당초 우려한 바와는 달리 우리나라에 큰 충격과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지난 '79년 이란의 회교혁명으로 야기되었던 제2차 석유파동이 있는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석유파동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동력자원부 발족 이후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에너지정책들에 대한 총체적 대응능력의 평가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물론 사태 이후 원유도입에 차질이 없어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실질적 위기대응능력 수준을 깊이 있게 평가할 수는 없겠으나, 설사 사태가 예상할 수 없는 최악의 사태로 치달았다 해도 지난 1·2차 석유파동 때와 같이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해 본다. 현재 우리의 석유산업은 지난 2차파동 당시와 비교해 볼 때 그 대처능력면에서 여러 모로 크게 향상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석유비축면에서 그동안 석유사업기금을 1조원 이상 투자하여 지금은 2차파동 때와는 달리 4천만배럴에 가까운 정부비축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원유도입선도 종전에는 사우디·이란·쿠웨이트 등 3~4개 중동국가에 100% 의존했으나, 지금은 동남아시아는 물론 美, 아프리카 등지의 20여개국으로 다변화되어 있고, 특히 메이저에 의존했던 원유도입도 이제는 모두 우리의 힘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경영과 자본 역시 그러하기 때문이다.

지난 일들은 그 일을 당할 당시에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대부분이 수월하고 쉬웠던 것으로 남기 십상이나, 지금 우리가 2차파동 때처럼 정부비축의 원유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하고 생각해 보면, 섬뜩한 느낌을 금할 수 없다.

지난 7개월여 동안 전쟁임박설과 외교적 평화해결이라는 혼미한 상황에서 하루가 다르게 급변했던 국제 석유정세 속에서 그래도 조금은 여유를 갖고 신중한 대처와 정책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었던 것은 분명 그동안 확보해온 비축물량과 유가완충 재원의 덕분이라 할 수 있다.

시작도 끝도 분명했던 걸프사태가 마감되고, 세계 정치·경제의 신질서 형성을 예고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석유정세도 커다란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주로 공급자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온 생산 및 가격체계가 공급자·소비자간의 상호호혜적 협력관계에 바탕을 두고 공동의 이익을 찾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파행적·돌변적 행태에서 합리적이며 예측가능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 걸프사태를 겪으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유비무환'의 의미를 되새겨 보며, 특히 그동안 1단계 소비절약시책에 국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원해 주셔서 비상국면을 순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점에 감사드린다. [리뷰]

땅값 조사



손선규
건설부 국토계획국장

땅은 공기나 물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이다.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는 동시에 생산수단이라는 기능 때문에 땅은 옛부터 인간의 집착 대상이 되어 왔고 투기의 수단으로도 악용되어 왔다.

땅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 값을 정확히 측정하여 매기는 일이 쉽지 않다. 주관적인 판단에 크게 좌우되므로 보는 이에 따라 제각기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땅값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감정평가사 자격을 부여하고, 전 국토의 약 1%에 해당하는 30만필지를 표준지로 엄선하여 감정평가사가 정확히 평가하게 한 후 그 가격을 정부가 공고하여 일반 국민들의 토지거래지표가 되게 하고 그 주변의 다른 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등 이른바 公示地價制度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새로운 토지관련제도들이 시행되면서 정확한 땅값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땅값이 들쭉날쭉하다면 공평하게 시행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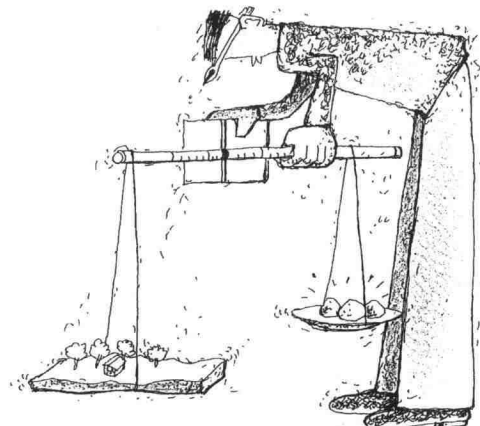
이에 따라 작년에 전국의 땅값을 일제히 조사하였다. 짧은 기간에 많은 필지를 조사하자니 정확성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간이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었다.

간이평가방법이란 감정평가사가 정확하게 조사·평가해 놓은 30만필지의 표준지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표준지의 토지특성과 조사대상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토지특성의 차이만큼 땅값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방법에 의하면 평가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손쉽게 땅값

을 산정해 낼 수 있다.

지난해의 땅값조사에 연인원 1백만명 이상의 공무원이 동원되었으며 단순한 기초자료 정리업무에는 5천명의 임시직을 고용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아르바이트대 학생 등 임시직이 땅값조사를 한다고 호된 비판 기사를 썼다. 처음으로 실시한 전국일제조사였기에 걱정이 앞섰지만 산정된 땅값의 열람결과에 대한 반응은 의외로 좋았다. 992만명이 직접 땅값을 열람했으나 그중 4만 5천명이 이의신청을 냈다. 열람한 사람 중 99.5%는 만족한다는 뜻이다. 부분적으로 잘못된 곳이 있었겠지만 대체로 성공작이었다.

정확한 땅값조사로부터 경제정의가 실현된다는 신념과 사명감으로 2만여 조사담당공무원들은 금년에도 불철주야 전 국토 방방곡곡을 누비고 있다. 99.9%가 만족할 수 있는 땅값을 매기기 위하여……. 나라경제



김원스트udio

정보통신과 기업의 경쟁력



이인학
체신부 통신정책국장

최 근 우리 경제는 여러 분야에 걸쳐 국내외로부터 끊임 없는 자유화와 개방화의 도전을 받고 있다.

특히, 통신서비스시장의 자유화 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뿐만 아니라 한·미간의 통상 현안문제로도 대두되어 세인의 관심을 끌어들였다.

미국은 '88년 종합무역법을 제정할 때 자국기업의 외국 통신시장 진입을 위해 통신협상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89년 2월 우리나라와 EC를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고 통신시장 개방을 위한 협상을 요구해 왔다.

당시만 해도 통신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왜 미국이 정보통신시장의 개방을 요구해 왔는지, 일상생활이나 기업활동에 있어서 정보통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정보통신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업의 경영자조차도 기업의 정보화에 좀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하면, 이에 동의를 하는 듯하면서도 막상 투자를 할 때에는 늘 우선순위에 밀어 놓았던 경우가 많았다.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나 바로 이해한다. 하지만 고속정보통신망을 건설한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필요성을 이해할지 의문이다. 공장을 자동화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공장의 정보화는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니다. 이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확신도 없기 때문에 투자 우선순위에 늘 빠지는 것 같다. 서양 격언에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우리 격언은 '모르는 것이 약'이라고 한다. 동서양의 정보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라 하겠다.

선진국의 우수기업들은 공장과 판매망, 부품조달업체 등 관련기업을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여 부품의 수·발주와 생산관리, 자재관리는 물론 전세계를 연결하여 기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고 있다.

컴퓨터에 입력된 생산계획과 그에 따라 작성된 부품조달 계획에 맞추어 부품을 제때에 정확하게 공급받게 되므로 한달치씩 미리 사다가 창고에 쌓아 놓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그날그날 제품별 판매실적을 분석하여 판매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물품의 재고도 최소화한다.

또한 시장정보도 정확하게 입수하고 분석하여 생산계획에 반영해 나간다. 이렇게 정보화된 선진기업들을 상대로 정보통신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경쟁하여 이길 수 있겠는가.

최근 미국이 우리 정보통신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을 가해 오고 또 우루과이라운드에서도 정보통신을 포함한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정보통신시장 개방문제가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렸고, 정보통신에 대한 국내의 인식도 많이 달라져 가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정보통신사업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람들도 상당히 있고 제조업 경쟁력 향상대책에도 정보화 촉진이 주요과제로 포함되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한다고 마음만 먹으면 밤낮을 안 가리고 어떻게 하든 해버리고야 마는 우리 기업의 극성스러움(?)은 후발의 불리함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외국의 시장개방압력이 정보통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눈을 뜨게 했다면 이 또한 아이러니가 아닌지. 나라경제



물가불안 속 경기회복세 지속

송하성

경제기획원 경제교육기획과 사무관

'91년 1/4분기를 보내면서 우리 경제에는 두 가지 상충적인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즉, 경제성장·산업생산·수출제조업가동률 등의 총량경제지표가 호전되면서 경기 회복세는 뚜렷해지는데 반면, 물가는 계속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물경제활동 호조세, 건설투자·소비증가세 둔화

1월과 2월의 실물경제지표는 설날연휴요인이 크게 작용하였으므로 월단위 보다는 1~2월의 누계로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2월 중 산업생산은 주로 설날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단축과 전월의 높은 생산과 재고의 증가에 대한 생산조정요인 등이 가세되어 전월대비 5.5% 감소하였고, 전년동월비는 1.2% 증가하였으나 1~2월 누계로 보면 전년동기 대비 각각 10.3%가 증가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자 출하도 산업생산과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전월비 4.0%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월비로는 4.4%, 1~2월 누계비로는 12.5%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가동률도 1~2월 평균 81.8%를 기록하여 전년동기 80.5%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월 중 국내기계수주는 건설업·운수업 등 민간비제조업 부문의 발주는 크게 늘었으나 공공 및 민간제조업 부문이 작년 높은 발주에 대한 상대적 부진으로 전년 동월비 7.2% 감소하였으나, 1~2월 누계로는

5.7% 증가하였다.

반면 건설투자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면적은 1~2월 중 23.2%의 堅調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작년 동기 97.3%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국내건설수주액도 1~2월 누계로 8% 감소한 부진세를 보이고

〈표 1〉 실물 경제지표 추이

	'90		'91	
	1	2	1	2
산업생산 전월비	0.3	2.7	4.5	△5.5
동월비	△0.1	15.0	19.9	1.2
누 계 비(%)	△0.1	7.1	19.9	10.3
제조업가동률, 실가동률 ¹⁾	78.8	82.2	83.9	79.7
누 계		(80.5)		(81.8)
국내기계수주	19.6	50.4	19.6	△7.2
(제조업)	(5.9)	(74.3)	(15.7)	(△25.1)
국내건설수주	122.1	104.7	△2.6	△12.0
건축허가면적	131.5	75.0	28.9	18.4
도소매판매액 전월비	2.3	1.4	3.2	△0.7
동월비	15.9	15.4	8.2	6.3
누계비		15.7	-	7.2
출 하				
전월비	1.1	2.6	4.4	△4.0
동월비	2.7	15.5	21.3	4.4
누계비	-	8.9		12.5
취업자수(천명)	16,340	16,517	17,785	17,140
제조업 취업자수(천명)	4709	4689	5016	4970
실업률 ¹⁾	32.	3.5	3.0	3.2
(계절변동조정)	(2.5)	(2.5)	(2.4)	(2.3)
동행지수 ²⁾	0.4	1.1	0.9	△0.3
선행지수 ²⁾	0.9	0.8	1.5	0.0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97.2	97.4	95.5	95.9

* 1) 해당기간의 비율임. * 2) 비전월 증가율임.

* 자료 : 통계청, 「1991년 2월중 산업활동 동향」, 1991. 4.

있다.

2월 중 도소매 판매는 설날 수요 등으로 인하여 소매 부문은 전월비 1.7%로 증가하였으나 도매 부분이 1.1% 감소하여 0.7% 소폭 감소하였다. 1~2월 누계로 보더라도 7.2% 증가하여 전년동기 15.7%에 비해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2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1,770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하여 59만 5천명이 증가하였으며 취업자는 1,714만명으로 62만 3천명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실업률은 작년 동월 3.5%보다 0.3% 낮은 3.2%(계절조정 2.3%)를 기록하여 지속적 고용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취업구조를 보면 제조업부

문 취업자가 작년 6월 이래 9개월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년동월비 28만 1천명이 증가하였고 SOC 및 기타부문 취업자도 건설업·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비 51만 9천명이 증가하였다.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회복세가 지속되어 1~3월 중 전망치 7%를 상회하는 10%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원유수입 부담과 기계류 수입 등으로 수입이 25%나 증가하여 1/4분기 중 30억달러를 다소 상회하는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표 2〉 수출입 동향

(단위 : 억달러, %)

	'90. 1/4	연 간	'91. 1/4
수출	139	650	153.3
(증가율)	1.1	4.2	10.2
수입	158	698	198
(증가율)	12.9	13.6	25.1

〈표 3〉 총통화 증감추이

(단위 : 억원, %)

	'90		'91		
	3	12	1	2	3
평 잔	590,012	672,895	696,853	704,810	704,411
기간증감액	(△2,918)	(30,903)	(23,958)	(7,957)	(△399)
전 월 비	△0.5	4.8	3.6	1.1	0.1
동 기 비	23.7	18.2	16.9	18.9	19.4

〈표 4〉 분기별 총통화 공급추이

(평잔기준, 단위 : 억원, %)

	'90				'91
	1/4	2/4	3/4	4/4	1/4
증감액	20,967	13,156	28,42	41,306	31,516
증가율	23.5	22.4	20.0	19.3	18.4

* 주 :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표 5〉 총통화의 부문별 증감추이

(말잔기준, 증감, 단위 : 억원)

	'90	'91		
	3	1	2	3
정부부문	△11,374	△25,218	7,428	△2,323
민간부문	9,046	22,464	11,575	9,247
해외부문	△90	△13,071	△8,013	△10,847
기타부문	4,369	22,362	231	1,562
총통화 (M ₂)	1,951	6,537	11,221	△ 2,361

1/4분기 중 총통화 평잔증가율은 18.4%로 안정된 모습

3월 중 총통화(M₂)는 평잔기준으로 70조 4,411억원을 기록하여 전월에 비해 399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19.4%를 기록하여 전월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末殘기준으로는 70조 2,472억원을 기록하여 총 통화규모가 2,361억원 감소하였으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20.2%에 비해 축소되었다.

한편, 금년 1/4분기 중의 총통화 평잔증가율은 18.4%로 안정된 모습을 시현하였다.

1월 중에는 작년 말의 높은 통화수준이 이월되었고, 2월 중에도 설날 등 계절적인 대규모의 자금수요가 있었으나 불요불급한 여신을 억제하는 등 다각적인 통화대책을 수립·집행함으로써 분기중 매월 통화증가율이 목표 범위(17~19

%수준)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해외 및 정부부문에서 통화를 큰 폭으로 환수

3월 중 총통화의 부문별 공급내역을 보면 민간 및 기타부문에서는 통화가 공급되었으나 해외 및 정부부문에서는 통화가 환수되었다. 즉 민간부문은 농사자금 및 주택자금 등 계절적 정책자금과 상업어음 할인을 중심으로 월중 9,247억원을 공급하였고, 기타부문은 통화채권이 순발행(6,426억원)되었으나 CD 발행의 감소(1,641억원) 등으로 월중 1,562억원을 공급하였다.

반면 해외부문은 수출이 부진한 대신 수입은·고유가 적용분 원유 및 시설재 도입 등으로 경상수지적자가 지속되어 월중 1조 847억원을 환수하였으며, 정부부문은 재정증권이 순증발행(1,321억원)되고 소득세와 법인세 납부가 있었으나 경상적정지출로 월중 통화환수규모는

2,323억원에 그쳤다.

3월 중 물가 급등세 지속

3월 중 물가는 지난달에 비해 도매물가와 소비자물가가 각각 0.1%, 1.3% 상승하여 전년말에 비해서는 각각 1.3%, 4.9% 상승하였다.

도매물가는 사과·귤 등 과실류가 저장비용증가로, 레미콘 등 시멘트제품류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다소 올랐으나 육류가 수입육 방출 영향으로, 나프타·젯트유 등 석유제품이 국제유가하락영향으로 내림세를 보여 전체적으로는 0.1%의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물가 상승요인을 살펴보면 단기적인 공급확대가 어려운 농축수산물 1.98% 포인트로 물가상승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월 하순에 조정한 교통요금의 반영, 3월호 신학기 대학등록금 인상 등 공공요금이, 그 다음 개인 서비스요금 인상이 물가상승요인이 되고

있다.

2/4분기 경제전망

수출과 설비투자의 견조세가 뒷받침되어 2/4분기는 전분기와 비슷한 8%내외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된다.

국제수지는 수출회복이 지속되고 원유수입부담이 완화되어 적자규모가 5억달러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고 하반기에는 흑자까지도 예상되어 '91년 30억달러 적자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경영자가 판단한 '91년 2/4분기 중 국내 전반적 경기는 企業實查指數(BSI)가 152.7로 나타나 1/4분기에 비하여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4분기 물가는 전반기에 비하여 현저히 안정될 전망이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유가와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는 데다가 공공요금 조정, 개인서비스요금 조기상승 등이 거의 물가에 반영되었으며, 그동안 값이 크게 올랐던 과일류도 2/4분기에는 햅과일의 출하로 안정될 것이며 특히 채소류 등은 성출하기를 맞아 가격상승폭이 현저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 등의 아파트 값을 비롯, 부동산투기가 재현되거나 올봄 노사분규가 심해지면 가격안정기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즉 2/4분기에는 물가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표 6〉 물가변동추이 (단위 : %)

	'90. 12		'91. 1		'91. 2		'91. 3		
	比前월	比前 年말	比前월	比前 年말	比前월	比前 年말	比前월	比前 年말	比前월
도매물가	0.7	7.4	0.6	0.5	0.5	1.2	0.1	1.3	7.8
소비자물가	0.3	9.4	0.1	2.1	1.4	3.5	1.3	4.9	11.2

〈표 7〉 물가상승요인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	공공요금	공산품	집세	계
상승율 (%)	6.7	10.8	6.2	1.8	1.8	4.9
기여도 (%p)	1.98	0.94	1.24	0.49	0.21	4.9

〈표 8〉 企業實查指數

	'90. 3/4	'90. 4/4	'91. 1/4	'91. 2/4
전 산업	130.6	69.9	67.8	152.7
제조업	130.3	74.0	67.0	149.6



'90년의 미·일·독간 무역불균형과 각국의 무역추이

김성철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미·일·독 등 선진국간 무역불균형은 '80년대 초부터 심화되어 통상마찰의 주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87년을 고비로 점차 완화되었으며 '90년에는 그 완화추세가 더욱 뚜렷해져 무역불균형으로 인한 통상마찰의 가능성은 다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역면에서 세계 3위권에 있는 미·독·일간 무역불균형이 미국의 무역적자 감소와 일본·독일의 무역흑자 감소로 외형상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일·대독일 무역적자가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선진국간 무역불균형, 크게 완화

특히 통상마찰의 주요인이었던 미·일간 무역불균형은 일본의 내수확대 및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크게 완화되었다. 금액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87년에 563억달러로 정점에 달했으나 점차 줄어들어 '90년에는 411억달러로 3년간 152억달러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일 무역적자가 개선된 것은 그동안 일본의 내수확대와 시장개방확대가 꾸준히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상거래 관습 및 폐쇄적인 가격 메카니즘 등 구조적인 장벽 제거에 일본정부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형상 미·일간 무역불균형이 완화되긴 했지만 미국의 대유럽·대아시아 NICs와의 무역적자 개선추세와 비교하면 여전히 그 폭이 작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시장개방 및 구조적인 장벽 제거 요구를 지속하는 한편, 기존의 환율 및 금리 등 거시변수의 조정요구를 병행하여 통상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의 대독일 무역적자도 '87년의 153억달러를 고비로 점차 개선추세를 보였으며 지난 '90년에는 '89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87, '88년에 비해서는 크게 개선된 수준을 나타냈다.

'90년 美무역적자, 전년비 84억 달러 감소

미국의 무역적자가 '88년부터 3년째 감소세를 나타냈다. 미무역적자는 '87년에 1,703억달러(통관기준)로 최고의 수준에 달했으나 '8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지난

'90년에는 '89년보다 84억달러 감소한 1,010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수출(f.a.s.)이 전년비 8.3% 증가한 3,940억달러로 비교적 호조를 보인데 반해 수입(customs)은 전년비 4.6% 증가한 4,950억달러에 머물러 '8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역수지적자 감소액 84억달러는 '89년의 감소폭보다는 작은 것이나, 작년 하반기의 유가급등에 의한 수입액 증가를 고려하면 예상보다 개선폭이 큰 것이며 무역적자액 규모로는 '83년 이후 최저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권역별로 보면 대선진국 무역적자는 전년비 149억달러 감소한 405억달러를 나타내었으나 대개도국 무역적자는 대OPEC 무역수지 악화에 따라 전년비 15억달러 증가한 243억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걸프사태로 인한 유가급등의 영향으로 수입이 전년비 24.2% 증가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對서유럽무역수지 흑자 반전

주목할 만한 사실은 미국의 대서유럽 무역수지가 '89년의 16억달러

적자에서 40억달러의 흑자로 반전되었다는 사실인데 이는 대서유럽 수출이 전년비 128억달러 증가한 1,130억달러에 달한 반면 수입은 71억달러 증가한 1,090억달러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유럽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것은 美달러화의 유럽 주유통화에 대한 약세, EC 단일시장 추진에 따른 자본재 수출 증가,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비교우위산업 육성 등에 힘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제품용도별 수출입 추이를 보면 수출에 있어서는 소비재가 전년비 19.2%, 자본재가 10.0%, 공업용 원자재가 5.0% 증가하는 등 호조를 보였으나, 식료품 및 음료는 5.7% 감소하였으며 수입에 있어서는 공업용 원자재가 전년비 8.1%, 식료품 및 음료가 6.3% 증가한 반면, 자동차 및 부품은 전년비 0.2%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미국 무역적자 개선추세의 요인

이처럼 미국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등 무역적자 개선추세는 최근 2~3년간 지속되었는데 그 요인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달러화가 주요교역국 통화에 대해 약세를 지속하여 대외경쟁력이 제고된 점, 대미 흑자국들인 일본·대만 등 미국과의 통상마찰에 시달려 온 나라들이 통상마찰을 완화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시장개방 확대를 해왔으며, 아울러 관세를 인하조치를 해온 점, 그동안 EC

및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국가들의 내수확대에 힘입은 설비투자비에 따라 이들 국가로의 자본재 수출이 호조를 보인 점, 보호입법을 강화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밖에 '70년대 중반부터 미무역적자 누적요인이었던 제조업의 경쟁력이 최근에 미약하나마 제고되고 있는 점도 수출회복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당시의 무역적자 누적요인을 보면 미달러화의 주요국 통화에 대한 강세, 산업조정 부진과 첨단산업을 제외한 제조업의 생산력 저하, 제조업부문 부가가치의 대GNP 점유비중이 하락한 점 등을 들 수 있고, 이밖에 무역량이 적거나 비교역재가 많은 서비스 산업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군수품에 대한 R&D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출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저수준을 유지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인저축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저수준을 지속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금년에도 미무역적자는 수출호조세가 미약하나마 지속되는 반면, 내수회복이 지연됨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로 무역적자는 작년보다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90년 일본의 무역흑자, 전년비 18.5% 감소

일본경제의 '90년 무역수지흑자

(통관기준)는 524억달러로 전년비 18.5% 감소하여 4년째 감소추세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무역수지 흑자 폭은 과거최대치를 기록했던 '86년의 827억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37%나 감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무역수지흑자가 몇년간 감소추세를 보여온 것은 해외 현지 생산증가에 따라 수출대체효과가 나타났고, 내수호조에 의한 제품수입 증대 및 수출여력의 저하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대미 수출부진이 지속된데다 걸프사태로 원유수입액이 크게 늘어난 점이 무역수지 흑자폭의 감소를 가속화시킨 요인이 되었다.

'90년의 수출입 추이를 보면 수출(f.o.b.)은 전년비 4.3% 증가한 2,870억달러로 8년 연속 증가추세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영상기기, 자동차, 사무용 기기 등을 중심으로 EC와 아시아 NICs를 대상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큰 비중을 차지했던 철강수출은 3년 연속 감소추세를 보여 주었다. 내수호조를 반영하여 수입(c.i.f.)은 자동차, 항공기, 금 등에서 높은 수입증가율을 나타냄에 따라 전년대비 11.2% 증가한 2,346억달러로 4년 연속 높은 신장세를 나타내었다.

한편, 경상수지흑자는 '89년의 572억달러에 비해 37.4% 감소한 358억달러를 기록하여 3년 연속 감소추세를 보여 주었다. 그중 여행수지 등 무역외수지는 226억달러

적자, 이전수지는 다국적군에 대한 자금지원 증가로 55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금년에 일본경제는 그동안 유가 급등으로 악화되었던 교역조건 개선,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로 인한 자본재 및 관련제품의 수출증가 예상되어 무역수지흑자는 작년보다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독일의 무역흑자, '90년 수입증가로 크게 감소

작년에 독일은 동·서독 통일에 따른 특수로 수입수요가 높아져 무역수지흑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독일(구서독 기준)의 '90년 무역수지(통관기준) 흑자는 955억마르크로 '89년의 1,346억마르크에 비하면 391억마르크나 줄어 들었다. 이는 수출(f.o.b.)은 6,463억마르크로 전년비 0.8%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수입(c.i.f.)이 5,507억마르크로 전년비 8.7%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호조를 지속하던 독일수출이 '90년에 낮은 증가율을 나타낸 것은 독일마르크화의 주요통화에 대한 강세, 선진국 및 EC의 경기둔화,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등 내수 호조에 따른 수출재의 내수용 전환, 주요 수출재의 구동독경제재건으로의 용도변경, 독일기업들의 설비가동률이 90%에 달해 생산여력이 한계에 달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수입은 통일특수로 제품수요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미 독일기업들의 설비가동률이 포화상태에 달해 해외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호조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경상수지흑자도 756억마르크로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무역흑자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부문의 흑자가 크게 줄었으며 이전수지적자도 걸프지원금으로 인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금년에도 통일특수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해외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동독경제의 재건에 필요한 부품 및 원자재의 수입증대가 예상되어 무역수지 흑자 감소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표 1〉 미국의 주요국별 무역수지* 추이

(단위 : 억 달러)

	일 본	독 일	대 만
1980	-99.2	-7.3	-25.2
1981	-157.9	-11.1	-37.4
1982	-167.8	-26.8	-45.3
1983	-192.9	-39.6	-65.4
1984	-335.6	-79.1	-97.7
1985	-461.5	-111.9	-117.0
1986	-550.3	-145.6	-142.7
1987	-563.3	-153.2	-172.1
1988	-520.7	-121.7	-126.7
1989	-490.6	-80.2	-129.8
1990	-410.7	-94.4	-111.8

* 자료 : 미 상무성,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각호.

미 상무성, *COMMERCE NEWS*, 각호.

* 수출은 f.a.s., 수입은 '88년까지 f.o.b., '89년부터는 customs 기준임.

〈표 2〉 미·일·독의 무역수지* 추이

	미 국 (억 달러)	일 본 (억 달러)	독 일 (억 마르크)
1985	-1336	461	734
1986	-1551	827	1126
1987	-1703	797	1178
1988	-1185	776	1280
1989	-1094	643	1346
1990	-1010	524	955

* 자료 : AP-DJ

미 상무성, *COMMERCE NEWS*, 각호.

* 미국의 수출은 f.a.s., 수입은 '87년까지 c.i.f., '88년부터는 customs, 일본·독일의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기준임.

로마와 농업국제기구

원광식 농림수산부 부이사관 / 주이태리 대사관 농무관

로마는 역사의 도시·고적의 도시, 그래서 세계적 관광도시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로마가 농업과 관련된 국제도시임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로마에는 UN 산하의 농업관계 국제기구가 넷이나 있다.

국제식량농업기구(FAO)·세계식량원조기구(WFP)·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그리고 세계식량이사회(WFC) 등이 그것이다. FAO는 당초 미국에서 창설되어 뉴욕에 자리잡고 있었으나 2차대전 직후 이태리정부가 건물을 기꺼이(?) 제공하게 되면서 로마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는 요즘처럼 국제기구를 자기 나라로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지금 FAO가 쓰고 있는 건물이 못소리니 행정부가 쓰던 건물이라고 하니 당시 패전 이태리로서의 사죄성 공물이 아니었던가 싶기도 하다.

그후 FAO는 계속 규모를 확대해 가면서 현재는 158개의 회원국과 7천여명(로마본부 3,500명 그리고 현지 3,500명)의 직원을 가진 세계 최대의 전문국제기구가 되었다.

또 한편 FAO의 성장은 자체규모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자매기관 내지는 협조기관으로서 다른 3개의 전문기구를 차례로 탄생시키기도 하였다. 그 첫째가 WFP로서 이는 긴급구호와 식량증산사업지원을 위한 무상원조를 담당하며, 둘째의 IFAD는 장기저리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후진국의 식량증산사업을 돕는다. 끝으로 WFC는 UN회원국 중에서 선출된 국가들의 농업장관회의로서 기아와 영양실조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협의체 기능을 담당한다.

이처럼 전문기구로서의 농업국제기구들은 세계 제일의 관광도시인 로마에 자리잡고 그들의 활동을 전개한다. 따라서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관광목적이 아닌 농업관계의 일을 보기 위해서 로마를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 국가를 대상으로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농업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모든 면에서 비중이 낮아진다고들 한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국제기구들을 보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일이 많아지며 부닥치는 문제들도 더욱더 복잡해지고 어려

워지는 것같이 보이는 것은 웬일인지 모르겠다.

세계경제는 어제보다 계속 발전해 간다고들 하는데 세계의 농업생산자들은 더 못살게 되고 식량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들의 일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딘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인 듯 싶다.

어쨌든 세계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며 158개 FAO회원국 중 OECD국가들을 제외한 130여개 국가가 농업을 주종산업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후진국의 상당수 나라가 저개발국 내지는 식량부족 후진국이라는 이름 아래 절대식량부족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FAO회의에서는 연일 떠들어댄다.

농업문제·식량문제의 심각성은 후진국에 관한 한 자못 크지만 선진국의 경우도 시각은 다를지 몰라도 농업문제의 중요성을 조금도 간과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농업 부문에 있어 10% 훨씬 미만의 인구 및 GNP 비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문제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이만저만이 아님을 회의에 나가보면 절실히 느낀다. 이처럼 선·후진국 모두가 농업문제를 심각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로마의 농업국제기구들이 바빠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니안

일본판 신조어 '3K'

오종남 경제기획원 서기관 / 일본아세아경제연구소 파견

우리나라에서 3K는 이제 웬만한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상식적(?)인 얘기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도 이 3K라는 新造語가 등장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거의 상식화되어 가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한국판 3K라는 말을 알 길 없는 일본사람이 만든 3K라는 단어는 영어 식발음의 첫 글자에서 따온 말인 점은 한국과 같으나 그 의미는 사뭇 다르다.

일본판 3K는 성씨의 이니셜이 아니라 일본인이 취직하기를 꺼리는 세가지 업종의 앞에 붙여진 형용사의 이니셜에서 만들어진 말이다. 즉, 최근의 일본인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는 패전후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해서 오늘의 부흥을 이룩한 그들의 선배들과는 달리 '더럽고(Kitanai)' '위험하며(Kiken)' '힘든(Kizui)' 업종(속칭 3K)에서 일하기를 꺼리는 풍조가 급속하게 만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의 기업들은 계속된 경제호황의 결과로 초래된 전반적인 일손부족현상 때문에 초일류

기업이 아니면 사람 구하는 데 보통 애를 먹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중소기업, 특히 3K에 속하는 업종의 기업이 사람을 못 구해서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음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지난해 우연한 기회에 평화경제계획회의라는 단체의 초청을 받아 '한국의 경제발전과 근로자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한 적이 있다. 놀랍게도 이 회의(?)라고 이름 붙인 단체는 일본의 일손부족과 외국인 불법노동자 유입문제에 관한 대응책을 노동성(우리의 노동부)의 의뢰를 받고 연구하고 있었다. 일본의 3K업종을 중심으로 일손부족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늘어나는 외국인 불법노동자(특히 동남아인)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를 정부가 직접 연구하기는 뭐하니 민간연구기관 같은 단체에 맡겨서 연구하고 있는 인상이었다. 실제로 공무원, 교수 등 각계 인사가 폭 넓게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몇년에 걸친 장기연구의 시작단계여서 아직 결론을 알기는 어려우나 느낌으로는 일본의 당면한 일손부족문제를


외국인 근로자(참고 : 일본어에서 '외국인'의 개념은 卑下の 의미로 쓸 때는 황·흑인종이며 백인은 이 범주에 넣지 않는다)를 유입하여 해결하게 되면 향후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결국 지적하지 않을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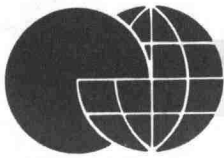
그들이, 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하고 저급(단순)근로자의 이민은 가급적 억제한 독일을 일손부족을 가장 현명하게 해결한 나라로 치는 것만 보아도 그렇다. 반면, 미국이 오늘날 처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기본 원인이 너무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취함으로써 국민의 전반적인 질을 떨어뜨렸기 때문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이를 보면서 언뜻 머리에 떠오르는 두 가지 생각이 나를 우울하게 한다.

첫째, 우리 경제사회의 조로화현상이다.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을 다투는 일본에 3K현상이 오는 것은 어쩌면 인간성의 자연스런 발로인지도 모르나 '한국이 벌써?'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주변에도 이미 비슷한 현상이 적지 않게 눈에 띈다.

둘째,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불법근로자 문제를 누가 어느 정도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 듣지 못했다.

중장기 대책은 고사하고 단기대책이라도 누군가가 세우고 있으리라고 믿으며, 이러한 우려가 나의 무지와 과문의 탓이기를 바란다. 



언어가 풍부한 나라

최재유 체신부 사무관 / 만국우편연합(UPU) 파견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여 경상남북도

도를 합한 정도의 크기의 국토로 UN에 가입하지도 않았으면서 UN의 유럽본부, 세계아동복지기금(UNICEF), GATT,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만국우편연합(UPU), 국제노동기구(ILO), 국제기상기구(WMO), 국제보건기구(WHO),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의 각종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있는 나라. 관광·금융·정밀기계·시계·화학제품·의약품 등의 산업으로 세계 제일의 국민소득을 자랑하는 나라 스위스.

파견된 지 1년밖에 안되는 일천한 경험으로 나는 이 나라 스위스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도 풍부한 자원이 다양한 언어라고 말하고 싶다.

알프스산맥을 기준으로 독일·오스트리아 쪽의 주리히, 베른·바젤 등을 중심으로 한 독일어권, 프랑스 쪽의 제네바·로잔느·뉴샤틀 등을 중심으로 한 불어권, 이태리 쪽의 루가노·로카르노 등을 중심으로 한 이태리어권에 고대 로마어인 레토로만슈어를 합치면 공용어가 4개인 셈이다.

스위스인들은 학교교육을 통해 자기

거주지역 언어에 따라 타지역 언어 및 영어 등을 습득하여 정상교육을 받는 경우 3개 정도의 언어는 구사하고 있으며, 또 학원 등을 이용하여 많은 직장인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꾸준히 언어습득을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일전에 업무차 주리히 지역을 방문한 체신부직원을 안내한 주리히 PTT 직원이 6개 국어를 할 줄 안다고 하면서 한국말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한 말은 아주 인상적이었다.

오늘날 세계는 국제화·개방화시대, 지구촌시대라고 불리고 있다. 이런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외국어 능력이 요구된다.

우리의 외국어 능력에 대한 현실을 돌아보자. 지금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등교육부터 시작하여 영어만 하더라도 6년에서 10년 이상 배웠다. 그러나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자유로운가?' 하고 물었을 때 영어권에서 살았거나, 근무했거나, 공부했거나, 회의에 참석했거나, 여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는 것이 정직한 답변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어렵기는 하지만 간단하다.

한 가지 언어를 마스터하려면 약 2만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도 외국어 습득에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의 외국어교육 정책면에서는 좀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학교교육을 통해서 영어를 6~10년 배우고도 영어권 사람들에게 말 꺼내기가 부담스러운 현실을 극복해야겠고, 이미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각 개인들도 일주일에 한 두번 골프장, 테니스코트, 기원 등에 나가는 정성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외국어 외에 한 가지 언어를 더 구사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지난 여름, 정부의 여행자유화 정책에 힘입어 많은 학생들이 유럽여행을 나와 딱딱한 빵과 밤열차로 경비를 절약하면서 한 곳이라도 더 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한국의 장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확신하였다. 다니면서 외국어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을 것이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각국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나름대로 느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기업인이 '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고 하였는데 넓은 세계를 상대로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는 것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 중의 하나가 아닐까? **김재**

만 남



극작가 신봉승이 만난
최각규 부총리

‘나라경제의 새 사령탑’

신봉승/극작가

“

지난날의 경험을 큰
재산으로 삼아서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주인공인
'근로자'와 '기업가'가
공감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근로의욕, 기업의욕이
고양되고 기업이
국민의 기업이 되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
제 신념이자
경제운용철학입니다.

”



때 : '91년 4월 16일
곳 : 정부제1청사
부총리 집무실

지금까지는 인터뷰를 받기만 했던 처지라 그리 부담이 되지 않았으나 이번 일은 생소하고 쑥스러운 것이었다. 이 일을 주관하는 분들은 나와 최각규 부총리가 죽마고우라는 점에 착안한 모양이지만 나는 경제에 문외한이기에 더욱 부담이 되었다.

최각규 부총리는 1955년 고등고시 행정과(7회)에 합격하여 약관 22세로 官界에 진출했다. 그후 재무부, 기획원의 차관을 거쳐 상공, 농수산부장관을 역임했다. 관직에서 물러나서는 한국화약, 경인에너지의 회장으로 실물경제에 관여했고, 1988년 고향인 강릉에서 지역구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하더니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의 중책을 역임했고 뒤이어 경제총수인 부총리에 중용되어 다시 官界로 돌아왔다.

참으로 화려하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세종로에 자리잡은 정부종합청사의 19층, 그리 넓지 않은 부총리집무실에서 그와 마주 앉았다. 사석이었다면 서로 흥금을 터놓고 농을 주고 받을 처지였지만 공식적인 만남(인터뷰)이라 미리 준비한 질문서를 주섬주섬 펼쳐놓고, 필기 준비를 갖추면서 녹음기의 스위치를 올렸다.

—어려운 때에 중책을 맡으셨습니까만, 그간 많은 인터뷰를 하신 탓에 계수나 수치를 필요로 하는 내용은 많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인식에 관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편하신 마음으로 좋은 말씀을 들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한 일이다. 공연히 가슴은 두근

거리고 첫 질문은 더듬더듬 유창하질 못했다. 부총리는 그런 나의 부담을 덜어주듯 특유의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끄덕인다.

—부총리께서는 경제관료로서 거쳐야 할 요직은 모두 거치시고, 지금은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경제부처의 총수의 자리에 계십니다. 부총리의 경제운용철학을 들려 주셨으면 합니다.

▲철두철미한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대를 회고한다면 개발과 산업화의 시대가 되겠습니다만, '90년대는 개방과 국제화의 시대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개발과 산업화의 시대는 정부주도랄까, 정부가 앞에서 끌어주는 패턴이었다면 지금은 그때와 전혀 다릅니다. 경제가 운영되는 데는 나름대로의 룰이 있는데, 정부는 앞에 서기보다는 경제주체가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룰을 잘 지키도록 하는 성실한 관리자, 공정한 심판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난날의 경험을 큰 재산으로 삼아서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주인공인 '근로자'와 '기업가'가 공감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근로의욕, 기업의욕이 고양되고 기업이 국민의 기업이 되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 제 신념이자 경제운용철학입니다.

최부총리의 이론은 명쾌했다. 그는 지난날의 경험을 거울로 삼으면서 오늘의 경제를 이끌어가겠다는 대목에서는 뚜렷한 신념과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시각은 다르다. 인플레 기대심리와 정부시책에 대한 불신감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지난 1·4분기 중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이 4.9%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여론조사기관(D.S Reserch)의 조사에 의하면, 발표보다 20%나 더 올랐다는 응답률이 65.9%로 나타났고,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한 전망이 79%나 되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엄청난 갭을 어떻게 수용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물가지수를 산출하는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니까 어느 나라나 모두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비록 물가지수는 4.9%로 나오지만 피부로 느끼는 물가와와는 다르게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10% 오른 것도 있고 심지어 50%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르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는 생활수준에 따라서 다르고, 계층이 달라도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의 상승률은 가중치의 평균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가지수를 산출하는 통계가 있는 한은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느끼는 실감과의 갭은 있기 마련이지만, 문제는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그런 갭은 자연히 없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파안대소를 했다. 그렇다. 물가만 오르지 않는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최부총리는 부연한다.

▲물가는 수급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플레 기대심리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의

최각규 부총리(우)와
작가 신봉승씨는
오랜 죽마고우이다.



모든 경제정책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물가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부총리는 물가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면서도 우리 경제의 현실과 전망에 대해서도 소상히 언급했다.

▲우리도 이제 선진국대열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그것은 기술경쟁에서 이겨야만 하는 엄청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우리를 경쟁대상국으로 보면서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동안의 축적된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개방압력이 밀어닥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경제는 찬바람을 쏘이기에 아직 여러 새싹이나 다름 없습니다. 좀더 보호받아야 옳으나, 개방이라는 찬바람은 이미 불어 왔습니다. 때문에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부총리의 어조는 점차 강렬해진다. 앞에서 말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관심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하는데 정치적인 민주화와 경제의 선진화를 동시에 이루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솔직히 털어 놓았다.

나는 문화계의 일각에서 30여년을 살아오면서 우리 정부의 문화적인 무감각을 늘 탓해 온 사람이라 그 점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국민정서의 붕괴로 인해 여러 곳에서 불미한 일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국민정서의 제고라는 차원에서 문화예술의 창달이라는 과제를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질문의 내용이 문화예술분야로 옮겨지자 부총리는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는 격'이라고 겸손해 하면서도 뚜렷한 의지를 개진해 보였다.

▲지난날, 경제개발에만 주력했던 탓으로 국민정서의 제고나 문화예술의

창달에 소홀했던 점은 인정해야 하고 또 반성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가난했던 시절에도 전통문화의 보존이나 전수에 대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은 어느 나라에도 못지 않았습니니다. 그런 문화민족의 저력이 문화부를 탄생시키지 않았습니까. 저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문화계 최고의 권위인 문화부장관이 문화인식에 관해 소신있게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서 늘 흐뭇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의 이 시점을 문화원년(文化元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부의 예산은 총 예산의 0.38%에 불과합니다. 독일이나 불란서의 수준인 1%가 되자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부총리는 예산을 관장하는 경제부처의 주장이다. 그는 나와 의미있는 시선을 마주치며 잠시 미소지은 뒤 입을 연다.

▲문화예술의 진흥이나 창달이 꼭 돈만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되겠지요. 돈보다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하질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지난날과 같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분야도 타분야와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원년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는 속언도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라 해도 부총

극작가 신봉승씨는 '33년 강릉에서 출생하여 경희대 국문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현대문학'에 시·문학평론으로 등단했으며, 한국방송대상·대한민국예술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주요작품으로는 대하소설 '조선왕조 500년'(48권) 외 '바보상자' '연산군 시집' 등이 있다. 현재 PEN 한국본부 이사로 있으며 한국역사문화연구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리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이 이만하다면 반가운 노릇임에는 분명하다. 그는 다시 부연했다.

▲마츠시타 정경의숙에서 가장 중시하는 과목은 「논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목은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지만 「논어」의 강의만은 맨바닥에 앉아서 원문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이것은 기업인의 도덕을 재무장하며 인간성의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기업도 이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더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은다면 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때쯤부터 나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여쭙고 싶은 것은 태산같은데 시계의 바늘은 멈추지 않는다.

—부총리께서는 의원직을 겸직하고 계십니까만, 지역구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람에게는 꼭 갚아야 할 은혜가 세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고, 다른 하나는 가르쳐주신 은사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의 제가 있도록 편달해 주신 고향 시민들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일단 정부에 와서 국무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상은 국가에 책임있게 봉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물론 지구당 당원들의 동의는 얻었습니다만 송구한 마음은 있지요. 그러나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도리를 다할 생각입니다.

—오랜동안 관직에 계시면서 많은 경험과 업적을 쌓으셨습니다. 후배 공무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텐데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자기의 생각을 가져야 하겠지요. 뚜렷한 시각과 확고한 신념이 없고서는 급변하는 현실문제에 대처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소신과 책임이 따라

야만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가 있고, 또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최각규 부총리는 취임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盡人事待天命'이라고 말한 일이 있다. 이 말은 그의 인생철학과도 무관하지 않다. 오늘의 인터뷰에서도 부총리는 책임과 소신을 몇번이나 강조했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겨를이 없습니다. 건강할 때 열심히 뛰어다지요.

—취미는 무엇입니까?

▲글쎄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취미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각규 부총리.

그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무의 베테랑이면서도 인간성의 회복과 도덕의 재무장을 누누이 강조했다. 나는 이번 일로 그의 후덕함을 다시 확인한 것이 기뻐다. 그것이 바로 덕치(德治)의 근원이기 때문에. 신봉승

여신관리제도 개편

—의의 및 주요내용—

與信管理制度란 금융자금이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면서 은행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대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은행이 건전하게 경영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74년부터 기업신설·취득 등의 기업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소요자금을 은행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기업 스스로가 조달하도록 하는 등의 여신관리를 해왔으며, '84년부터는 은행 총대출금 중 30대 계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지도록 하는 여신한도관리(바스켓관리)를 병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여신관리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로 우리 경제의 특수한 여건하에서 불가피하게 운용해 왔으며 그동안 상당한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도개편의 배경과 기본방향

그러나 최근의 급변하는 내외여건에서 개방화와 국제화는 더욱 진전될 전망이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고 금융기관의 대응능력도 미미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기업이 외국의 우수한 기업과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보다 많은 투자와 기술개발을 해나가면서 업종 전문화와 함께 금융기관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과제이다.

그런데 여신관리는 이러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활동을 획일적으로 제약하는 문제가 있어



김종창
재무부 금융정책과장

그동안 이를 부분적으로 보완해 왔으나 이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 이르렀다.

또한 일부에서는 여신관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이 세계 무대에 나가 외국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하기에는 부족할 뿐 아니라, 자금 조달면에서도 외국기업은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자금을 마음대로 골라 쓰고 있는데 우리 기업은 '여신관리'라는 틀에 묶인 상태에서 외국기업을 따라잡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자금을 대한 초과 수요가 있고 은행금리가 실세금리보다 낮아 은행대출 자체가 특혜로 인식되고 있는데다가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선진제국의 대기업과 달리 주식분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주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은행도 스스로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데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신관리제도를 아직 폐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여신관리제도의 기본취지는 계속 살려 나가면서 기업과 은행이 자율적인 경영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정책방향과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를 개편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제도개편의 주요내용

여신관리대상계열 선정기준의 변경

지금까지는 여신한도 관리대상 30대 계열은 총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규제대상 계열은 총 여신기준(1,500억원 이상)으로 선정하여 왔다. 그러나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받고 있는 규모가 큰 계열을 대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보다 여신관리의 기본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여신관리한도 대상계열은 총대출기준으로 상위 30대 계열을,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규제대상은 상위 50대 계열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때의 총대출금 산정과 바스켓관리대상 대출금 산정에 있어서도 자금의 특성상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금융기관 국외지점 대출금과 연불수출금융만을 제외한 모든 은행대출금 기준으로 일원화하였다.

한편 과거에도 여신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은행 또는 법정관리 계열은 은행 또는 법원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므로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시켜 관리의 실효성이 있는 계열을 중심으로 여신관리대상 계열이 선정되도록 조정하였다.

주력업체를 중심으로 한 경쟁력강화와 전문화 유도

각 계열기업은 제조업경쟁력 강화와 업종진화를 위해 필요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중에서 주거래은행과 협의하여 3개 이내의 주력업체를 정하도록 했다. 주력업체에 대해서는 여신한도(바스켓)관리대상에서 제외하되, 주력업체에 대한 대출금이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에서 자금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주력업체가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아 공장부지를 취득하거나 계열내의 다른

**앞으로 우리 기업이
외국의 유수한 기업과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보다 많은
투자와 기술개발을
해나가면서
업종 전문화와 함께
금융기관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과제이다.**

기업이 주력업체에 투자하는 경우 또는 주력업체가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해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주식·부동산 매각이나 증자 등의 自救努力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그러나, 기업투자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자한도 제한 등의 규제는 계속 받게 된다.

또한, 주력 이외의 업체를 처분하는 계열에 대해서는 2개 이내의 범위내에서 주력업체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정된 주력업체는 일정기간(3년) 동안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력업체 이외의 업체에 대한

여신한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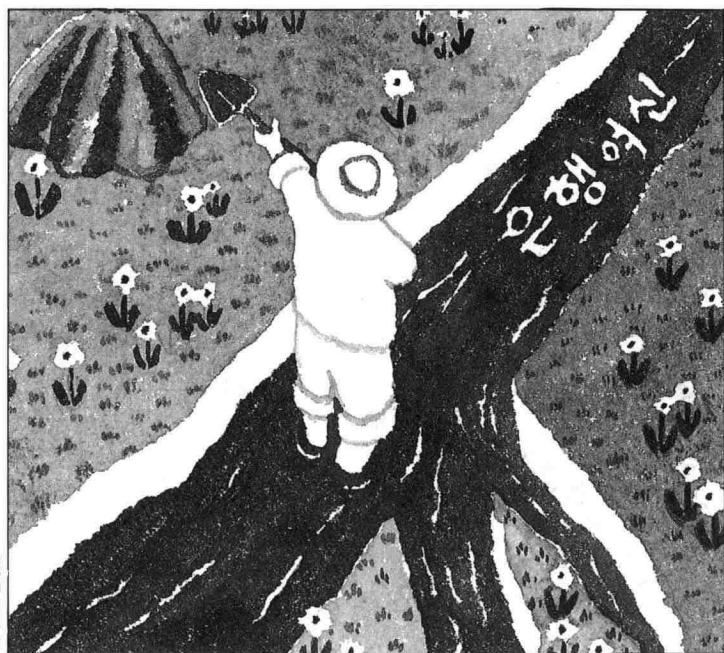
주력업체 이외의 업체에 대하여는 여신한도 관리를 하게 되는데 '91년도에 적용할 바스켓 비율은 5대 계열에 대해서는 현 수준보다 낮추고 6~30대 계열에 대해서는 현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별·계열별 관리를 병행해 오던 것을 은행별로만 관리하도록 하여 계열간 경쟁을 촉진시키면서 은행의 과중한 업무부담도 완화시켜 나가고자 하였다.

31~50대 계열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

31~50대 계열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여신 관리는 부동산취득시 주거래은행의 승인제도만 계속 유지하고 자구의무는 부과하지 않으며, 기업출자의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의 승인 및 자구의무를 모두 면제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자제한 등의 규제만 받도록 하였다.

권영민 특기서신



주식분산이 잘 된 기업에 대한 우대

주식이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국민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가 크더라도 여신관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계열주, 계열사,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8% 이하인 상장기업 중에서 주거래은행이 신청을 받아 은행감독원이 국세청과 증권감독원에 의뢰하여 주식분산 여부를 확인하여 이들 기업은 여신관리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였다.

제도개편에 대한 우려와 대응방향

은행자금의 주력업체 집중 우려 없어

이번 제도개편에 따른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일부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먼저 주력업체가 은행의 자금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주력업체 대출금이 바스켓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주력업체에 대한 대출금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우선 통화관리 등으로 은행의 대출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한정된 대출재원으로 은행이 자금운용을 함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을 지켜야 하므로 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은행의 자금운용은 수출산업설비, 시설재, 에너지절약시설 확충 등 많은 부분이 제조업에 중점 지원되도록 금융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주력업체가 기술개발 등을 위한 설비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다소 지원의 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나 기타 운전자금 등의 지원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신한도관리에서 제외되는 주력업체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대출심사와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력 이외의 업체에 대한 비율을 낮추어 가는 등 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방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므로 은행자금이 주력업체에 집중될 우려는 없다고 하겠다.

제조업을 주력업체로 선정한 기업이 수혜폭 커

한편 경제력집중이나 기업확장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독점규제나 공정거래 관련 법률로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의 경우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제도를 중심으로 규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두번째로는 일부에서는 주력업종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업 경쟁력 강화라는 의지가 퇴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으나 주력업종을 일부 업종으로 한정하는 것은 산업의 균형적 발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별도로 주력업종 리스트를 정하지 않고 계열기업이 주거래은행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주력업체를 선정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제도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주력업체와 관련한 자구의무 완화도 공장부지 취득, 신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주력업체로 선정할 경우 비제조업에 비하여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비제조업을 주력업체로 선정하는 경우 제도개편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스스로 경쟁력이 있는 업종이나 장래 유망한 업종을 중심으로 주력업체를 선정할 것이며 은행도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건전경영을 하기 위해서 성장가능성이 크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지원해야 하므로 기업과 주거래 은행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강화나 전문화가 가능한 업체를 주력업체로 선정하게 될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제도적 보완

세번째로는 여신관리제도 개편에 따라 중소기업자금지원이 소홀하게 취급될 것이 아니냐는 일부 우려도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의무대출비율을 설정하여 은행대출증가액의 일정비율이 반드시 중소기업에 대출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또한 무역금융, 수출산업설비금융, 상업어음 한은재할 등은 중소기업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국산기계수요자금용, 특별설비자금 등에 대해서는 지원자금의 절반 정도를 중소기업에 지원되도록 하고 있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으므로 자금지원이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 재할인율도 당초 3월 시한에서 9월 말까지 연장하여 적용토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제3자명의 부동산 담보취득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에서는
인위적인 조정수단을
강구하기보다는
기업과 은행이
환경변화에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제도를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여신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력업체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대출심사와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주력 이외의 업체에 대한 대출비율을 낮추어 가는 등 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방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기업과 은행,
환경변화에 자율적으로 대처해야**

정부로서는 주력업종의 제한이나 비주력업체에 대한 불이익 등 인위적인 조정수단을 강구하기보다는 기업과 은행이 환경변화에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일부의 우려를 떨치고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업은 스스로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자제하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투자·육성해 나갈 업종을 영위하는 주력업체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을 개발해 나갈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우수한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며, 은행으로서도 그동안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해 미비했던 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면서 자율적으로 성장가능성이 크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중점 지원해 나가는 한편, 그 결과에 대해서 은행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확고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여신관리는 정부의 강제적인 규제라기보다는 은행과 기업의 관계이므로 은행과 기업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자율과 스스로의 책임하에 호혜적인 협조와 합리적인 견제를 할 수 있는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본문**

농업구조개선에 부응하는 농지제도의 정립

우리 농정은 지난 '80년대 중반까지 시대의 과제였던 모자라는 主穀의 자급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 왔으나, 주곡의 자급이 달성되고, 농업을 둘러싼 국내외의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농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여기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농업구조개선으로 대외개방에 대응

그동안 우리 농업의 대내적인 여건을 보면, 주곡이 부족하던 시대에서 남는 시대로 전환되었고 쌀소비도 계속 감소될 전망이나 농업구조는 아직도 쌀생산 중심의 영세한 소농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생산기반투자도 벼농사 위주로 확대되었지만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밭작물에 대한 투자는 취약한 상태이며, 농업인력이 점차 노령화·부녀화되고 농촌노임의 상승으로 기계화가 되지 않고 서는 영농이 어려워지고 농촌의 활력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렇게 국내농업 여건이 취약한 상태에서 대외적으로는 국제화라는 세계적인 조류가 밀려오고 있으며, UR 협상이 어떤 형태로 타결되든지 간에 우리 농업은 단계적으로 대외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경쟁력을 도외시한 농업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UR 등 대외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정의 대방향전환과 함께 농업구조개선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단계에 와 있으며,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기



나승렬
농림수산부 농지관리과
사무관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의 근간인 농지제도의 재정립과 농업생산기반의 완비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농지제도의 기본방향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지제도는 1950년 농지개혁 이후 耕者有田 원칙 아래 농지매입자격의 제한과 3ha 소유상한제를 고수하여 왔으며, 여기에 더하여 '72년부터는 농지의 보전과 이용규제에 역점을 둔 절대농지·상대농지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동안의 제도는 주곡의 자급달성과 국토의 환경보전에는 기여하였으나, 소유상한제 고수로 영세 소농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규제 위주의 절대농지제도 운용으로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비농업적 토지수요증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한편으로는 비농업적 농지수요증가에 따라 스포츠평화, 농업환경이 오염되는 현상까지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의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고 대외개방에 대응,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앞으로의 농지제도의 기본방향은 첫째, 농업생산의 기초인 농지를 우량농지 중심으로 적정 면적을 확보하여, 생산기반투자를 완비하고 둘째, 영농규모확대를 위하여 농지소유상한을 확대하고, 농지매입지원을 강화하며 셋째, 농촌의 활력화로 농촌에 사람이 모여 살게끔 비농업목적의 농지활용을 대폭 허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량농지 확보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종래의 절대농지제도는 필지별로 절대농지와 상대농지가 혼재되어 있어 생산성이 높은 우량농지만을 대상으로 투자를 집중할 수도 없고, 생산성이 낮은 농지만 골라 비농업목적으로 전용하기도 어려웠다. 따라서 권역별로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생산기반투자를 집중, 농업목적으로 계속 보전하기 위하여 진흥지역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종래의 농업지원이 타협적 분배방식의 분산지원으로 인해 선별적 집중지원에 의한 구조개선에 기여하지 못했고, 정부의 재원 형편상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포함한 모든 농지에 대하여 기반투자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진흥지역제도의 도입으로 농업측면에서는 UR협상에 따른 수입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국토이용측면에서는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수익성이 높고 산업수요나 공공성이 높은 공공용지, 택지 등으로 적절하게 배분함으로써 전체 토지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흥지역지정에 대한 여론동향을 보면, 평야지대에서는 농업진흥지역제도를 선호하나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지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을 희망하며, 도시 근교에서는 전용규제완화에 따른 지가 상승을 기대하여 진흥지역지정을 원하지 않는 반면, 산간오지에서는 타용도로의 전용도 어려운 현실이므로 진흥지역에 편입되어 기반투자 등의 정책지원을 희망하는 등 지대에 따라 다른 여론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진흥지역제도가 도입되면 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밖의 농지보다 전용이 어려워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진흥지역 안의 농지소유자는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권역별로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생산기반투자를 집중,
농업목적으로 계속
보전하기 위하여
진흥지역제도를
도입하였다.**

점이다. 따라서 진흥지역의 순조로운 지정과 정착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지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정 후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는 진흥지역의 지가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소유농민의 소득이 충분히 보장되게끔 지원해 나가야 한다.

즉, 진흥지역에는 경지정리·농로 등 생산기반 조성과 농지집단화를 위한 교환·분합, 집하장 등 산지유통시설과 농업기계화의 우선 지원 등 영농기반완비를 위하여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농어민 후계자도 진흥지역 위주로 선정·육성하며 농지매입지원자금, 영농자금 등을 우선 지원하고, 추곡수매, 가격안정 등의 지원도 진흥지역에 집중하는 등 진흥지역에서는 전업농가가 적정 규모로 발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농지가격안정과 농지거래 활성화

진흥지역에 대한 각종 농정지원의 집중계획에도 불구하고, 진흥지역 안의 농지규제 우려

로 거래가 침체되고 가격이 하락하거나, 진흥 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전용규제완화로 가격이 상승하면 농지유동성이 저해되어 농업구조 개선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나친 농지가격의 상승이 농민의 농지소유욕을 자극, 농지유통화를 통한 영농규모확대 등 농업구조 개선에 실패한 전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예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격에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즉 자산가치를 중시하는 측면에서는 도시의 지가나 비농지가격 상승에 비해 농지가격의 상승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주된 불만사항인 반면, 생산요소 측면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농지가격의 상승은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영농규모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쌀생산비 중 토지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 53%, 일본 17%, 미국 9%인 점을 감안하면 농지가격의 상승은 UR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더욱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농지가격의 지나친 상승이나 하락은 다 같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최근 농지거래에 관한 여론동향에 의하면 (3월 초 40개 군지역 현지 조사 결과), 농지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농민이 재산적 손실을 보기 때문에 비농민에게도 농지매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도 있으나, 대부분은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제한하는 경자유전 원칙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에서도 비농민의 농지매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일본에서는 市·町·村농업위원회에서 농지거래를 허가하며, 대만에서는 鄉·鎮長이 자경능력 증명을 발급하고, 서독에서도 지방위원회에서 농지매입자격과 농지가격을 심사하는 등 경작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농민의 소득증대,
생활편의나 지역개발에
필요한 농지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

자만이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耕者有田 原則을 제도화하여 실천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 의한 경자유전 원칙을 견지하되 농지거래가 침체되고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다른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지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3ha 소유상한을 완화하여 능력 있는 농민에 의한 농지매입을 촉진하여 농지경작수요를 늘리고 농지매매증명발급요건을 완화해 나갈 것이다. 즉 통작거리 8km를 20km로 확대하고, 매매증명발급확인인원을 3인에서 2인으로 줄여 농민의 농지거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며, 또한 농지매매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지매입지원자금을 단계적으로 증액할 것이다.

농지전용규제완화와 농지의 종합적 활용

사회 전체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농촌에 사람이 모여 살게 하는 농지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농민의 소득증대, 생활편의나 지역개발에 필요한 농지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미 '89년 7월과 '90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농지전용 규제완화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금년에도 4월 중으로 농공단지조성을 위한 농지전용권한을 전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추가로 전용규제완화조치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농지전용규제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농지전용규제가 까다롭다고 하는 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수도법·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토지이용 관련 법규의 규제사항을 모두 농지전용규제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데다가, 투기가 성행하는 일부 지역에서 경직되게 농지전용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장설립을 하는 데 필요한 농지전용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일부 기업가가 국토이용계획상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경지지역의 우량농지를 미리 확보하여 전용을 요구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마음대로 농지에다가 공장을 짓겠다는 것인데, 일부기업의 요구대로 농지전용을 허용할 경우 공장입지면에서 무계획적인 산발 배치가 되어 산업정책상 바람직하지 못하고, 공장폐수로 인한 농업환경 오염문제도 심각해질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지가상승을 노린 투기목적의 농지전용요구일 가능성이 크므로 농지전용 허용시 특혜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한 앞으로 10년간 공장용지 수요는 3,500만평으로 추정(국토개발연구원 연구결과)되는 데 비해 '90년 1년간 농지감소면적은 5,400만평이므로 기업이 원하는 공장용지의 수요는 보전할 우량농지 이외의 농지에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량농지에 공장을 건설하겠으니 농지전용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일부 기업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한정된 농지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농지의 종합적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첫째, 비농업토지 수요증가에 대응한 계획적 공급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즉 국토이용계획상 택지·도로·공장용지 등의 수요를 최대한 수용하되, 미리 예정지역을 지정한 후 과감한 전용을 허용하고, 특히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환경보전 등을 감안하여 개별자유입지를 지양하고, 국가공단·지방공단·농공단지 등 계획입지 위주로 공급체계를 확립하여 농지전용을 허용할 것이다.

둘째, 농공단지 및 지방공단 입주기업의

농지소유상한 확대는 진흥지역 내의 자경농민에게만 적용하여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진흥지역 밖에서는 현행 소유상한을 유지하여 농지투기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사원전용아파트 등 편의시설 소요부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도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관광휴양수요증가에 대응하여 한계농지와 배후 산림지역을 포함한 국민관광휴양단지를 개발토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농어촌진흥공사가 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대상으로 택지·공장용지·草地·관광용지 등으로 종합 개발하여 지역주민 또는 희망하는 비농민에게 분양하고, 개발이익은 농어촌 발전에 재투자토록 할 것이다.

농지소유상한 확대로 영농규모화 도모

'58년 이후 6차에 걸친 농지법 개정 때마다 부딪힌 농가간의 형평문제, 도시자본에 의한 농지과점 우려를 무릅쓰고 농지소유상한을 확대하려는 배경은 현재의 평균 1.2ha의 영농 규모로는 UR 이후 외국농업과의 경쟁이 어려우므로 영농능력과 의욕이 있는 농민의 영농 규모화에 제약요인이 되는 소유상한이라는 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자는 데 있다.

적정소유상한에 대해서는, 농민여론에 의하면 5~10ha이라는 의견과, 농업기계화로 이윤을 볼 수 있는 규모가 6.1ha(농촌경제연구원 연구결과)라는 의견 등이 있으나, 앞으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공청회 등에서 여론을 수렴하여 적정규모를 결정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소유상한확대는 진흥지역 내의 자경농민에게만 적용하여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진흥지역 밖에서는 현행 소유상한을 유지하여 농지투기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과 같은 이번 농지제도 개편은 국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 농업을 자생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한편, 농촌의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農政의 크나큰 발전전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방안

오늘날 선진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신기술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개발된 기술의 보호를 위해 산업재산권화하여 활용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산업재산권이 국제통상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되고 있고 산업재산권 분쟁이 빈발하는 이외에 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이 어려워져 기술도입에 따른 기술료 부담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89년 한 해 동안 763건에 9억 3천만달러 수준이었던 기술료가 '90년에는 738건에 10억 9천만달러로 10% 이상 늘어났음이 이를 입증해 준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수출지향적 경제체제인 우리나라로서는 기술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는 물론 개발된 기술을 권리화하고 그 권리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외국으로부터의 산업재산권 관련압력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

중소기업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배경

산업재산권 출원동향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제도는 과거 수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여 '89년 처음으로 연간 출원건수가 10만건을 돌파한 이후 '90년에는 11만 4천여건에 달해 매년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출원의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인 측면에



류명현
특허청 지도과장

서도 건설해져 2만 6천여건의 특허출원 가운데 전자·정밀화학 등 첨단분야의 출원이 40%를 점유하여 기술의 고도화가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내국인 특허출원이 전체의 35%로 5년 전인 '85년의 25%에 비해 크게 성장하였으며, 특히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특허등록면에서 볼 때 전체의 30%로 대기업을 상회하기에 이르러 중소기업체의 기술개발 노력이 매우 활발함을 보여 주고 있다.

산업재산권 활용실태

특허와 실용신안의 산업재산권은 고도의 기술적 가치를 가진 인간의 지적창작물이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수반되는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얻어진 기술개발결과가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 그것을 개발한 사람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표 1> 특허기술의 사업화율 비교

(단위: %)

	'82	'88	일본('84)
특 허	13.5	21.7	41.3
실용신안	23.9	19.5	39.9
평 균	18.7	20.6	40.6

그러기에 개발된 기술이 권리화되고 제품생산으로 연결되어 적극 활용되어야 하나 실제 활용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89년 특허청이 자체조사한 바에 의하

면 특허기술(실용신안포함)의 활용률이 20% 수준에 불과해 일본의 절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 더욱 심각하므로 활용제고를 위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특허기술 활용상의 문제점

특허기술의 활용이 저조한 것은 여러 요인에서 찾을 수 있겠으나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소기업은 자금이나 인적구성면에서 취약할 뿐만 아니라 특허권을 얻기까지의 기술 개발과정에서 자산을 거의 다 소진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 정작 사업화하려 할 때는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에 봉착하는 예가 적지 않다.

또 제품생산에 요구되는 기술·경영능력이 부족하므로 사업화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허기술은 그 성질상 시장성 및 경제성 판단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도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이밖에 특허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산업재산권의 총체적 관리를 맡고 있는 특허청이 지금까지는 주로 권리를 설정하고 보호하는 소극적인 기능에 머물러 설정된 특허기술이 활용되는 데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어 활용상 애로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소기업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내용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표 2〉 사업화 추진시 주요 애로사항 (단위 : %)

	개인	법인	계
자금확보의 어려움	31.6	4.4	14.7
시장성 및 경제성 불확실	24.5	31.7	28.9
제품생산에 따른 기술부족	5.4	2.9	3.8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특허기술이 활용됨으로써 제조업의 경쟁력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특허출원·등록동향 및 사업화실태를 감안,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특허기술이 활용됨으로써 제조업의 경쟁력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했다.

우선 특허기술의 사업화시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금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별도자금을 신설하는 외에 각종 자금이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자금대출시 요구되는 담보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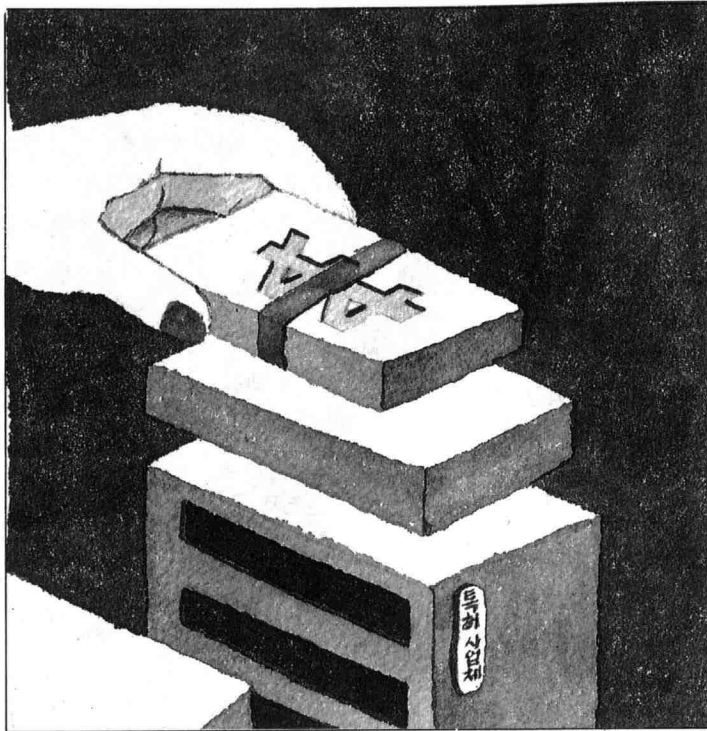
종합적 지원체제 구축

그리고 특허기술 사업화제품의 성능 및 사업타당성 평가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간편하게 실시함으로써 성공가능성을 조기진단해 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자금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특허기술을 사업화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체의 안정적 수요확보로 경영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판매측면에서의 지원과 함께 경영지도·세제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필요자금의 원활한 조달

기존의 각종 지원자금 가운데는 물론 특허기술을 가진 자가 수혜할 수 있는 자금이 적지 않았으나 특허기술이 갖고 있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각종 지원제도에 부분적으로 편입·산재되어 있어 지원효과가 적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특허기술을 가진 사람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의 창업조성자금에서 50억원을 특허기술 사업화업체에만 지원하도록 특별자금을 신설하였으며,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 등의 기술개발자금이 특허기술사업화업체에 우선 지원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원리스트 김명근

기능과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시장성·사업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제품을 실제로 만들어 보아야 한다는 취지하에 추진 중인 본 지원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건당 지원한도가 1천만원으로 너무 적어 제작과정에서 중도포기자가 속출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이번엔 이를 개선하여 올해부터는 지원한도액을 철폐해 실제작비에 가깝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기술적 미비점 보완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제품에 대해 기술적 측면에서의 사전분석을 거침으로써 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기술 및 품질평가로 대외적인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품의 성능·품질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공업진흥청 산하 국립공업시험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의뢰한 특허기술 사업화제품은 시험검사 수수료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우선 처리된다.

현재는 공공시험분석기관인 국립공업시험원에서만 이를 시행하고 있으나 특허제품 가운데는 여기서 시험분석이 어려운 것이 적지않아 점차 다른 전문분야별 연구기관과도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특허기술 사업화업체는 기술선진화업체 선정시 加點이 부여되는 등 선정에 필요한 요건이 완화되고 있고 기계류·부품·소재의 국산화개발 지원에서도 우선선정대상이 되어 종합적인 기술지도는 물론 자금·경영·세계면에서의 지원이 강화되었다.

사업화 제품의 판로확대

특허기술을 사업화하여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토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장조성과 경영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허기술 사업화제품은 공공기관들이 업종

그러나 이러한 자금을 이용하는 데는 각기관에서 담보를 요구하고 있어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자는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담보문제의 해결이 가장 선결적인 과제라는 판단하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적극 활용토록 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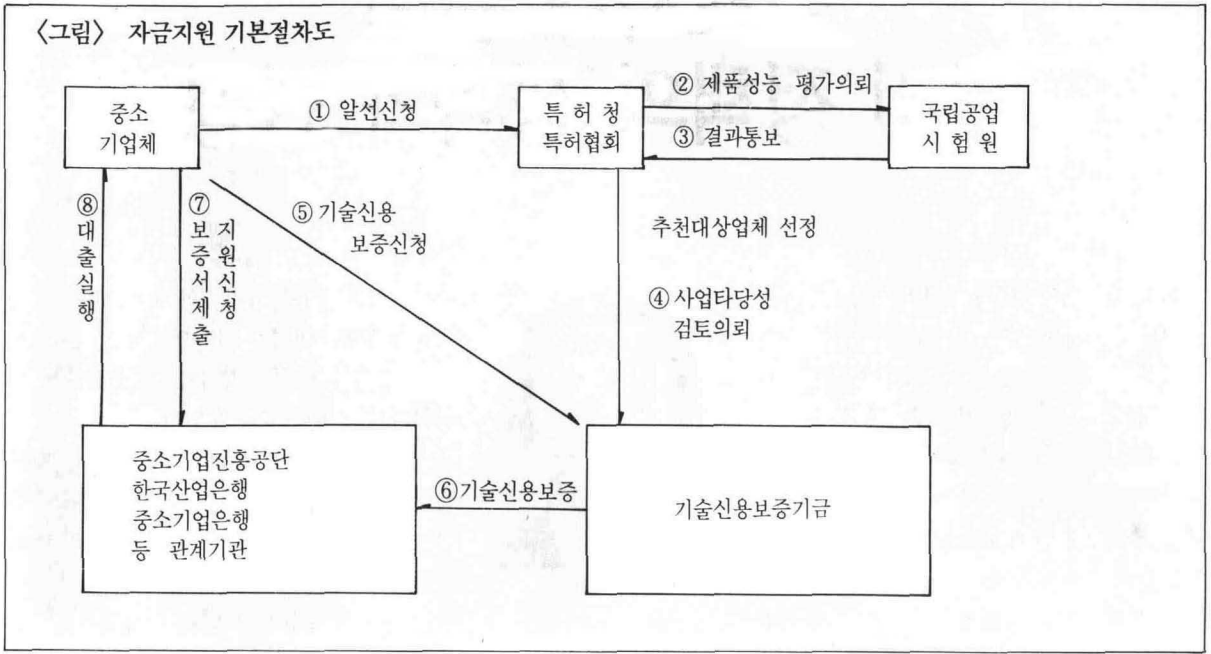
즉 국립공업시험원의 시험·분석결과를 토대로 특허청의 추천을 거친 일정한 수의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용보증을 설정해 주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 신용보증을 얻게 된 중소기업자는 담보문제를 해결하게 되며 필요로 하는 각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 특허청에서 시행중인 우수발명품의 시작품제작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특허기술의 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되어 있는 특허기술이 특허내용대로

〈그림〉 자금지원 기본절차도



별 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우선구매에서 가점이 부여되어 물량배분시 혜택이 주어진다.

그리고 KOEX 내의 발명상설전시관에 사업화제품을 무료로 연중 상설전시할 수 있도록 하여 대외적 홍보·매매알선·유통상담 등을 통한 제품판매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외에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체에는 세제상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창업할 때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규정에 따라 창업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그리고 수도권 이외에 창업할 때는 100%를 감면토록 혜택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혜택이 특허기술을 최초로 사업화하는 업체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한
지속적 노력 있어야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특허

청의 기능이 권리의 심사·확정과 병행하여 권리활용측면으로 새로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지원사업은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원내용을 살펴볼 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 지속적인 제도발전과 확충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사업화의 종국적인 주체인 개인발명가와 중소기업체가 사업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기술전쟁시대라 일컬어지는 현대의 후기산업사회에서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경쟁에서 승리하고 부단한 성장·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걸프사태 관련 우리 정책의 성과와 반성

이라크의 쿠웨이트 무력침공('90. 8. 2)으로 야기된 걸프사태는 약 7개월 만에 다국적군의 일방적인 군사적 승리로 종결이 되었으나 그 기간중 이 지역이 자유세계의 주요 석유 공급원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과 우려를 낳았다. 또한 쿠웨이트와 이라크에 대한 경제 제재조치로 인한 原油禁輸로 말미암아 하루 450만 배럴 정도의 원유가 부족하게 되었고 또한 심리적으로 국제석유시장에 큰 충격을 주게 되어 국제원유가격의 폭등과 수급불안의 긴장세를 초래하게 되었다.

사태 전 배럴당 20달러 수준에 있던 원유가격은 '90년 9월말에는 40달러 선까지 폭등한 바 있으며 사우디 등 다른 産油國들의 증산조치에도 불구하고 10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고유가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시각각 변화되는 전쟁임박설과 평화적 외교협상 노력 등 사태 전개에 따라 심한 등락세를 보여왔다. 또한 석유제품의 경우에도 동절기를 맞이한 계절적인 수요증가와 다국적군의 군사용 수요로 인하여 그 가격은 원유에 비해 더욱 고가로 폭등하고 국제 석유시장에서의 물동량도 극히 제한되는 품귀현상이 지속되었다. 참고로 걸프사태 기간 중 국제석유가격의 변동추이는 <표>와 같다.



김관영
동력자원부 석유정책과장

수급안정과 석유사업기금의 유가완충을 통해 석유류가격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걸프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었다.

우선, 쿠웨이트와 이라크의 禁輸에 따른 원유도입 부족분 하루 10만 9천 B/D을 사우디 등 타 산유국으로부터 장기계약 형태로 전량 대체 확보토록 하였으며, 또한 사태 직후에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축원유 133만 배럴을 극동정유에 긴급 대여하여 정상가동을 유지토록 하였다. 지난 1월 17일 걸프전쟁 기간중에는 수도권 제품비축유(등유, 경유)를 긴급 무제한 방출하여 민생유종의 가수요 현상을 조기에 해소하였다. 국제석유가격 폭등에 따른 국내유가부담은 석유사업기금을 활용, 흡수하여 사태발생 전 수준으로 국내석유류가격을 안정 유지함으로써 물가안정과 산업의 대외경쟁력에 기여토록 하였고, 걸프전쟁발발('91년 1.17)과 동시에 특별수급대책의 일환으로 1단계 소비절약시책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에너지 소비억제와 근검절약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비상시를 대비한 강력한 수급안정시책들을 추진하였다.

<표> 걸프사태 기간중 국제석유가격 변동 추이

국제석유시장동향 및 우리의 주요대응조치

우리나라는 석유를 전량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처지이므로 적극적인 에너지 소비억제시책과 특별석유수급대책을 통한 국내 석유

		'90. 8. 1 (사태 전)	'90		'91	
			9.28	12.31	1.16(전쟁 전)	3.21
원유 (달러/배럴)	Dubai	18.27	37.04	24.69	25.33	15.55
	Brent	20.58	41.12	28.84	30.23	19.40
제품 (달러/배럴)	등유	25.20	63.25	35.25	45.25	26.45
	경유	24.10	53.25	37.75	45.75	28.75

에너지부문의 대응평가

석유사업기금, 국내유가안정에 기여

무엇보다도 석유사업기금의 유가완충재원 활용으로 걸프사태 이후 폭등한 고유가의 국내유가 부담을 흡수함으로써 국내석유류 가격을 안정, 유지한 점을 우선 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약 7개월간의 비정상적인 외적변동요인을 자체 흡수함으로써 경제운용의 안정과 물가안정, 그리고 산업의 대외경쟁력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다. 지난 '90년 8월 이후 12월 말까지 총 유가보전규모는 9,131 억원으로 공장도 가격기준으로 볼 때 약 34%의 국내유가인상 효과를 억제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른 도매물가 억제효과는 2.96%포인트, 소비자물가는 0.52%포인트에 달하여 지난해 실현한 한 자리 물가수준이 도매 7.3%(소비자 9.5%)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만약 기금의 완충역할이 없었다면 한 자리 물가유지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비축유 활용으로 석유수급 안정 도모

다음으로는 지난 2차 석유과동 이후 석유사업기금의 투자로 마련된 정부비축유를 최대한 활용하여 공급차질 상황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국내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한 점이다. 걸프전쟁발발을 전후하여 야기된 수도권지역의 민생유류(등유, 경유)의 가수요현상에 대처하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제품비축물량을 긴급 무제한 방출함으로써 가수요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다. 걸프전쟁기간중 방출실적은 등유 39만 4천배럴, 경유는 98만 3천배럴로서 탱크로리 약 2,400대에 해당하는 물량을 방출하였다. 또한 원유부족분을 극동정유에 긴급 대여하여 정상적인 생산가동을 유지토록 하였다.

되돌아 보면 정부비축이 전무하였던 지난 1·2차 석유과동 당시와는 달리 정부비축유를

석유사업기금의 유가완충재원활용으로 걸프사태 이후 폭등한 고유가의 국내유가 부담을 흡수함으로써 국내석유류 가격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걸프사태 기간중 국제정세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고 정책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民生用油類 수급원활화에 주력

셋째로는 동절기간 중 급격한 수요증가로 수급차질이 예상된 등유, 경유의 民生用油類의 사전 각종 수급대책의 추진으로 부족 없이 수급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었다. 국내 정유회사에 대한 사전 생산수율 조정으로 민생유류의 국내공급 능력을 확충토록 조치하고, 가정용 대형보일러의 연료를 종전 등유에서 경유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조차에 의한 등유판매 금지 및 등·경유 유종간의 가격구조 개선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아울러 동절기간중 유통상의 공정거래와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일 석유수급 대책반과 소비자 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의 결과 그동안 무려 80%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등유소비가 이번 동절기에는 계획대비 27%가 감소되어 전년 대비 21% 증가수준에 머물렀는데,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향후 동절기 수급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 14억원의 에너지소비절약 효과 거둬

넷째로는 걸프전쟁과 동시에 실시한 소비절약시책은 그동안 우려되어 온 과소비 풍조를 억제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근검절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의 계기가 되었다. 소비절약시책의 실시기간중 ('91. 1. 17 ~ 3.5) 거둔 에너지소비 절약효과는 하루 약 14억원(단계 실시기간 중 약 660억원 절약)이었다. 차량 10부제 운행제한으로 평소 휘발유수요의 약 12%를 절감함으로써 하루 6억원을 절약하였고, 전력수요는 각종 절전시책으로 평소보다 2%가 줄어든 하루 650만 KWh 전력절감을 가져와 하루 1억 8천만원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직할시의 하루 전력소비량이 약 570만KWh 수준임을 감안할 때 대전시가 하루 쓰는 양 이상을 절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발전용 연료전환을 적극 추진하여 石油發電 비중을 사태 전 27.8%에서 20.2%로 낮추고 원자력, 유연탄 등의 발전 이용률을 제고함에 따라 발전용 석유소비를 하루 3만 7,600배럴 절감함으로써 하루 6억 2천만원의 발전연료비를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의 정책개선 방향

약 7개월 동안 걸프戰의 사태진전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체험한 바에 따르면 에너지정책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비축능력 추가확충 필요

첫째, 정부비축능력의 추가 확충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그것도 원유보다는 제품 및 LPG 비축을 중심으로 보강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걸프사태 기간중 급변하는 국제 석유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정책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었던 것은 정부비축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정부비축수준은 약 33일분으로 외국 주요선진국의 정부비축수준이 90일분 이상인 점과 비교하면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을 고려할 때 조속히 추가비축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 및 대소비처의 제품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민생유류 및 LPG 등 제품비축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석유수송능력의 제고 및 현대화 시급

둘째로는, 현재 추진중인 전국송유관 건설의 차질 없는 수행으로 석유수송능력의 제고

우리나라의 현재 정부비축수준은 약 33일분으로 외국 주요선진국의 정부비축수준이 90일분 이상인 점과 비교하면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및 현대화가 시급한 점이다. 기존 유조차량이나 선박에 의한 수송능력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여 있고 향후 교통난의 가중으로 심각한 수급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는 금번 걸프전쟁을 전후로 발생한 민생용 유류의 가수요현상시 공급할 충분한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지역에 일시적으로 품귀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바로 수송능력의 한계에 있었음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중인 전국송유관 건설사업이 공기내에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석유사업기금의 유가완충기능 재조정 필요

셋째, 석유사업기금의 유가완충 기능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즉, 국제석유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한 후 원상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기금을 활용한 유가완충으로 국내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경제의 안정운용을 위해 바람직하나, 국제가격이 계속 상승하거나 고가격수준을 상당기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이를 기금으로 유가부담을 완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기금의 유가완충용 사용증가는 결과적으로 사업성기금의 재원부족을 초래케 된다. 따라서 석유비축 증강 및 국내외 자원개발, 에너지 소비절약투자 등 에너지 안정공급기반체제를 갖추는 데 필요한 에너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도록 근본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시장에서 형성되는 유종간의 가격구조 변화와 국내 가격구조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여 제품 수입기피 등 국내수급 불안과 국내가격구조의 경직성으로 연료전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 역기능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체에너지 개발노력 긴요

넷째, 점차 상승하고 있는 석유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 및 대체에너지 개발의 촉진에 더욱 노력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원자력발전의 석유대체효과가 현재로서 가장 두드러지며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전체 발전량의 50% 수준인 현 原子力發電 비중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여 점차 심화되는 석유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로 '90년도 실적을 보면, 원자력 발전량은 528억

8,700만KWh로서 전체발전량의 4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석유로 환산시 7,650만 배럴에 해당되어 국내석유소비량의 무려 23%에 달하며, 발전비용의 절감은 원자력과 석유화력의 발전단가 차이를 기준으로 볼 때 연간 약 7,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대체 에너지의 실용화 및 보급확대로 석유의존도를 축소하고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체에너지의 개발보급에 지속적인 투자가 요청된다 [본문]



경쟁과 협력

—중소기업과 대기업관계에 관한 정책추이와 발전방향



상공부 중소기업정책연구회 編
한국능률협회 종합연구소 刊

중 소기업문제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접근 방법 중의 하나는 대기업과의 관련 속에서 중소기업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존재를 전제로 한 중소기업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인식은 경제적 약자로서의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측면이 강조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이 보다 세분화되고 기업간 기술분업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대기업-중소기업관계도 새롭게 변화되고 있으며 또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출판된 '경쟁과 협력'이라는 저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를 경쟁분야와 협력 분야로 대별하여 그 각각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현재의 제도 및 운용실태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경쟁분야와 보완분야를 포괄하는 일관된 논리로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들이 특정시장에서 잔여수요(residual demand)를 충족시키거나, 대기업과 종속적 보완관계에 있는 소극적 존재로서의 중소기업이 아닌, 경쟁을 통해 효율적 사업영역을 창출하고 대기업과 기술분업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적극적인 중소기업 위상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면이 특히 인상적이다. 더욱이 이 책의 집필자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실무담당자들인 상공부 중소기업국 직원들이라는 점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의 중소기업정책의 전개과정과 그 배경, 향후방향이 논리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 일독을 권하고 싶다.

산업연구원 전문위원 백낙기

水資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

水資源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강수량, 계절별 강수량, 하천 특성 등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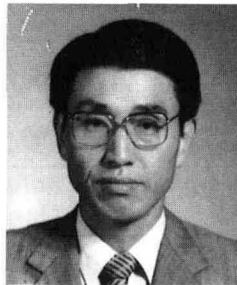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74mm로서 세계평균 970mm에 비하여 1.3배 정도 많은 편이나 인구밀도가 높아 한 사람이 1년간 이용할 수 있는 강수량은 3천톤으로 세계평균 3만 4천톤에 비하면 9%에 불과하다.

더욱이 지역적으로도 제주도 지역은 연강수량이 1,600mm로 많은 편이나 경북지역은 1,000mm 내외로서 그 편차가 심하여 국토전역으로 강수량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 과거 강수 실적을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가장 가물었던 1939년에는 750mm, 가장 비가 많이 내린 1916년에는 1,700mm로서 변화폭이 크다.

또한 연간 강수량의 3분의 2가 6~9월 3개월 간에 집중적으로 내리는데 洪水期에는 하천에 흐르는 물의 양이 많아 제방이 넘칠 지경에까지 이르고 渴水期에는 물이 적게 흘러 하천의 중·상류 지역은 물이 말라 하천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곳이 많다. 이것을 외국과 비교해 보면 유럽은 하천의 홍수기 流量이 갈수기의 15~30배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300~500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토는 평야보다 산지가 훨씬 많아 하천의 경사가 급하고 그 길이가 짧아 하천의 물이 빨리 바다로 흘러가고 만다.

우리나라의 자연적인 여건은 물이 없는



하진규
국립건설시험소장

아프리카나 중동의 사막지역보다는 좋다고 하겠으나 대부분의 나라에 비해 水資源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수자원의 문제점과 과제

수자원 이용 및 관리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50~'60년대는 농업용 저수지 개발, 단일 목적 수력발전용 개발 등 소규모로 물을 이용하는 利水 위주의 수자원 개발을 해왔다. '70~'80년대는 경제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생활·공업용수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또한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대규모 다목적개발, 광역 용수공급 체제의 구축, 하천개수사업의 촉진 등 물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利水 및 治水 위주의 수자원 개발과 관리를 동시에 병행해 왔다.

한편, 용수수요는 계속해서 증대하고 있으나 이를 감당하기 위한 댐 개발은 개발 적지의 감소, 水沒地 보상가의 양등, 댐건설지역의 주민 반발 등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물을 관리하는 치수면에서도 하천 주변 토지이용 증대에 따른 홍수 피해가 '70년대 연평균 1,071억원이었던 것이 '80년대에는 2,663억원으로 2.5배나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피해액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질면에 있어서는 공업화 및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 등의 급증으로 하천 수질의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강 하류 등 하수처리장이 건설된 지역은 수질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낙동

* 이 글을 쓸 당시 필자는 건설부 수자원정책과장이었음.

강 하류 등 대부분의 하천수질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반면,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하천주변 환경의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욕구는 증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용수공급 방안

현재의 물 이용량은 생활·공업·농업 용수 등을 합하면 연간 총 249억톤으로 수자원 총량 1,267억톤의 겨우 19% 정도에 불과하다. 이용 형태별로 분류하면 생활용수 42억톤, 농업용수 147억톤, 하천유지 용수로 36억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원별로 분류할 경우 하천에 흐르는 물을 직접 끌어 들이는 양이 145억톤, 다목적댐, 농업용 저수지 및 하구둑에서 87억톤, 우물 등 지하수에서 17억톤을 공급하고 있다.

2001년에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1인당 물 소비량이 현재 325 l에서 440 l로, 급수 보급률은 74%에서 92%로 제고되어 생활용수의 수요가 연5.3%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업용수 수요는 공장용지 면적이 현재 306km²에서 509km²로 확충되어 연 2.2%의 증가가 예상된다. 한편 농업용수 수요는 水利安全畵의 비율이 현재 73%에서 82%로 제고되어 연 0.9%의 미미한 증가가 예상되며 2001년의 총 용수수요는 249억톤에서 약 1.3배인 330억톤으로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용수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자원의 개발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수자원 특성에 비추어 바다로 흘러들어가 는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내륙지방에서는 댐건설 적지를 찾아 댐을 건설하여 용수 개발을 주도해 나가는 한편, 해안도서지역에서는 소규모 저수지나 지하수 개발로 용수를 공급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물 이용량은 생활·공업·농업 용수 등을 합하면 연간 총 249억톤으로 수자원 총량 1,267억톤의 겨우 19%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지역간·유역간 균형 있는 용수 개발을 위해서는 각 유역의 용수공급 현황, 인근 유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전국을 몇개의 큰 水域圈으로 나누어 적절한 용수공급 배분 계획에 따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강유역을 위시하여 임진강·안성천유역, 인천·경기 해안, 강릉·목호 등 강원해안지역을 포함한 한강수역권, △낙동강·형산강유역, 포항·영덕 등 경북해안, 부산·경남해안지역을 포함한 낙동강수역권, △금강유역은 물론 삼괴천·만경강유역 충남 해안지역을 포함하는 금강수역권, △영산강·섬진강유역과 섬진강댐에서 물을 공급 받고 있는 동진강 유역, 그리고 전남해안을 포함한 섬진·영산강수역권 등 4대 수역권으로 나누어 지역간 균형 있고 안정적인 용수공급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한강수역권에서는 오는 '96년까지 횡성댐을, 2001년까지 강원도 영월지역에 영월댐을 건설함으로써 용수 부족에 대처할 계획이다.

낙동강수역권에서는 '91년까지 경북지역에 임하댐 및 운문댐을, '95년까지 경남지역에 기존 남강댐을 높이고, 밀양댐을 건설하여 용수공급량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다.

금강수역권에서는 '97년까지 전북지역에 용담댐을 건설하여 금강의 물을 일부 전라북도지역으로 돌리고, '94년까지 충남 보령지역에 보령댐을 건설할 예정이다.

섬진·영산강수역권은 '91년까지 전남지역에 주암댐을, '96년까지 전북지역에 부안댐을, '98년까지 섬진강 상류 전북지역에 중규모 댐을 전남 서남해안에 또 하나의 중규모댐을 건설하여 용수수요에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1년까지 12개의 댐을 건설하여 용수 공급량을 39억톤 늘리고 하천 및 지하수 공급량도 33억톤을 늘려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댐 상류 즉, 水源地域 주민의 반발 등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 대책이 시급하다. 이것은 댐건설을 위한 치수 및 이수 수익이 댐 하류 지역에 한정되는 반면, 수원지역은 산업이나 생활의 기반을 잃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직접 보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 현재 '발전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등으로 수원지역에 대하여 일부 혜택이 돌아 갈 수도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미약하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수원지역 주민을

위하여 가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댐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천수를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島嶼·해안지역에서는 지하수의 부족 상태를 충분히 조사하여 개발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지하수 과대 채취에 의한 地盤沈下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 채수량 제한 등 지하수를 다수가 공유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를 향한 치수대책

우선 전국의 하천제방 현황을 살펴보면, '89년 말까지 제방이 축조되어 홍수로부터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방의 길이는 전체 延長의 54%에 불과하고 이 중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대규모하천(직할하천)의 제방은 90% 완료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중소규모 하천(지방 및 준용하천)은 50~71% 수준밖에 완료되지 못해 홍수내습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더구나 도시화 및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하천연안지대에 재해 취약 지구가 증가함은 물론 각종 被災시설물이 늘어나고 또한 기상 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어 하천개수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 지금까지는 매년 전체 제방 延長의 1% 수준으로 제방을 축조하는 데 머물고 있어 이 수준으로 계속 진행할 경우 전국 하천제방을 완성하는 데는 46년(2035년 완료)이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대규모 하천과 중규모 하천(지방하천)은 2001년까지 개수를 완료하고 소규모 하천(준용하천)은 2011년까지 모두 개수할 계획이다.

하천치수사업 시행방식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하천 규모별로 관리기관별로 관할하는 하천을 개수하여 왔으나, 이를 단일 기관에서

〈표 1〉 국별 강수량 비교

(단위 : mm, 톤)

구 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중국	캐나다	세계평균
연평균 강수량	1,274	1,749	760	1,064	660	522	970
1인당이용강수량	3,000	5,500	33,300	4,580	7,650	52,075	34,000

〈표 2〉 전국용수 수급계획

(단위 : 억톤, %)

구 분	1988(A)	1991	1996	2001(B)	증가(B-A)	
					양	%
○용수수요	249	282	302	330	81	33
생활용수	42	49	59	71	29	69
공업용수	24	25	28	31	7	30
농업용수	147	151	158	164	17	12
유지용수	36	57	57	64	28	78
○용수공급	277	309	326	349	72	26
하천및지하수	162	183	186	195	33	20
댐	115	126	140	154	39	34
과부족	28	27	24	19		
이용률	19	22	24	26		

〈표 3〉 전국 하천제방 현황

(단위 : km, %)

구 분	요개수 延長	'89까지 기개수	개수율	계획
계	35,781	19,355	54	16,426
직할하천	2,750	2,462	90	288
지방하천	1,278	912	71	366
준용하천	31,753	15,981	50	15,772

本流와 支川을 일괄개수하는 水界治水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또한 유역면적이 전국토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5대강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에 대하여는 수계 치수 방식으로 대대적으로 치수사업을 실시하여 빠른 기간내에 홍수 방지 효과를 거양하고, 기타 소규모 수계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방식대로 하천개수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홍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조기에 상습 피해를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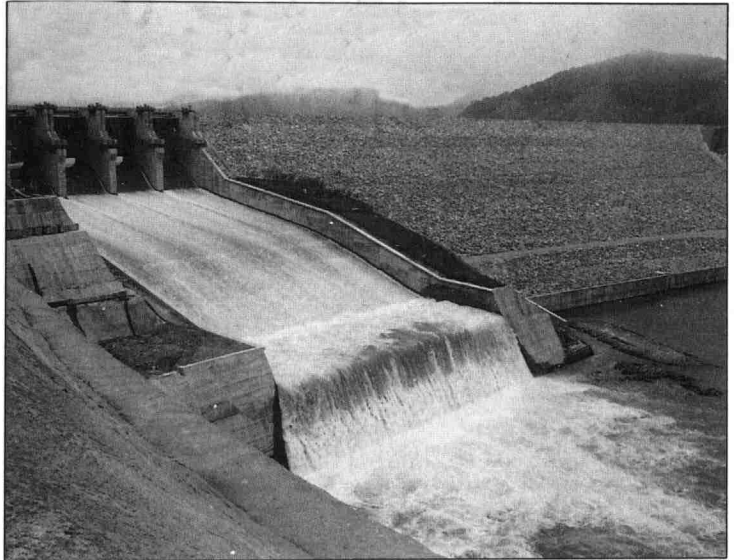
또한 효율적인 홍수관리 방안의 하나로 기상 장비를 확충하고 현대화함으로써 기상 예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중·소 수계까지도 홍수에·경보 체계를 확대하며, 당해 유역의 특성에 맞는 홍수유출모형 개발 등 防災기술개발을 위한 방재종합연구소의 설치·운영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하천 환경의 개선

하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하천의 수량과 수질을 연계한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 내용을 열거하면 댐·도수로 등 하천 관리 시설을 종합 관리하여 하천 수량의 확보 및 수질의 보존, 하천 및 취·배수 수량과 수질관측 통신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량 및 수질 감시체제 확립, 이상 갈수시와 이상 수질 오탁시 취·배수 제한 등 시설 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유해 물질의 유입 등 돌발적인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연락체제 구축 등 공조체제 마련 등이다.

또한 물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데 이상 갈수시와 이상 수질 오탁시 수량 보급을 위한 전용댐 건설 사업, 하천오니



준설, 曝氣處理 등 하천 정화사업 등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천 공간을 적절히 보존하고, 이용해야 할 것이다. 경관이 좋은 하천은 자연 그대로 보존시킬 수 있도록 경관하천으로 지정하고, 도시 하천의 경우 고수부지를 적절히 이용하여 휴식의 장을 제공하며, 치수를 위한 하천공사시에도 綠化護岸, 親水性護岸 설치 등 풍요로운 하천 공간의 보존과 창조에 역점을 두게 될 것이다.

주민의 이해와 협조 필요

안정적인 물의 공급, 치수대책, 하천환경개선 등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지만 수자원 개발의 어려움에 따른 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물 자원의 유한함과 귀중함을 이해하고, 물을 아껴 쓰는 국민의 정신의 함양은 물론 하천환경을 더럽힐 경우 결국 우리에게 더러운 물이 되돌아온다는 자연의 섭리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본문

에이즈 예방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



김문식
보건사회부 방역과장

에이즈는 '81년에 첫 발견된 후 10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현재 160여국에서 약 33만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더구나 파악된 환자의 약 30배 가량인 1천만명이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향후 5년 동안에 100만명 이상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85년 12월 첫 감염자가 확인된 이래 '91년 3월 말 현재까지 약 620만건의 검사에서 138명의 감염자를 확인하였고, 이들 중 7명이 환자로 발병하였다. 확인된 환자수를 가지고 감염자수를 추정하는 세계보건기구의 추정방법을 따를 때, 우리나라에는 약 200~300명의 감염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138명이 보건당국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감염자 발생추세는 전년도 발생의 약 1.5배가 금년도에 새로이 발생하는 등 기하급수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세계적인 발생추세와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감염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당국의 예방노력과 더불어 국민 각자의 자발적인 예방노력이 합쳐져야만 에이즈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에이즈 확산이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국민 모두의 노력이 결집된다면 현 단계에서 에이즈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에이즈 예방사업

'87년 국가 에이즈 예방관리를 자문하기

위한 기구로서 에이즈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에이즈예방법이 제정됨으로써 포괄적인 에이즈 예방사업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보건사회부·국립보건원·검역소·시도 보건환경연구소 및 보건소에서 에이즈예방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적십자혈액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에서 혈액안전·상담·정보교환 등 에이즈 예방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동성연애자·접객부 등에 대한 보건교육에 중점을 두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성접촉을 통한 전파의 예방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경로는 외국과는 달리 95% 이상이 성접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성접촉을 통한 전파차단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性に 의한 전파예방은 국가가 통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결국 국민 각자의 노력에 의하지 않고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 보건교육 및 홍보

에이즈 예방에 있어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은 정확한 지식의 결여, 비합리적인 태도, 예방에 대한 개인의 책임의식 부족으로서 이를 극복하는 것이 에이즈 예방대책의 선결 과제이다. 현재 교육기관·언론기관 및 각 사회단체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에이즈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장교육시에도 이를 포함시키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 또한 접객부·외항선원·해외여행자에 대하여 홍보물을 제공하고 있고, 동성연애자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자료도 개발하고 있다. 일반대중에 대한 홍보로서 지하철 광고를 이용한 홍보사업을 작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방식의 홍보를 가능한 한 확대시킬 계획이다.

에이즈 상담을 위하여는 한국건강관리협회의 각 지부에 상담요원과 상담전화선을 두어 에이즈에 대한 상담 및 올바른 지식 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동성연애자를 위한 상담서비스도 계획하고 있다.

■ 피임기구의 사용을 권장

현 단계에서 가장 확실한 예방수단은 콘돔의 사용이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저마다 콘돔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콘돔은 매년 약 5천만개 이상이 국내에서 소모되고 수억개가 선진국에 수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콘돔은 값싸면서 품질이 높은데도 외국에 비해 사용률이 매우 저조하다. 유교양향권인 우리나라는 콘돔홍보에 장애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감한 홍보와 캠페인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정부는 유흥장소 등에서 콘돔자판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 감염발생 감시체계 수립

우리나라는 '87년부터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기존의 성병검진체계에 에이즈를 포함시키고 외항선원 등을 추가하여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만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감염위험이 높은 집단에 대한 강제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바, 다른 나라들은 감염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환자를 파악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이다. 이성간 성접촉에 주안점을 둔 이 검진제도는 미등록 검사 대상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검사의 강제성이 갖는 제약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로서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신분노출을 꺼리는 일반인

및 동성연애자를 위하여 익명검사제도를 '89년 10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혈액을 통한 전파의 예방

우리나라의 헌혈량은 연간 100만단위가 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다. '87년부터 전 헌혈단위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혈로 인한 에이즈 전파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되어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사법으로는 항체미형성기간 중의 감염혈액에 대한 검사가 불가능하므로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구미지역의 이러한 가능성은 5만~20만분의 1로 많은 희생자가 생기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발생확률은 1백만~2백만분의 1이다. 따라서 이러한 희생자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검사방법에 대한 연구가 세계 각국에서 진행중이다.

정부는 새로운 검사방법이 개발되기까지 희생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혈액검사精密度管理의 강화와 아울러 감염위험행위나 요인이 있었던 사람들은 헌혈을 하지 말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해외여행자에게는 혈액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수혈을 피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에이즈 치료사업

현재까지 에이즈特效약이 없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치료약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나 향후 단기간 내에 개발될 전망은 매우 어둡다. 또한 예방접종의 개발은 더욱 비관적인데, 현재로서는 에이즈 발병을 늦춰 주는 발병억제제인 AZT가 유일한 약품이다. 많은 환자가 발생한 구미 각국에서는 에이즈 치료를 위한 별도의 병원을 따로 운영하지 않고 기존 병원체내에서

에이즈 예방에 있어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은 정확한 지식의 결여, 비합리적인 태도, 예방에 대한 개인의 책임의식 부족이다.

치료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에이즈가 병원 내에서 다른 입원환자에게 전염될 수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국에 29개의 병원을 지정하여 환자 및 감염자를 치료토록 하고 있으며 면역력이 저하된 감염자에게는 발병억제제인 AZT를 투여하고 있다.

감염자 관리

감염자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감염자의 에이즈 전파방지는 감염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감염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대우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감염자 명단을 공개하고 그들을 격리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럴 경우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감염자들과 앞으로 발생할 감염자들이 검진을 기피하게 되어 오히려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역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 때문에 일부 공산국가를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가 격리수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명단 비공개, 비격리 수용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감염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감염사실 통보에 따른 우울증을 최소화하고 감염상태가 곧 죽음의 선고는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시키며, 전파예방을 위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자의 역할은 감염자 관리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적합한 능력을 갖춘 상담요원을 확보·교육하고 있다. 감염자 본인 외에 배우자·가족·성접촉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정기적 검진을 통한 건강관리와 생계보호

지정병원의 진료팀을 통해 정기적으로 감염자의 건강상태를 검진하고 국립보건원 에이즈 과에서 감염자의 면역학적 모니터링을 하여

면역력이 저하되면 AZT를 투여하고 있다. 또한 감염자의 특정 건강문제에 대한 상담뿐 아니라 환자로 발전될 때에는 치료도 직접 책임지고 있다.

감염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실일 뿐 아니라 사회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본인에게도 조기발병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감염자의 정상활동을 위해 신상비밀을 최대한 보호해 주며 유흥업소 취업금지 외에는 직업활동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생계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지원해 주고 있다.

예방교육과 홍보사업 강화

에이즈는 그 특성상 위험행위(특히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성행위)가 없는 한 거의 절대적으로 감염되지 않는 질병이다. 약수·포옹·음식·목욕탕·손잡이·매개곤충 등으로 옮겨지지 않으며 감염자와 한 이불 속에 있어도 성접촉이 없는 한 감염되지 않는다. 현재 국민간에 팽배해 있는 에이즈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은 쓸데없는 소동과 감염자에 대한 차별만을 야기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이 책임의식을 발휘하여 위험행위를 하지 않을 때 현 단계에서 에이즈확산을 막을 수 있다. 국민 각자의 노력이 없는 한 에이즈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충분한 예방교육과 방송매체를 통한 과감한 홍보사업의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앞으로 정부는 홍보 및 교육사업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홍보교육 매체의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상담요원의 육성, 사회복지 서비스요원의 활용이 필요하며 현재 정부 주도적인 에이즈 예방사업에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민간부문의 참여가 절실히 요청된다. 나라경제

감염자의
에이즈 전파방지는
감염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감염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대우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산재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국내·외의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땀흘려 일한 근로자들의 노력의 결실이며 특히 불의의 산업재해로 인하여 생명을 잃거나 불구가 된 산재근로자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것이다.

산재보험으로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 이행보장

정부는 산재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여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무과실보상책임제도를 확립하였으나 사용자가 성실히 재해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대형사고 발생시 비용부담의 과중으로 기업체가 도산하는 사례도 있어 재해보상의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이에 '63년 사용자가 연대하여 재해보상 책임을 분담하는 산재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산업평화와 근로복지증진에 기여

산재보험은 사업주 집단을 기초로 한 강제 사회보험으로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재원으로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신속·공정한 보상을 행함으로써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보장하며,

재해보상을 둘러싼 노사간의 마찰과 갈등을 해소시켜 주는 등 산업평화와 근로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756만 근로자가 수혜대상

'64년 광업, 제조업 중 5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적용한 이래 수혜범위를 계속 확대하여 '90년 말 현재 주요생산관련 5인 이상 사업장에 당연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 및 농·어업,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서비스업 등을 임의적용대상으로 하여 13만여 개 사업장 756만명의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세입예산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산재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으로 구성되고, 동 재원으로 재해근로자에 대한 각종 보상금을 지급하는 외에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산재보험특별회계 세출예산의 5% 이상을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이강만
노동부 보험관리과장

〈표 1〉 산재보험 적용·보상현황

(단위 : 명, 억원)

구 분		'80	'85	'90
적용	사업장 수	63,100	66,803	129,687
	근로자 수	3,752,975	4,495,185	7,563,655
	보험료징수액	735	1,998	5,628
보상	재해자 수	113,375	141,809	132,893
	사망자 수	1,273	1,718	2,236
	장해자 수	14,873	19,824	27,813
	재해보상액	625	1,860	5,394

* 자료 : 노동부, 노동보험국.

세출예산 6,803억원은 재해보상금 5,670억원, 복지사업수행을 위해 근로복지공사에 출연한 118억원 및 산업재해예방기금에 대한 출연금 347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 시행 이래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새로운 급여제도의 개발·도입 및 보상수준의 인상으로 I·L·O 권고수준을 넘어 선진제국의 재해보상과 대등한 수준의 보험급여체계를 확립하였다.

요양비용 전액 지급

요양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치료하여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보험급여로서 환자의 이송료, 간호비를 포함한 요양비용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치료종결 후 당초의 상병이 악화 또는 재발하여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기간의 경과에 관계없이 재요양을 실시하고 있다.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요양개시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상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상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1~3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간 평균임금의 329(90.1%)~257(70.4%) 일분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 장기요양중장해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상병이 치유된 후 잔존하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장애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장애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474 일분(1급)~55일분(14급)을 지급하며, 장애연금은 연간 329일분(1급)~138일분(7급)을 지급한다. 다만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인정되는 1~3급의 중장해자의 경우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최고 4년분의 연금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일시금과 연금의 장점을 조화시켰다.

최저보상기준 및 임금변동순응률제 채택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재해자의 유족에게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유족연금 또는 일시금 및 장의비를 지급한다. 유족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지급하고, 유족연금은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평균임금의 52~67%를 지급하고 있다. 장의비는 실제 장례를 행한 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한다.

재해보상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보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평균임금이 낮은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저보상기준('91년 1만 2,350원)을 정하여 휴업급여를 제외한 각종 보험급여에 적용하고 있다. 피재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동종근로자 통상임금이 5% 이상 변동된 경우 변동률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을 개정하여 주는 임금변동순응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이미 지급한 연금합계액이 일시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표 2〉 산재보상수준 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I.L.O. 권고수준
휴업급여	70%	60%	67%
장애연금 (노동능력 완전상실자)	70.4%~90.1%	67%~85.8%	67%
유족연금	52%~67%	42%~67%	67%
장 의 비	120일분	60일분	기준제시 없음
요 양 급여	전 액	전 액	전 액

보험시설의 설치운용으로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촉진

산재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진료를 위하여 산재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산재병원으로는 중앙·창원병원 등 종합병원

형태의 일반요양시설과 진폐진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동해·정선병원 및 신경정신질환 진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반월병원 등 특수 요양시설이 있으며, 주로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공단지역 및 광산 지역 등에 설치하여 산재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재병원 및 재활시설의 운영

산재장해자의 신체기능 조기회복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의료 및 작업재활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의료재활 시설로는 재활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의지제작 시설을 갖춘 산업재활원이 있고, 직업재활 시설로는 재취업이 어려운 산재중장해자를 대상으로 현장 위주의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는 반월재활작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대전재활병원, 광주재활작업소, 산재중장해자자립작업장을 건립중에 있다.

또한 직업병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직업병의 진단과 치료사업의 효율화를 기할 방침이다.

기존 진폐연구소를 확대개편한 직업병연구소는 진폐증, 유기용제 및 중금속 중독 등 각종 직업병에 대한 조사와 진단·치료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금년에는 직업병 진료를 담당하는 직업병과를 신설하여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임상연구의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산재유족 및 중장해자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자영사업 및 주택구입 자금등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는 생활정착금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부한도액은 1인당 1천만원이고, 연리 6%,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조건으로 '87년부터 '90년까지 3,346명의

재해자 가정에 127억원을 융자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23억원을 재원으로 융자중에 있다.

장기저리의 생활정착금 대부

또한 산재사망자와 중장해자 자녀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84년부터 '90년까지 8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1만 1,416명의 중·고등학생에게 37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금년에는 10억원의 기금을 추가 조성하여 2,800명의 중·고생에게 12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90년대 정책과제 및 대응방안

산재보험사업은 제도의 내용이나 사업규모에 있어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아직도 개선·보완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90년대에는 그간의 성과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재해근로자를 위한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제까지 행정력의 부족과 적용기술상의 제약으로 사업의 규모와 재해율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확대하는 데 주력하여 왔으나, '90년대에는 전 산업에 확대적용함은 물론 소규모 영세사업장근로자, 가내근로자, 자영근로자 등도 보호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수혜대상자의 확대 및 재해보상제도의 내실화

업무상재해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각종 직업병 등 업무관련 재해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연금제를 확대하여 재해근로자와 가족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통근중의 재해에 대한 보상방안도 앞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재의료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산업의과대학을 설립, 산업의학 전문의료인 양성·배출하며, 군장 및 대불공단 내에 의료

'90년대의 산재보험제도는 그간의 성과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재해근로자를 위한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기관을 신설하여 산재의료 시설의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 중앙병원내의 직업병연구소를 독립기관으로 개편, 연구원을 증원하고 장비를 증설하여 직업병 임상연구와 진료를 전담케 하며, 주요공단지역 내에 직업병 전문진단센터의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

재활시설 및 복지증진사업 확충

재활의료시설을 확충하여 산재장애자의 신체기능 회복을 최대한 도모하고,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해자들의 잔존능력 개발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 직업재활훈련을 확대하며, 이들이 능력껏 일할 수 있는 자립작업장을 확대 설치하여 일하는 보람을 되찾고 생계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재유족 및 중장해자 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정착금대부 및 자녀장학금 지급 등 재해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복지사업을 개발·확충해 나갈 것이다. **남관**

(1991. 3~1991. 4)

나라경제 지난호 차례

1991년 3월호

특집 / 우리 농어촌,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
- 농어촌소득원의 다양화
-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 수산업발전과 어촌활성화 대책
-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농어촌시책 추진방향
- 농업부문 재정투입자의 새로운 방향
- 농정을 보는 시각과 정책대응

경제정책해설

- 걸프전쟁과 국제수지대책
- 기업 및 금융기관의 해외활동 지원
- 독일통일과 우리 기업의 대응
- 대체에너지로서의 원자력
- 교통에도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
-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기능과 역할
- 인력난 해소를 위한 유휴인력의 활용
- 경부고속전철 건설의 필요성
-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정책
- 소련과의 과학기술협력,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폐기물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

만남 / 김세원 서울대 교수가 만난 이봉서 상공부장관
제2경제도약 이끄는 통상·산업정책의 調律士

나라경제논단

- UR농산물협상 여건의 변화
- 국제적 보조금 규범의 변화와 경제정책
- 우리나라 해외투자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 EC의 경제·통화 통합

1991년 4월호

특집 I / 기술입국,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세계 7위권 과학기술국 도약을 위한 과제
- 우리의 과학기술수준 어디까지 와 있나
-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산업기술개발
- 기술개발의 국제화와 기술협력의 강화

특집 II / 국제화·개방화에 대응한 공정거래제도

- 공정거래제도의 운영의 개요 및 향후 추진방향
- 개방화·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정거래제도의 발전과제
- 공정한 거래관행의 정착
-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자유로운 경쟁기반 구축
- 경제협력 제고를 위한 정부규제의 완화

특집 III / 금년도 개정세제의 운용방향

- '90년대 세제운용의 방향
-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제도의 보완

합리적 조세부담을 위한 재산세제 개편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확대
경제안정을 위한 소비세제 개편

경제정책해설

- 올해 설비자금 공급계획
- 풍요롭고 아름다운 산림문화의 창조
- 해외자원개발 추진성과와 전망
-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도시계획제도 개편
- 맞벌이시대에 대비한 보육사업의 확대
-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토지의 지하사용 보상제도
-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제도

나라경제논단

- '전진과 퇴행'의 갈림길에 선 우리의 선택
- 만남 / 경영학 교수가 만난 이희일 동력자원부장관
- 에너지절약의 기수

*** 지난호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문의처 / 국민경제제도연구원 편집발간실
전화 : 561-1400

화물유통 정책방향

사람과 재화의 공간적 이동을 의미하는 교통은 문명의 발생과 더불어 생겨났으며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그 내용과 정책적 관심대상도 변화되어 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통문제 하면 으레 대도시교통을 중심으로 한 여객수송의 문제를 연상하였으나 지난해부터 수출이 다시 어려워지자 그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화물유통의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다.

기업이 원자재를 조달해서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에는 여러 단계의 수송·보관·포장과 이에 부수된 하역 및 정보관리활동이 뒤따르게 마련인데, 이들 활동을 총칭해서 '화물유통'이라 부른다.

화물유통의 관건은 어떻게 하면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재화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고 이용국민(화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

화물유통,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시간적으로 볼 때 경인간 양곡 수송차량이 '86년에는 하루에 5~6회를 왕복하였으나 현재는 2회 왕복도 힘든 상태이고, 경부간 컨테이너 왕복수송시간은 '80년 14시간에서 '90년 28시간으로 2배의 시간이 소요되며, 항만의 평균 체선시간('90년)은 인천항이 98시간, 부산항이 37시간이나 소요되어 수출상품의 적기 선적이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비용측면에서 볼 때 수송비 등 화물

유통 비용이 과다 지출되어 국내 물가상승과 수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화물유통비용의 추가부담액(사회·경제적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대략 연간 1조 5천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셋째, 화물유통업자의 책임이나 공신력, 이용의 편리성 등 서비스 측면에서도 이용자인 화주의 불만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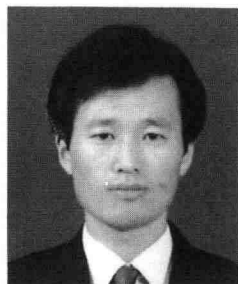
화물유통애로 왜 생겼나

화물은 물흐르듯 매끄럽게 흘러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화물의 흐름이 막히고 유통이 어렵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도로·항만·철도 등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제때에 하지 못한 데 있으나 우리나라의 화물수송체계와 과도한 정부규제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정부의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부족

정부는 '60년대 초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한 이래 교통시설 확충에 꾸준히 노력하여 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나 '80년대 초부터 물가안정에 기초를 둔 재정운용과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지출증대로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지극히 저조하였다.

특히 교통부문의 투자내용이 '60년대와 '70년대에는 원활한 수출입활동을 뒷받침하기



김한영

교통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위하여 도로·철도·항만에 집중되었으나 '80년대에는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하철과 도심도로 건설에 투자가 집중되어 화물 적체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와같이 '80년대의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고속도로와 항만은 이미 용량한계에 도달하였으며 3~5년 후에는 대부분의 주요국도와 공항시설도 용량한계에 이를 전망이다.

비효율적인 화물수송체계

우리나라의 화물수송은 90%(톤기준) 이상이 公路(도로)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며 철도수송기능이 확충된다 하더라도 철도의 분담비율이 증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부분의 화물수송을 맡고 있는 공로수송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공로수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량화물은 직송하되 소량화물은 한 곳에 모아서 대형트럭으로 운송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화물을 차량의 크기나 거리에 관계 없이 직송함으로써 불필요한 통행수요를 발생시키고 도로혼잡을 가중시키는 물론 에너지 과다소비로 운송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트럭의 평균 적재율이 51.4%, 공차율이 33.4%로 3분의 1 이상의 트럭이 빈차로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수송수단간 분담구조가 불합리하고 차량운행효율이 극히 낮은 이유는 지역간 장거리 수송과 지역내 집·배송을 체계화할 수 있는 화물터미널이 질적·양적으로 부족하고, 이용자(화주)와 운송업자를 효과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전산정보체제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운송사업에 대한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규제의 과다도 한 요인으로 작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구역·노선 및 특수

자동차운송사업으로 구분되며 사업참여는 일반구역화물과 노선화물은 면허제로, 전국화물과 특수화물은 등록제로 되어 있다.

또한 일반구역화물은 시·도 행정구역 단위로 사업구역이 정해지고 당해 사업구역내에서만 常駐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여러 화주의 화물을 모아서 싣는 혼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의 흐름을 단절시키고 수송효율을 저하시키며 경쟁을 통한 기업체질의 강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좁은 국토면적과 도로망의 발달에 따른 전국 1일 왕복 운송이 가능한 오늘날 사업구역을 9개(시·도)로 세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다.

화물유통체계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화물유통정책의 기본방향은 기업이 화물유통비용을 절감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거시적인 화물유통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부문이 감당하기 어려운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시설과 화물터미널을 확충하고 화물유통산업에 대한 지원 및 규제 정비를 통하여 외부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화물터미널의 확충

최근 정부는 극심한 화물적체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로·항만 등 교통시설확충을 당초 계획보다 1~2년 앞당겨 완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정형편이나 국토여건상 교통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송을 비롯한 화물유통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화물유통수요와 시설공급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화물터

**화물유통정책의
기본방향은 기업이
화물유통비용을
절감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거시적인
화물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미널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전산망을 갖춘 화물터미널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 산재된 화물을 모아서 대형트럭이나 철도를 이용하여 장거리 수송을 함으로써 수송수단별·거리별 분담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국의 주요 화물집산지에 수송·보관·포장과 하역 및 정보관리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복합 화물터미널을 건설하여 수송체계를 복합화물 터미널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정부규제의 완화

정부는 기존 화물유통업체의 보호나 질서유지 차원의 소극적 정책보다는 경쟁촉진을 통한 산업발전과 체질개선이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하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창고보관업에 대한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자 한다.

우선 '91년 말까지 일반구역화물의 사업구역을 확대개편하고 특수자동차(냉동차·탱크로리)의 사업구역제한을 폐지하며, '92년 말까지 일반구역화물과 용달화물에 대한 면허제를 등록제로, 창고보관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노선화물과 창고보관 요금의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화물유통촉진법 제정 추진

■ 법률제정의 배경

하나의 제품이 생산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는 다수의 수송주체와 수송수단(트럭·선박·철도 등)을 거치게 되고 창고·화물터미널·항만과 같은 유통시설을 이용하게 되며 수많은 하역작업이 뒤따르게 된다.

화물유통촉진법 제정의 목적은 화물유통과 관련된 수송·보관·하역 등 물류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에 장애가 되는 법적·제도적 제약

요인을 제거하고 새로운 물류여건 변화를 수행하는 데 있다.

■ 법률의 주요내용

〈물류표준화 추진〉

첫째, 수송·보관·하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파렛트·지게차·화물자동차적재함 등 유통관련 장비와 운송포장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운송요금할인 등 표준장비의 보급촉진을 위한 우대조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복합운송제도 도입〉

둘째, 단일 주체가 육·해·공 일관수송과 보관·통관 등 관련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복합운송제도를 도입하였다.

〈화물터미널 건설지원〉

셋째, 막대한 부지와 재원이 소요되는 화물터미널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부지확보 및 금융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화물유통체계 개선의 기대효과

앞으로 도로·항만·철도 등 교통시설이 어느 정도 확충되는 것을 전제로 화물유통산업에 대한 불합리한 정부규제가 완화되고 가칭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수송·보관·하역 등 화물유통기능이 점차 효율화되어 기업의 원가절감에 도움이 되고, 화물유통업자에 대한 공신력이 확보되어 이용자인 화주는 본업인 생산과 판매에 보다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시설의 확충이나 제도의 정착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용국민과 업계·정부 등 관련주체들의 상호양보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본다. 날짜
문제

화물유통촉진법은 물류기능의 효율적 수행에 장애가 되는 법적·제도적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새로운 물류여건 변화를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주현정
체신부 전산망과장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이란 정부, 금융기관, 교육·연구기관 등 공공부문의 전산화를 촉진시켜 국민에게는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고 각 기관은 업무의 높은 효율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에 투자되는 비용을 국내 정보산업육성에 활용하여 컴퓨터 등 전산망의 기본시스템을 국산화하고 국가의 중추신경계라 할 수 있는 기간전산망을 자력으로 구축·운영하는 기술을 확보하여 국가경쟁력의 확보와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정책사업이다.

국가기간 전산망사업 추진배경

컴퓨터와 통신을 결합한 전산망은 그 활용범위가 금융·유통 등 서비스분야뿐만 아니라 제조업·교육·행정 등 사회전반에 걸쳐 확산되어 전산망의 이용기술이 해당분야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67년 경제기획원에 통계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컴퓨터가 도입된 이래 매년 이용이 늘어나 '83년도 이후 凡用컴퓨터는 연평균 48%, 개인용컴퓨터의 경우는 연평균 256%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도 크게 부족하여 우리나라의 전체인구나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전산망의 확충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전산망의 보급이 확대될수록 국내인력과 기술이 충분치 않아 장비나 기술의 해외의존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정보산업분야는 국가간의 기술격차가 심하고 선진국은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한편 시장개방공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어서 국가의 중추신경인 정부나 공공기관의 컴퓨터와 이용기술을 해외에 의존할 경우 기술종속은 물론 전산망의 자주적 운용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제기된 것이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이며, 국가사회의 전산화 촉진과 국내정보산업육성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추진체계

전산망사업의 추진과 전산망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 조정은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직속기구인 전산망조정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전산망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무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있는데, 전산망사업의 계획단계에서는 관련부처간 긴밀한 업무 협조와 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직을 맡아오다가, 본격추진단계에 접어든 '89년 6월부터는 체신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지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행정전산망, 금융전산망, 교육·연구전산망, 국방전산망 등 각 기간전산망별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에는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기관과 각 업무별로 주관기관이 있고, 주요업무의 전산화

와 전산망구축을 담당하는 전담사업자가 지정되어 있다.

한편, 전산망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개발과 기술의 표준화 및 전산망 개발보급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한국 전산원'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전산망조정 위원회의 실무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전산망 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여 왔으나 '91년 1월부터는 체신부에 정보통신국이 신설되어 전산망조정위원회 사무국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었다.

전산망 사업별 추진상황

행정전산망사업

행정전산망사업은 정부의 전산화대상업무 중에서 관련부처의 수가 많아 업무협조 및 자료의 공동이용 필요성이 높을 뿐아니라 전체 국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주민등록관리·부동산관리·자동차관리·고용관리·통관관리·경제통계관리 등 6개 우선추진업무를 선정하여 추진하여 왔다.

동 사업은 약 1,500억원의 국비와 400억원의 지방비를 투입하여 15개 시도와 업무별 주관기관에 160여대의 국산 주전산기를 설치하고 4,300여 일선기관에 설치된 1만 2천여대에 달하는 표준다기능사무기기를 온라인망으로 연결하여 해당 민원업무 등을 전산처리하는 것으로 순수 국내기술과 장비로는 국내최초로 전국적인 전산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미 전산망 구축이 완료단계에 있고 200여명의 전문직 공무원을 신규채용하여 전산망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1만여 일선공무원이 컴퓨터 이용교육을 마치는 등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주민등록관리업무는 시험운영중에 있으며 나머지 5개업무는 '90년 상반기부터 대민업무 전산처리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전산망의 구축으로 국민의 편의증진은 물론 부동

산대책 등 국가주요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전산망사업

금융전산망사업은 금융편의 증진효과가 큰 은행간 전산망의 조기 구축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왔다. 은행간 전산망은 개별은행간의 컴퓨터를 상호 연결하여 현금 자동인출기공동 이용시스템, 他行換시시스템을 구축하여 거래은행과 관계없이 아무 은행점포에서나 현금인출과 송금이 가능해졌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예금잔액 등 금융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자동응답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은행간 전산망에는 자체준비가 안된 한두개 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금융결제원은 개별은행별로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연결처리하기 위하여 주전산기 11대를 설치하였으며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단말기로는 은행점포에 설치 운영중인 은행용 단말기, 현금자동인출기 등이 사용된다.

교육·연구전산망사업

교육·연구전산망사업은 학교 컴퓨터 지원 및 인력양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학교 컴퓨터교육 지원사업은 '96년까지 1,2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만 1,809개 초·중·고교에 총 29만대의 컴퓨터가 지원될 예정인데, 이중 국민학교에 보급되는 15만대에 소요되는 재원 640억원은 한국통신에서 지원하게 된다.

'90년에는 전국 1,912개 학교에 186억원의 재원을 들여 4만 9,982대의 교육용 컴퓨터를 보급하고 82편의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새로이 개발·보급하는 한편 1만명의 컴퓨터교육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대학 전산관련학과에

국가기간 전산망사업은 국가사회의 전산화 촉진과 국내정보산업 육성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주전산기, 소프트웨어 및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하여 관련업체의 협조를 받아 4개 지방국립대학에 국산 주전산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전산망사업은 대덕연구단지내 15개 연구기관을 서로 연결하여 시범연구전산망을 구축, 운영중에 있으며 서울·대덕·부산·대구, 광주에 5개 지역전산지원센터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연구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중에 있다.

기술개발현황

주전산기

국가기간전산망의 수요를 바탕으로 중형급 주전산기의 개발에 착수하여 기술도입 기종인 주전산기 I은 행정전산망사업에 160여대가 투입·운영중에 있으며 자체 설계기종인 주전산기 II는 '91년 7월에 試製品 제작을 완료하고 '92년부터는 상용화될 계획이다.

주전산기 I과 II의 개발은 산·학·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87년부터 '91년까지 총33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체신부, 과기처 등 정부부문에서 100억원, 민간부문에서 235억원을 조달하였다.

국산 주전산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전기술을 도입, 국산화(주전산기 I)함으로써 중형 컴퓨터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전산기 II를 우리 기술로 설계·개발하게 되었다.

다기능사무기기

다기능사무기기는 정보자료사용의 100% 互換性 유지를 목표로 표준사양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능시험평가에 합격한 제품은 업체나 기종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전산망용은 '87년 10월에, 교육용은 '89년 10월에 표준사양을 제정하였는데, 표준한글코드·표준자판 등은

필수사양으로 하고 업무특성에 따라 성능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전산망용은 1만 2천여대가 일선행정기관에서 이용중이며 교육용은 '96년까지 모두 29만대가 보급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기관간 중복업무의 개발은 전담사업자를 활용하거나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가능한 한 민간업체에게 개발케 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에 시장을 제공하고 있다.

행정전산망은 6개 우선추진사업에는 7개 전문업체와 20여 중·소 입력업체가 참여하였으며 금융망 공동업무와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금융결제원과 교육개발원에서 각각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표준다기능 사무기기가 설치된 사무실에서 일반이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워드프로세서·자료관리용 소프트웨어·계산표처리용 소프트웨어도 표준화해서 보급하고 있다.

기타 지원사업

국가기간전산망에 사용되는 통신회선은 별도의 품질향상 및 예방보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표준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표준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표준화 연구사업을 위해 한국전산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92년까지 16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한국전산원의 감리기능을 보장하여 공공기관 전산화사업의 기술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향후의 발전방안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한 1단계 주요사업이 마무리되어 본격적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의 확충으로 국내 정보산업에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기술 개발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 사업추진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분야별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2단계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산망조정위원회와 전산망별 추진위원회에서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92~'96)중에 추진될 국가기간전산망 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그 주요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국가기간전산망 확충

행정전산망은 2단계사업을 추진하여 기 구축된 전산망을 활용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여러부처 공동사업을 선정, 중점추진하고,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해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며, 地方自治制 실시에 따른 지방행정전산화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전산망사업은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 외국은행의 24시간 연중무휴 서비스체계와 경쟁하기 위하여 기업-은행을 연결한 기업금융(firm-banking), 기업-가정을 연결하는 가정금융(home-banking) 등 對顧客전산망을 구축해 나가고 이를 위해서 '91년에는 은행간 공동추진사업 선정 및 표준화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연구전산망사업은 학교컴퓨터 보급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소프트웨어개발, 교사 연수계획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도서관망, 대학전산망사업 및 연구전산망 구축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방전산망사업도 보완계획이 확정단계에 있으므로 이를 본격 착수토록 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전산망의 추가 조정도 계획하고 있다.

정보산업 육성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확충으로 국내 정보 산업에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 관련기술 개발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국산 주전산기 I·II 개발사업을 통해서 축적된 경험과 양성된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주전산기 III 개발계획을 조기확정·착수할 예정인데 주전산기 I (도입기종)의 성능 개량과 주전산기 II (독자기종)의 상용화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기능사무기기는 그래픽기능 보강, 보조기억장치 다양화 등 성능을 강화해 나가고 한글 명령어 처리가 가능한 OS(운영체계)도 개발하여 표준 사양에 반영·보급할 수 있도록 하며 유해전자파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전자파에 의한 장애방지대책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응용소프트웨어는 가능하면 민간에 위탁 개발토록 유도하고 컴퓨터 운영소프트웨어 개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가표준제정을 강화하여 국제화에 대비한 국내 환경을 정비해 나가는 것도 주요과제가 된다.

전산망 안정운영체제 구축

국가기간전산망 안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성격을 지닌 전산망 운영 지원전담기관을 설립하여 공공기관의 희망에 따라 전산망 수탁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도록 하고 국가기간전산망 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 정부·공공기관 통신회선의 안전성 확보와 보안유지 및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산화로 인하여 야기되는 역기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련제도보완과 기술적 안전대책도 수립, 추진하고 현재까지 전산망사업을 추진하면서 습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기기 및 기술의 해외진출 가능성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본문

응용소프트웨어는 가능하면 민간에 위탁개발토록 유도하고 컴퓨터 운영소프트웨어 개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원자력기술협력



이순철
과학기술처 인전심사실
항공기과

주지하는 바와같이 지금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소련과 동구는 개방과 개혁의 큰 물결로 덮여 있고, 유럽지역은 EC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북미지역은 자유무역협정을 기반으로 단일경제권으로 바뀌어 가는 등 동서 냉전체제의 변화와 경제 블록화의 기류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걸프전 후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질서 개편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첨단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제3의 산업혁명을 지향하는 '지구촌 국제화'라고 볼 수 있겠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전개된 국제화 과정은, 선진국에서 후발개도국과 후진국으로 주어지는 경제기술 원조가 중심이 되는 '개발적 협력'과 핵무기 등 군사기술 보호, 지적 소유권 보호 및 지구환경 보호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규제적 협력'의 두 가지 이율배반적인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자의 경제기술 협력이 인류공영의 순수한 이념을 추구하는 국가간 개방을 촉진하는 것이라면, 후자의 규제적 협력은 자국의 보호주의를 표방하면서 국가간 갈등과 복잡한 상호 규제를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양대 축에 따라 새로운 국가규율과 질서가 수립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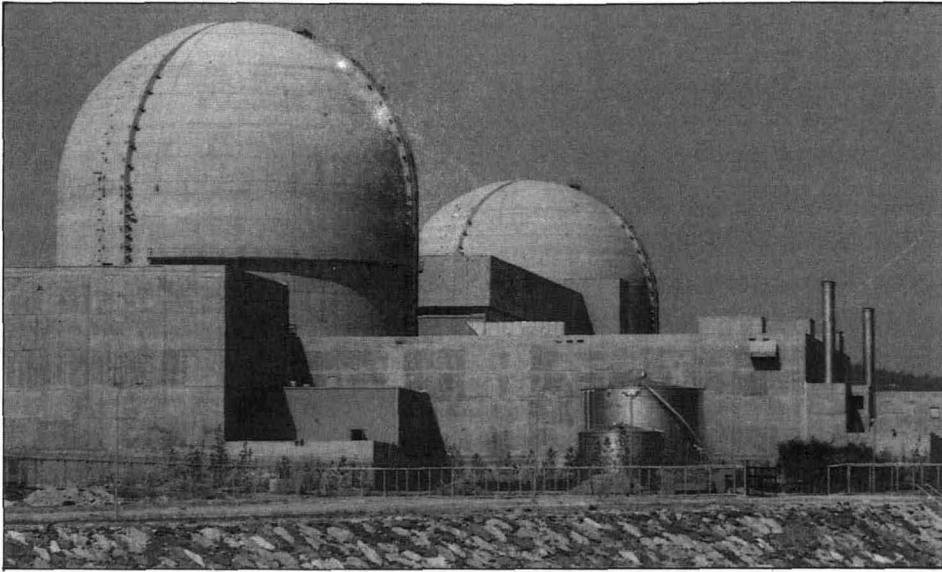
동아시아지역의 협력 필요성의 대두

일본경제신문 논설주간 市岡揚一郎씨는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역할'이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다음과같이 주장하였다.

“동아시아 경제에 있어서의 일본의 역할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의 내수시장 기반을 보다 확고하게 다지고 이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이 같은 노력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민소득을 끌어올리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일본과 전체 동아시아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은 보다 자발적으로 동아시아 국가에 기술을 이전하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이들 지역국가의 인력훈련과 고용기회 창출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걸프위기는 우리에게 국가간에 존재하고 있는 부의 불균형 현상이 엄청난 불행은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 주었다. 따라서 동아시아 경제는 공정과 균형에 바탕을 둔 발전모형을 지향해야 할 것이며 일본은 이를 실현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은 일본인의 시각에서 본 동아시아지역 경제분석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어 인용하였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관계가 날로 긴밀해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선 생각해야 하는 것은 각국간의 구체적인 협력과 제반 문제점들을 협의하기 위한 가시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협의는 구체적인 사항을 대상으로 해야 하므로 단숨에 정치·경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국가간 협의체 구성으로서는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자연발생적인 사항들을 하나



원자력산업은 토목·건축뿐만 아니라 기계·화학·전기·전자·컴퓨터 등의 최신과학기술이 결합된 종합시스템 산업이다.

하나 협의해 나가기 위해 필요하고도 충분한 분야를 우선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협의의 장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원자력 국제협력의 필요성

원자력산업은 토목·건축뿐만 아니라 기계·화학·전기·전자·컴퓨터 등의 최신과학기술이 결합된 종합시스템산업이다. 대개 원자력시설의 경우 초기 시설투자가 방대하고 단위시설용량도 대단히 크며 建設工期 또한 대단히 긴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원자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고도의 전문기술과 축적된 경험을 필요로 하며 산업 전반에 걸친 기반이 사전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이 원자력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핵선진국과의 원자력 기술협력이 불가피하며, 선진국의 경우도 원자력사업에 있어서는 상호협력을 통해 역할을 분담, 추진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원자력은 평화적인 목적의 에너지 이용 측면 외에 핵무기로의 전용 위험을 함께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핵무기비확산 조약(NPT)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핵무

기 개발이용을 금지시키고 원자력을 평화적으로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 확인·감시를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로 하여금 회원국의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해 사찰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핵선진국들은 이와는 별도로 핵물질·핵시설·기술정보 등의 이전에 따른 핵무기확산 위험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Zannger위원회’ ‘London Club’ 등의 공동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핵무기개발과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원자력 주요시설, 장비, 부품 및 기술을 수출 규제품목(Trigger List)으로 정하고 이들 품목의 수출을 금지 혹은 제한시키고 있다. 수출할 경우 상대국과 사전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이나 외교각서 교환 등을 통해 IAEA 안전조치 적용, 농축·재처리와 협정적용 대상품목의 제3국 移轉時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핵물질, 시설장비 및 기술정보를 도입코자 하는 국가의 경우 핵선진국들의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는 가운데 원자력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자력 협력은 순수한 과학기술 협력의 성격 외에 핵물질·시설·장비·기술정보 등의 핵무기

원자력분야는 세계 각국이 국가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에너지 확보 측면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면서 국제간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이전이 강력히 요청되고 있다.

전용방지를 위하여 정기·비정기적으로 이를 감시·감독하고 확인하는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다.

이와같이 원자력분야는 세계 각국이 국가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에너지 확보 측면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면서 국제간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이전이 강력히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핵무기 비확산을 전제로 한 협력이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제반 보장사항들에 대한 국가간 협의도 필수적이다. 또한 '86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핵사고가 미치는 영향이 당사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주변지역국들에게까지 확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자력의 안정성 및 核事故時 국가간 협력의 당위성에 대한 목소리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원자력협력 방향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90년 '제1차 아시아 지역 원자력협력 국제회의'가 일본에서 열린 데 이어, 금년 3월에도 제2차 회의가 동경에서 열려 한국·일본·중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호주 등 8개국의 각료급 대표들이 아시아지역 협력방안을 협의하였다. 동아시아지역 국가들 중 일본, 중국과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 및 원자력기술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필리핀 등은 원자력개발을 시작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향후 10~20년 내에 이 지역 내에서 펼쳐질 원자력이용 확대 추세를 감안할 때 동아시아지역간 원자력협력은 초기단계인바, 기초를 충실히 다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처장관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향후 동아시아 원자력협력방향의 일단을 제시하였다.

“첫째, 본 회의에서 채택된 협력사업을 충실

히 수행할 수 있는 조직적 운영체제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협력사업책임자 및 각국 정부의 실무대표단 협의체를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각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상설운영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제안한다.

둘째, 원자력기술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원활한 기술이전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보다도 원자력기술자의 양성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시아지역 원자력훈련센터망(Asian Nuclear Training Center Network)을 구성하여 이용한다. 예를 들면, 방사성동위원소·의학훈련센터·농업훈련센터·공업훈련센터·환경훈련센터와 연구용원자로훈련센터 등인데, 일본에는 강사훈련, 고급기술훈련을 위한 종합훈련센터를 두고, 한국에는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와 핵의학협회 및 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연수원이 공동으로 방사성동위원소 의학훈련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로, 원자력과학자들간에 정보자료교환을 원활히 하고 연구시설을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예를 들면 연구용원자로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정보자료의 교환, 원자로의 공동이용, 공동연구, 연구로시설의 개방 등으로 상호협력을 가속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지난 12월 노대통령의 소련방문시 소련학술원 극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격월간지 '극동문제'의 부주간 세르게이 E. 쿠다소프는 “현재 아시아에서는 새로운 경제협력의 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소련은 이 지역의 경제체제 속에 포함되기를 원하며 한국이 이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는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공민



정상 바라보며 현 위치 확인하는 노력을

경 제기획원은 '안 하는 것도 없고 못 하는 것도 없는' 부처라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경제운용 전반에 걸쳐 장단기 정책과제를 총괄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 데다 지난 '60년 이후 개발연대를 이끈 주무부처로서 모든 공과에 대해 직접 혹은 간접적인 책임까지 동시에 피할 길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일부에서는 기획원이 과거 명성에 걸맞지 않게 단기적이고 현실대응적인 시책 만들기 너무 얽매어 우리 경제의 장래를 꿰뚫는 비전 제시나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다소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사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총체적 난국'으로까지 불리던 위기감이 사회 전반에 퍼진 데다 금융실명제 유보라는 중대한 정책기조의 변화에 부수해 경기부양·물가안정·부동산투기억제 등 시각을 다투는 대책 마련에 눈코 뜰 여유가 없었으므로 보다 장기적 안목과 문제의식을 요구하는 이 같은 지적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연한 시비 정도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올 들어 일련의 사태전개를 음미해 보면 사정은 다소 달라지는 것 같다. 최근 여신규제완화를 둘러싸고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업종전문화 유도방침과 관련,

기획원은 뚜렷한 입장을 갖고 있지 못한 느낌을 주고 있다. 국내재벌들의 실상으로 미루어 주력업체선정을 업계자율에 맡길 경우 석유화학·전자 등 일부 분야에서는 중복과잉양상이 빚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 업종전문화에 대한 기획원의 지금까지 입장은 '산업정책적 고려를 배제할 수 없지만'이란 단서를 달면서도 업계의 자율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정도다. 이 같은 자세에 대해 사람들은 기획원이 과거 중화학 투자조정 악몽에 질려 선뜻 입장표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려하는 기색이다. 혹자는 업종전문화방침의 정책이니셔티브가 다른 기관에서 제시됐으므로 뒤늦게 끼어들기가 엉거주춤하기 때문일 거라고 억측하기도 한다. 기획원의 총괄조정역할이 지속되는 한 소극적 입장을 견지했다고 해서 정책공과에 대한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닐 것 같아 적이 염려스럽다.

또 청와대에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이 설치되고 첫 보고서가 발표되는 과정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도 석연찮은 구석이 없지 않다. 기획단이란 명칭 자체부터가 중복의 인상이 있을 뿐 아니라 첫 보고서의 현실인식·대처방향 등도 지난해 기획원이 이미 지적한 수준과 크게 다른 느낌을 받지 못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을 앞두고 한 관계자는 "서비스 시장개방 등 엄청난 파급효과가 불가피한 사안인데 국내업계는 뭘 믿고 저리 태평인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만약 기획원이 예상되는 충격을 정확히 있는 그대로 알려줬다면 아마 업계는 하지 말래도 스스로 살아 남기 위한 몸부림에 부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획원의 조정역량에 대해 이런 비유를 들어 비판했다. 특정분야에 대한 지원규모를 놓고 A부처와 B부처가 50억원 이상은 안 된다느니 1백억원 은 돼야 한다느니 의견이 엇갈려 있을 때 중간선에서 절충점을 제시해야 조정역할의 의미가 있는데 요즘 기획원은 30억원을 주장하며 양쪽을 모두 공박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지적도 따지고 보면 기획원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생긴 얘기일 것이다.

최각규 부총리는 취임 이후 '일관성 있는 집행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의 참뜻이 발끝만 바라보고 걸으라는 의미는 아닐성싶다. 산을 오를 때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한 디딤도 중요하거니와 늘 정상을 바라보며 현재 위치를 재확인하는 노력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유석기 한국일보 기자 / 경제기획원



‘차량10부제 운행’ 해제 유감

기자는 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교육받았다. 그리고 지키려 노력했다. 그러나 기자도 사람이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출입처 또는利害에 따라 동요되고 편협한 면을 보인다. 그리고 주관을 드러낸다.

한 예로 몇년 전 5공화국 때, 시멘트업자와 아스팔트업자가 목숨 걸고 싸운 적이 있었다. 도로를 무엇으로 포장해야 되느냐 때문이었다. 물론 양업계는 이권이 달려 있기에 갖은 힘을 동원했다. 그때 아스팔트를 다루는 석유화학업계 출입기자가 있었다. 그 기자는 시멘트포장도로는 타이어가 쉽게 마모되고, 경제성, 시공의 어려움을 내세워 반대론을 폈다. 어느 날 순환인사에 의해 그 기자는 시멘트업계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이 기자는 언제 내가 그랬느냐 식으로 아스팔트도로보다 시멘트도로가 경제성이 높고 수명이 길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써 냈다.

최근 나는 동자부를 출입하면서 에너지절약과 관련, 나도 이 같은 편협성이 생긴 것이 아닌가 우려하게 된다.

에너지절약을 위해선 차량10부제도 계속 실시해야 하고, 에어컨 할부 판매도 금지해야 하고, 휘발유 가격도 당장 올려야 하고……. 에어컨을 만드는 업체나, 국민의 부담은 뒷전에 둔 채 말이다.

그러나 부디 이 글이 동자부 출입 기자이기에 에너지절약만 강요하는 논조에서 나왔다고는 보지 말아줬으면 한다.

차량10부제 운행은 지금 거론할 필요가 없을지 모른다. 이미 폐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외로 아쉬워하는 사람이 많다.

물론 반대여론도 많았다. 법적 근거도 없이 석유(?) 전쟁도 끝났는데 국민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주장을 비롯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그래서 정부는 걸프전이 끝나도 에너지절약시책 차원에서 계속해서 10부제를 운행한다고 했다가 며칠 만에 해제를 선언하기도 했다. 1개 부처에서 다루도 될 것을 총리주재로 감론을박, 이틀씩 토론을 하는 해프닝(?)을 보이기도 했다. 물론 동자부장관은 끝까지 10부제 운행을 고집했다. 누가 봐도 에너지장관다운 발언이었다. 그러나 이 주장도 법적 근거, 행정력 황포, 권리박탈 등 다른 장관들의 주장엔 밀릴 수밖에 없었다. 석유 절약 때문에 실시했으나, 교통난해소라는 덕을 본, 어부지리한 교통부마저도 나중엔 손을 들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10부제는 에너지절약에서 교통문제 차원으로 확산되어 결국은 종합교통 대책을 만든다는 명분 아래 사라져 버렸다.

제일 섭섭했던 것은 동자부였

다. 걸프사태로 이 제도를 창안, 자발적으로 동자부가 맨 먼저 실시해왔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제도가 없어진 지금도 동자부는 묵묵히 차량10부제를 운영하고 있다.

원칙은 옳은데도 서류에 따라, 여론에 따라, 소관부서의 힘에 따라 밀리기도 하고 부각되기도 하는 경우를 이번의 차량10부제 운행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나친 말일까.

휘황한 네온사인, 주차장 같은 도로의 차량 홍수, 흥청거리는 각종 에너지소비……. 이것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 어울리는 일인가. 차량10부제 운행은 문제가 있다면 보완했어야 했고, 법적 근거가 없다면 근거를 만들어 계속 시행했어야 했다.

차량10부제 운행을 해제했는데, 어디 이보다 더 효율 높은 교통문제와 에너지절약 방법이 있다면 내놓아 보라는 주장이 나옴직도 하다.

어쨌든 동자부는 조용히 자발적으로 지금도 차량10부제 운행을 계속하고 있다. 나라경제

함승용 매일경제신문 기자 / 동력자원부

소련경제와 한·소 경제협력

—소련경제학자 초청세미나—



최근 고르바초프의 新思考 및 개방정책, 그리고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북방정책추진에 힘입어 한·소관계는 급격히 개선되어 가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 4월 19일의 제주도 한·소 정상회담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한·소관계의 보다 내실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소련이 내부의 경제·정치·사회적 혼란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협력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활발한 접촉이 있어야 한다.

本誌에서는 國民經濟制度研究院이 4월 16일 이 두가지 주요 현안을 주제로 개최한 소련경제학자 초청세미나의 내용을 요약·소개한다.<편집자 주>

주제발표자 :

Alexander Dynkin 소련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 부소장
Valery Zaitsev 소련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 부장

주제발표

제1주제 소련경제의 현황과 전망

주제발표 : A. 단킨

소련은 현재 경제, 이데올로기, 제도적 구조, 민족관계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갈등과 위기의 심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생산은 전년대비 5% 감소하였고, 소매물가는 공식적으로는 5% 상승했지만 잠재인 플레까지 포함한 상승률은 19%에 이르렀다. 일부에서는 경제개혁의 실패를 정치(민주화·개방화) 탓으로 돌리지만 오히려 경제실패가 정치적 갈등과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위기가 초래된 주원인은 다음 네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오랫동안 자리잡아 온 행정·명령경제의 전통이다. 이 체제는 자본재·중간재 등에 지나치게 역점을 뒀으로써 철강·시멘트·기계류 등에서 소련을 세계 1위의 생산국으로 올려 놓았지만 소비재산업 분야는 낙후를 면치 못하였다(소비재는 생산비중에 있어서도 20%에 불과하다). 또 이 체제는 생산동기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왜곡을 가져왔다.

둘째, 과도기적 상황의 과제로서 명령경제는 급속히 무너지고 있지만 시장경제체제는 그와 같은 속도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85년 이후의 경제정책적인 실책을 들 수 있다. 경제개혁은 과거에 누적된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그대로 둔 채 시도되었으며, 한편 개혁을 추진할 정치인들은 사회적 기대가 과잉된 분위기에서 극히 최근에 자유선거를 통해 선출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분출하는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회개발재정을 과도하게 팽창시켰으며 그 결과 실물과 금융자산의 불균형으로 인플레이가 발생했다. 참고로, 사회개발비는 '89년에 30억루블, '90년에 190억루블이었으며 '91년에는 479억루블로까지 팽창될 전망이다.

넷째, 행정권력의 약화, 공화국들의 자치요구확대, 원시적 民衆主義의 성장 등 정치적 요인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의 페레스트로이카에서 얻어진 지식과 경험은 앞으로의 경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앞으로 소련경제를 전망함에 있어서는 세가지 주요변수 즉, ▲경제정책 특히 금융안정화 정책의 성공정도 ▲기업간 수평적 결합을 창출해내는 속도 및 그 질적 수준, 한마디로 시장하부구조의 적절한 형성 여부 ▲사회·정치적 상황의 전개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소련경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두 개의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다.

비관적 시나리오, 예컨대 정치적 수단에 의한 물적 흐름의 통제, 방만한 금융정책, 적절한 시장가격형성을 거부

하고 관리가격상승으로 대처하는 등 기존의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예측인데, 이 경우 초인플레이, 생산량의 15~20% 감축, 사회적 긴장과 갈등증대 등이 예상된다.

낙관적 시나리오, 모든 압력을 물리치고 성공적인 안정화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단, 이 정책은 각 공화국과의 협조 속에서만 실행 가능하다. 왜냐하면 안정화정책은 모든 조치가 반드시 동시적으로 실행되어야 소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가격 자유화, 재정규모 축소와 통화긴축을 포함한 근원적인 금융안정, 소득·임금 통제, 기업 민영화 개시, 軍需部門 축소, 해외투자 유치 등 여섯가지 요소를 갖는다. 이 경우는 9~12개월 동안 산업생산이 30~35% 정도까지 감소하고 대규모 실업의 발생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 최악의 순간을 넘기면 시장경제로의 移行에 가장 긴요한 루블화의 가치안정이 가능할 것이다.

위의 두 시나리오 중 실제의 현실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명백하지 않다. 최근에 발표된 '위기관리대책(anti-crisis programmes)'은 오래 기다려왔던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올바른 선택이라고 본다. 이 '대책'의 근본특징은 종래와는 달리 시장경제로의 이행 자체를 안정화의 주요 수단으로 보는데 있다.

우리가 문제를 보다 장기적으로 보면 고무적인 여러 긍정적인 요소들이 소련내부에서 태동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동안은 시장경제나

계획경제나 문제로 논란을 벌여왔지만, 이데올로기적인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개혁에 미온적이었던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없어졌다. 이제는 시장경제 또는 과거 독일의 에르하르트가 말한 사회시장경제의 타당성에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정신이 크게 성장했고 아직 그 절대규모는 작지만 많은 자영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업은행·상품거래소 등 시장하부구조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제2주제 '90년대의 한·소 경제협력 전망

주제발표 : V. 짜이체프

최 근 고르바초프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環太平洋經濟에의 소련 참여에 대해 강력한 희망을 표명했고, 그 이후 이 지역에 대한 소련의 정책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한·소교역은 지난 3년간 매년 거의 두배씩 급속히 증대해 왔다. 한국의 북방정책이 결실을 맺게 되면 이 모델은 다른 나라들에게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중국이 동쪽 해안을 열고 소련이 시베리아와 극동을 개방하면 한국은 아시아의 여러 국가간 협력을 매개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소경제협력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있어서는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다양한

시각이 있으며 서로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견해도 있다. 정치적 문제를 차치하고 소련이 경제개혁을 꾸준히 지속한다고 전제하면, 한국의 기업과 정부가 소련과 협력하겠다는 의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현시점에서 외국의 기업이 경제협력에 대해 열의를 갖지 않는 것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가 많다. 예컨대 소련에서 외국무역은 여전히 국가기구에 의해 규제·감독되고 있으며 이것은 외국기업에 경영상의 온갖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다. 또한 소련의 교역규제나 외국인 직접투자에 관한 것은 대부분 억제적이며 포괄성이 없으며, 사업활동에 필요한 정보가 지극히 불충분하여 소련내의 다른 기업과의 협조가 어렵다. 소련의 경영자들은 시장경제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商價 掣이나 절차에 익숙하지 못하다. 이 모든 사항들이 외국기업들로 하여금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만들고 있다.

한·소경제협력의 미래는 소련의 개혁속도, 해외투자환경의 개선, 루블화의 兌換性 보장 등에 결정적으로 의존할 것이다. 개혁이행과정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당분간은 어느 정도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개혁이 불가피한 한 이러한 혼란은 긍정적 발전을 위해 견어야 할 '자연스러운' 부작용이며 이해와 관용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협력이 있어 단기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조건하에서는 대규모 사업계획이나 오로지 합작기업(joint venture)에만 주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기존의 시설이용도를 증대시키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소련의 수출부문에서의 정책방향은 '1차산물의 직접 채취→수출'은 인허가제도 등을 이용해 최대한 억제하고, '현지가공→수출'을 권장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관광·호텔업·수송·보관업 등 서비스 분야는 가장 유망한 분야이다. 이런 사업에 참여할 때 가장 긴요한 사항은, 현지의 노조 및 소규모기업들과 긴밀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 일이다.

넷째, 개혁에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므로 산업부문의 상호협조는 루블화의 태환성이 일부라도 확보된 후에 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한·소경제 유대를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관리들보다 개별기업이나 그 협력업체와 접촉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

여섯째, 소련은 첨단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상업화하는 것이 유망하다.

일곱째, 군수산업의 많은 부분을 소비재나 첨단기계류 생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므로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가 위험도도 적고 많은 보상이 기대된다.

소련경제의 잠재력과 시장규모를 고려할 때 한·소 경제협력은 지금의

여러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발전시키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질의·문답 요지

—소련의 단기경제전망에 관한 두가지 시나리오의 근본적 차이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방만한 정부재정과 기업운용을 허용하는 ‘약한 예산제약체제 (soft budget constraint system)’와 이를 불허하는 ‘강한 예산제약체제 (hard budget constraint system)’의 차이이다.

—루블화의 태환성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는가?

▲이 문제는 2단계로 풀어가야 한다는 논의가 일부에서 일고 있다. 즉, 1단계는 내부태환성 확보인데 국내기업들간 여러 도시에서 외환거래시장을 설치하고 여기서 투블화와 외환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제2단계는 대외태환성 확보인데, 외국기업이 소련에서 획득한 수익을 시장에서 시장률 (market-rate)로 교환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어쨌든 부분적이거나 소련이 루블화의 태환성을 확보하려면 약 5년은 걸릴 것이다. 완전한 태환성은 더 먼 장래의 일이다. 한국의 원화도 완전 태환은 안되고 있지 않은가?
 —기업민영화의 현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가?

▲민영화는 세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소규모·서비스업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둘째, 임대에 의한 사전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자본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A. 딘킨(좌) IMEMO 부소장과 V. 파이체프 부장(우)

에 대한 사용료를 일정기간 허용하는 일종의 생산자조합(worker-collective)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중규모기업에 적합하다. 셋째, 대기업의 민영화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내포한 분야로서 주식회사 형태의 창설을 통해 정부의 통제도 지금까지처럼 생산량을 직접 명령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적 통제로 바꾸고 있다. 이 국가소유의 주식을 어떻게 민간소유로 바꿀 것인지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소련학자들이 생각하는 ‘시장경제’라는 개념이 모호하다. 예컨대 본격적인 시장경제는 상품·자본시장뿐 아니라 노동시장을 필요로 한다. 과연 소련의 일반 노동자·국민들은 노동시장의 설립을 허용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일전에 리가초프는 노동시장 없는 시장경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경제학자인 나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어찌됐건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 생계를 꾸리는 것이 사회주의의 개념에도 일치한다. 무엇이 사회주의인가? 과연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크 공화국이 스웨덴보다 더 사회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 소련에서는 이제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냐 하는 ‘이데올로기적’ 논쟁은 일부 학계내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며 일반적으로 혼합경제(mixed economy)로의 이행을 생각하고 있다.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개혁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계획인가?

▲소련에서는 경제개혁부터 하고 여기에 일정한 성과가 있는 연후에 정치적 민주화를 시도했어야 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주장에는 일리가 있으며 중국이 그 좋은 예이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과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나리경제]

요약·정리: **조원희**

국민경제제도연구원 책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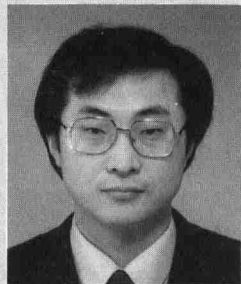
성과배분제도란 기업단위, 공장 및 부서단위의 경영성과, 또는 생산비용 절감이 목표치를 상회할 경우 성과의 일정부분이 근로자들에게 현금·주식·복지기금 등의 형태로 배분되는 제도를 말한다.

성과배분제도의 장점으로는, 경기 호·불황시 노사가 보람과 고통을 공유할 수 있고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한편 근로의욕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실시하는 회사가 40여개 정도의 미미한 숫자에 불과하나 생산성과 노사관계 및 근로자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천에 있는 O제조업의 경우에는 '82년부터 법정관리하에 있는 기업이지만 '88년부터 노조의 요구에 의하여 성과배분제도를 도입한 이후

나라경제 논단

성과배분제도 : 도입방법 및 사례



정인수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성과배분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 노사간의 신뢰가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성과배분 관련 정보자료의 진실한 작성과 상호교환, 성과산식 자체의 객관성·단순성을 위한 노력, 성과확인에 대한 노·사 공동참여 등이 요구된다.

임금협상이 순조롭고 생산성향상 및 애사심이 증대되었다고 하며, D제약회사의 경우에는 '83년 사업주의 제안으로 도입되었는데 매출액 및 경상이익의 신장률이 매년 40%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미국·일본·호주·영국·싱가포르 등지에 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배경을 보면 '80년대 초의 경제불황 여건 속에서 확산되었는데, 기업측은 인건비 상승은 억제되어야 하나 경쟁력은 유지해야 하고 근로자측은 임금양보가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실 속에서 성과배분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불황기뿐만아니라 호황기에도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를 보면, 성과배분에 관한 226개의 연구결과 중 94%인 212개가 성과배분제도의 도입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켰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생산성이 평균 7.4%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에서의 성과배분제도 도입률은 18%이며, 일본의 경우에도 '88년말에 일본생산성본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도입률이 20% 수준으로 과반수 이상이 성과배분제도 실시 후 수령하는 임금총액이 다른 회사보다 많다고 대답하고 있어 성과배분제도 실시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사간의 고려사항

성과배분제도 도입에 따른 노사의 고려사항을 보면, 먼저 근로자측으로서는 노조의 단체교섭력 약화, 임금소득의 불안정 문제가 주관심사로 등장한다. 그러나 조합의 약체화가 노사간의 타협과 조화로부터 일어난다고는 볼 수 없고, 그보다는 조합의 비민주적 운영 및 단체교섭 방법상의 부실 등에 기인하는 경우가 더 많다. 성과배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노사협력증대 및 생산성 향상의 결과로서 성과배분액 자체가 증가하고 있고, 성과가 목표보다 낮아졌을 경우에도 최소한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보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따라서는 기존의 고정적 상여금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임금소득 안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용자측으로서는 경영참가 요구 증대가 관심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도 성과배분제도가 경영특권참가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다는 예상은 기우에 불과하였고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성과배분 목표의 설정은 주로 사용자측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가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성과가 배분되므로 경영참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구체적 적용방법

성과배분의 구체적 실시방법에는 우선 성과산정지표로서 매출액기준, 이익기준, 생산비용절감기준이 있다. 매출액 기준이란 목표초과매출액의 일정부분을 근로자 배분 몫으로 성과배분하는 방식을 말하고, 이익기준이란 이익의 일정부분을 배분하거나 이익목표를 상회하는 초과이익의 일정부분을 배분하는 방식을 말하며, 생산비용절감기준이란 평균생산비용에 비하여 실제 생산비용이 적게 들었을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근로자 몫으로 성과배분하는 방식이다.

매출액기준을 권장하기에 적합한 회사는 회사업무의 성격상 제조보다는 판매의 비중이 높은 곳(예 : 제약회

사·자동차·백화점 등), 매출액에서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알려져 있고 그 비율이 시기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업체, 성과배분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거나 노사간의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은 회사라 할 수 있다.

이익기준을 권장하기에 적합한 회사는 업무 성격상 제조가 주가 되고 판매가 상대적으로 약한 곳(예 : 중소기업 제조판매 업체), 매출액을 성과산정지표로 채택하기에는 곤란한 업종(예 : 매출액에서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시기에 따라 급변하는 업체), 노사간에 신뢰가 높은 곳(가결산 또는 결산재무제표상의 이익을 근로자가 믿을 수 있는 업체)에 권장된다. 생산비용절감 기준은 공장 및 생산라인의 난이도 및 특성에 따라 분리하여 생산현장에서 실시하되 회사에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는 매출액 및 이익기준에 의한 성과배분도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성과배분형태에는 상여금·주식·복지기금의 형태가 있으며, 성과확인 방법, 성과목표의 결정, 성과지급 시기 및 개개인에 대한 지급방법 등의 결정은 회사의 특성에 맞추어 문서로써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다.

성공적 정착을 위한 중요사항

경영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전혀 하자가 없다. 그러나 성과배분제도의 정착에는 우선 노사간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성과배분 관련 정보자료의 진실한 작성과 상호교환, 성과산식 자체의 객관성·단순성을 위한 노력, 성과확인에 대한 노·사 공동참여 등이 중요하다. 성과배분제도의 시행과정에서 강원산업·한보탄광·경원세기·현대자동차서비스 등의 예에서와 같이 분배몫을 둘러싼 노사간 분규의 가능성도 또한 물론 있을 수 있다. 이들 분규사업장의 경우에는 성과배분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규정이 제시되고 있지 않고, 단지 '경영실적에 따라 성과를 지급할 수 있다'는 단 한 줄만으로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일어난 분규로 해석된다. 노사간의 신뢰, 회사사정에 맞는 성과배분제도의 적절한 적용 그리고 성과산정지표, 성과확인, 배분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노사합의와 이에 관한 문안의 확보를 통하여 분규는 충분히 방지될 수 있다고 하겠다.

유형별 사례

대응계약(매출액 기준)

이 회사는 세간에 잘 알려진 대규모 제약회사로서 성과

배분제도는 생산성향상과 근로자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노조설립 전인 '83년에 사업주의 제안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제도도입 이후 종업원의 회사경영실적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의식 및 애사심이 증대되었으며 노사간의 신뢰증가로 인하여 임금협상도 상대적으로 쉬워졌다고 한다.

이 회사의 성과배분은 목표매출액을 분기별로 설정해 놓고 만약 실제매출액이 목표매출액의 80% 이상을 달성한다면 목표초과 매출액 1% 당 2%의 분기별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목표매출액을 110% 달성한다면 당해분기에 $(110-80) \times 2\% = 60\%$ 의 상여금을 성과배분으로 추가지급하고 있다. 성과배분산정지표로서 매출액을 사용하는 이유는 제약회사의 특성상 경영성과가 판매실적에 크게 좌우되므로 매출액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매출액에서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시기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목표매출액의 설정자체는 영업부·기획부·담당이사실에서 연초사업계획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대한 노조의 간섭은 없다. 회사의 간부들에게 목표매출액을 알릴 때 노조간부들도 참석하게 하며 월별·분기별 매출실적도 전 종업원에게 공개하고 있다.

성과배분에 관한 규정은 회사규정집에 명시하고 있으며 규정변경시에는 노사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성과확인 은 분기별로 매출액 실적을 집계하고 있으며 개개 근로자에 대한 배분은 영업직을 제외한 전 근로자에게 동일률로 하나 영업직사원에게는 개인의 판매실적에 따른 업적급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실제 성과배분액은 150~200% 가량 된다.

성과배분시행과정상의 문제점으로서 생산물량품질시의 매출액 감소로 인한 성과배분감소에 대해 종업원이 불만을 가질 여지가 있고, 영업직사원의 업적급이 여타직원의 성과배분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도 소득형평의 관점에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존 고정 상여금은 500%이고, 노조는 '87년에 설립되어 25% 정도의 조직률을 보이고 있다.

D산업(매출액 기준)

이 회사는 중규모 냉·난방기 제조회사이다. 성과배분제도는 '87년에 근로자의 제안에 의하여 도입되었고 사업주도 이 방법밖에 없다고 적극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제도의 도입으로 불량률이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한다. 특징적인 것은 기존 고정 상여금 400%가 성과배분제도 도입 이후 모두 변동상여화하여 현재는 고정 상여금이 없다는 점이다.

이 회사는 매월 성과배분을 실시하고 있는데 매월 목표

매출액을 설정한 후 목표 상회 및 하회시 상여금을 각각 10% 증감하여 지급한다. 불량품 환입에 대하여는 환입금액의 20%를 매출실적에서 공제하고 있다.

한편 생산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생산금액에서 자재가 차지하는 비율을 표준화해 놓고 이보다 비용이 초과하거나 절감될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에서 일정률을 삭감 또는 추가하는 방법을 보완적으로 병행하고 있다. 목표매출액의 설정은 해당부서에서 연간 상여금 600%를 지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한다. 매출액을 성과지표로 활용한 이유는 전산화의 미비로 인하여 순이익 산출에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순이익에 대한 이해가 어렵기 때문이다.

노사협의회사 매출액 및 생산비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월 말일 영업 및 자재재고 등에 관한 자료가 나오면 다음달 1일 직원조회시 지난달의 성과 및 계획을 공표한다.

한편 종업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의한 목표미달시에는 매월 기본급의 50%를 최소한 지급하는 최소지급 규정을 두고 있다. 개개근로자에 대한 배분은 기본급 기준으로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는데 출근율 및 조퇴가 기준보다 많은 근로자에게는 5%를 감액 지급하고 있다. 이 회사의 그동안의 성과배분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매월 성과배분 상여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세금, 근로자저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매월 성과가 지급되는 이유는 회사측의 자금사정과 매달 성과확인을 함으로써 생산성과 직접 연계시키려는 의도 때문이다. 성과배분에 관한 규정은 취업규칙에 기록되어 있고 노조는 '87년 8월에 설립되어 노조원이 25% 정도이다.

태양코팅(이익기준 : 순이익)

이 회사는 한·일 합작기업으로서 소규모 코팅(도금) 회사이다.

성과배분제도 도입은 사업주가 일본기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노조측에 제시·수용되었다. 제도도입 후 실제배분되는 성과배분액이 근로자의 기대 이상이었던 관계로 근무태도가 좋아지고 불량률이 크게 감소하였다. '90년의 임금교섭에서는 기본급 인상이 남자 10%, 여자 15% 수준이었고 제도도입으로 임금교섭이 용이해졌다.

성과배분방식은 '90년에는 半期別 가결산상의 세금공제 전 순이익의 30%를 근로자 배분 몫으로 산정하고(참고 : '89년의 경우에는 분기별 가결산상의 세금공제 전 순이익의 10%를 근로자 몫으로 하였음), 30%는 투자자에게,

40%는 재투자로 배분하였다. 순이익을 산정지표로 선정한 이유는 이 회사가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판매는 주로 수출에 의존하므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이익발생 여부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경영측과 노조측이 매반기별로 재고조사 및 생산량조사를 함께 실시할 뿐만 아니라 생산목표, 경리·결산서, 손익계산서 등의 정보를 근로자측에게도 분기 1회씩 제공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 개별근로자에 대한 배분은 성과배분분의 50%는 개별근로자의 총임금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나머지 50% 중 45%는 출근율에 비례하며, 5%는 인사고과에 의한다. 성과배분금액은 '90년의 경우에는 근로자배분분이 1,600만원으로 정기 상여금의 100% 이상에 해당하고 있다. 시행상의 문제점으로는 성과배분상여금의 평균임금산입에 따른 퇴직금부담 문제가 조금씩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노조는 '89년 9월에 설립되어 55%의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다. 연간 고정상여금은 기본급의 600%이다.

나전모방(생산비용절감 기준)

이 회사는 자본금 63억원, '90년 매출고 198억원, 종업원수 550명이며, '71년 9월에 노조가 설립되어 조직률 78%를 나타내고 있는 섬유 직물제조회사이다. 현재 고정상여금은 400%가 지급되고 있다. 성과배분제도는 '84년과 '85년에 부도발생 이후 생산장려를 위하여 사업주가 제시하여 도입되었다. 제도도입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각부서에서는 인원을 되도록 적게 쓰려고 하며, 재고관리도 효율화되고, 불량률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성과배분방식은 실제생산액(생산량×단위원가)이 부서별 월간 생산계획보다 초과하여 생산되었을 때 초과비용에 따라 종업원 1인당 5,000원에서 10,000원까지 월급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07~109%까지는 5,000원, 109~111%까지는 6,000원, 111~113%까지는 7,000원, 113~115%까지는 8,000원, 115% 초과시에는 10,000원을 가산하여주고 있다. 생산목표설정은 기획부가 여타 관리부서와 협조하여 작업일수를 감안하여 월간 생산계획서를 작성하며, 성과는 매월 부서단위로 평가하여 부서별 1인당 지급액을 결정하고 勤怠 등을 감안하여 개인별로 차등지급한다.

노사간의 정보교환을 위한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다. 회사의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경영에 건의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부흥위원회는 당연직(23명)과 선출직(40명)을 합한 전사원의 10% 범위내의 인원으로 구성되어서 매월 소위원회 및 격월 정례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생산실적 및 계획은 매월 전사원 조회시 발표하고, 전 부서장을 대상으로 하는 월 2회의 경영전반에 관한 방침관리보고회의가 있다. 연 2회(2월, 8월) 전사원의 30% 정도의 근로자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토론회 형식의 경영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이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 '84년부터 회사총주식의 30%를 직위구분 없이 균등배분하여 사주조합을 결성한 후, 주식수에 따른 특별상여금도 지급하고 있다. 회사발행주식 총수는 12만주(액면가 5,000원)인데 근로자보유주식률은 30% 상당인 30,126주이며 주식소유 근로자는 329명이다. 주식취득은 입사하여 6개월이 경과한 근로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89년 결산결과 배당액은 3,034만원(주당 1,000원 상당)에 이르고 있다.

外國의例 : 美제너럴 모터스(이익기준)

제너럴 모터스(GM)와 UAW(미국 자동차근로자협회) 사이의 성과배분제도에 관한 단체협약을 보면, 단체협약의 시기는 3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과산정지표는 소득세 부과전 순이익으로 하고 있다. 근로자배분분은 순이익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순이익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1.8%인 경우에는 근로자 배분분이 순이익의 6%, 1.8~2.3%인 경우 순이익의 8%, 2.3~4.6%인 경우에는 순이익의 10%, 4.6~6.9%인 경우에는 순이익의 14%, 6.9% 이상일 경우에는 순이익의 17%를 근로자 몫으로 배분한다. 한편 목표회시에도 각 \$50×개별근로자수를 근로자 배분분으로 지급한다.

성과배분의 대상범위는 1년이상 근속, 시간급 임금근로자(상용 생산직근로자)이며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개별 지급한다. 이때 병가, 유급휴가 등은 일한 시간으로 포함하여 계산된다. 회사의 범위는 제너럴 모터스(GM)의 회계연보에 대상이 되는 회사로 한정되어 외국에 위치한 제너럴 모터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성과배분의 지급시기는 회계년도 1.5~2개월 사이이다.

순이익이란 일반적으로 공인된 회계법에 의하여 계산된 것이며, 회사의 경영진이 순이익과 근로자 성과배분분을 결정한다. 순이익의 계산에는 공인회계사의 공증된 의견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공인회계사의 선정은 회사에서 하며 주주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회계상의 문제는 이것으로 확정되고 성과배분의 참여대상인 근로자에게도 구속력을 지닌다. 본문

경제정책을 다시 추진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보여 왔다. '7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은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국제관계가 재개됨에 따라 대외개방·외자도입을 통한 급속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의 대외의존도 심화와 자본주의화를 우려하여 走資派 비판과 洋奴哲學비판운동이 전개되는 등 혼란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70년대 후반 모택동의 사망과 四人幫의 실각으로 중국 경제는 양노철학비판의 질곡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78년 12월 黨 11기 제3차 중전회(中央委員會全體會議)에서 '당의 활동과 인민의 역량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 이행 시킨다'는 방침에 의거, 중앙집권적 경제체제의 분권화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개혁의 추진을 결정하고 개혁·개방정

나라경제 논단

중국의 경제개혁: 성과와 전망



김창선
경제기획원 북방경제2과장

'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7차에 걸친 5개년계획과 경제조정정책을 수립, 실시하여 왔다.

건국 후 약 40년간의 중국경제의 발전과정을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

'50년대에 중국은 소련식 개발방식을 도입하여 중공업 중심의 급속한 공업화를 위한 불균형 성장전략을 채택하였다. '60년대 초반에는 大躍進運動期('58~'60)의 독자적 사회주의 건설노선에 따른 독립자주·자력갱생의 폐쇄적 경제정책을 실시한 결과, 경제상태의 악화로 경제조정정책을 통한 국민경제의 회복이 불가피하였다. '6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문화대혁명('66년)으로 毛澤東의 급진주의 노선이 대두되었고 중공업 발전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적

책의 실시를 통한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80년대를 통해 눈부신 성장을 계속하던 중국경제는 '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소득격차의 확대·인플레이의 심화·인민폐(元貨)의 환율 불안정·'官倒'라고 불리는 부정부패, 무질서, 무규율의 만연 등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 '89년 '6·4 천안문 사태'의 발생과 그로 인한 조자양 총서기의 실각으로 그동안 추진되어 오던 시장기능 강화를 통한 경제체제의 개혁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보수·개혁파간의 경제의 개혁과 개방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88년 9월 이래 건축조정정책('88. 9. 제13기 제3차 중전회결

정)을 지속하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조정국면에 처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중국의 경제개혁은 국내정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수축과 확대의 과정을 반복해 왔다. 건국 이후의 중국경제의 발전과정을 5개년계획기간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표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중국의 경제개혁

중국의 경제개혁은 '計劃商品經濟體制의 확립을 통한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말로써 집약될 수 있다.

계획상품경제체제란, 시장메커니즘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모델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를 중국의 현실에 맞게 적용시킴으로써 중국적 특색을 지닌 독자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이 개혁의 기본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경제의 개혁

먼저 중국경제개혁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농촌경제의 개혁은, 기존의 人民公社制度를 폐지하고 농가계약책임제도를 실시하여 생산과 이윤을 연계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토지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여 토지 및 주요 농업생산 요소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경영권한은 개별농가에 배분하고 생산목표를 초과한 잉여농산물에 대해서는 자유시장에서의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농산물 생산의 증대와 농가 소득확대를 위한 유인을 개별농가에 제공하였다.

또한 농산물 수매가격을 인상시키는 한편 종래의 강제수

<표 1> 중국경제의 발전과정

연대구분	정책의 중점방향	주요성과	주요사건
제1차 5개년 계획기 ('53~'57)	○ 소련식 개발전략 채택으로 불균형 성장 추구 ○ 소련 일변도의 대외경제 ○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 연평균 8.9%의 GNP성장 ○ 연평균 18%의 공산품생산 증가율	○ 중국헌법채택('54) ○ 농업의 협동화, 사영 상공업의 공영화('55) ○ 국어 개혁('56)
제2차 5개년 계획기 ('58~'62)	○ 대약진 운동기('58~'60) ○ 폐쇄적인 대외관계	○ 소련의 원조중단, 3년연속 흉작으로 마이너스 성장	○ 소련의 협정파기('60) ○ 자력갱생방침 결정('60)
경제조정기 ('63~'65)	○ 대약진운동의 기본이념 포기 ○ 일본·서유럽국가로 무역전환	○ 국민경제회복	○ 사회주의 교육운동('63) ○ 핵실험 성공('64)
제3차 5개년 계획기 ('66~'70)	○ 근대적 농업·국방·공업·과학기술을 갖춘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건설 ○ 문화 대혁명기('67~'68)	○ 기간산업토대 구축 (군수산업 우선발전) ○ 시간급 임금제도 실시	○ 간부의 하방운동('68) ○ 인공위성발사 성공('70)
제4차 5개년 계획기 ('71~'75)	○ 농업기초·공업유도의 경제발전 ○ 대외개방정책으로 전환	○ 양곡생산증대 ○ 경제관리의 분권화 ○ 대외무역 증대	○ 닉슨 중국방문('72) ○ 日本 田中 수상 방중('72) ○ 四人幫대두('73)
제5차 5개년 계획기 ('76~'80)	○ 주은래의 장기계획발표('75) -경제체제의 정비와 4대 현대화 추진 ○ 대폭적인 경제개혁과 경제조정	○ 대외개방과 경제개혁 -경제특구 설치 -농업부문의 개혁	○ 모택동 사망, 4인방 체포('76) ○ 中·日('78), 中·美('79) 국교 수립
제6차 5개년 계획기 ('81~'85)	○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원칙하에 경제 주체의 자주권 확대 추구 ○ 대외개방과 경제의 효율성 증대	○ 고도의 경제성장 ○ 외자도입, 기술도입 증가 ○ 농업생산 증대	○ 인민공사 해체('83) ○ 경제체제 개혁 결정('84. 黨12기, 제3차 중전회)
제7차 5개년 계획기 ('85~'90)	○ 경제생활의 안정과 국민생활 개선 ○ 긴축 조정정책의 실시('89.11)	○ 연평균 8.5%의 GNP성장 ○ 무역규모 8.2% 증가	○ 조자양 총서기취임('87) ○ 고르바초프 방중(89.5) ○ 천안문 사태('89.6)
제8차 5개년 계획기 ('91~'95)	○ 장기적 안정성장으로 2000년 GNP를 '80년의 4배로 증가 ○ 대외개방과 수출확대 ○ 지역경제 발전	○ GNP성장률 6% 유지(공업 7~9%, 농업 3.5~4%)목표 ○ 통화증가율 연10% 유지	○ 8·5계획 및 10개년 계획의 기본방침 결정('90. 12 黨 13기 제7차중전회)

매방식을 폐지하고 예약수매제도를 실시하였다. 농업세의 납부방식도 종전의 현물징수로부터 현금납부방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기업개혁

한편 기업개혁은 농업개혁의 성공에 자극받아 경제발전과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의 4대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향상과 기술진보를 통한 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70년대 후반 四川省지역에서 먼저 시험적인 개혁조치가 취해짐으로써 시작되었다.

'78년 12월 黨 11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추진되어 온 기업개혁을 3단계로 구분해 보면, 먼저 1단계('78년 12월~'84년 10월, 黨12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와 기업 사이의 권한관계의 조정을 시발로 기업의 의사결정권 확대, 일정비율의 이윤유보 인정('79년), 이윤상납제를 법인소득세의 징수로 전환('83년 6월)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84년 10월부터 '86년말에 이르는 제2단계 기업개혁에서는 기업의 자치권 확대와 활성화, 정부통제의 간소화(의사결정권의 위임, 조세개혁, 공장장 책임제의 실시 등) 및 명확화 등이 추진되었고, 기업경영의 개혁이 전 기업으로 확대되었다. 3단계('87년~현재)에서는 共有制의 원칙하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 지역별·기업별 경영관리체제의 다양화, 주식회사제도의 일부 도입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가격제도의 개혁

가격제도의 개혁은, 일부 통제가격체제를 개선하여 시장 메카니즘을 반영하는 가격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 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가격제도의 개혁은 경제개혁 전체의 성과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79년 18개 농산물 수매가격을 인상하여 농·공산품간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조치가 최초로 실시되었다. 가격제도의 개혁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통제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시장의 수급원리에 따른 가격결정의 폭을 확대시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격개혁의 추진을 위해서 중국은 계획가격(정부의 수매가격), 협의가격(생산목표초과 생산물을 시장에 판매할 경우 형성되는 가격), 자유가격(집단지장에서 개별농가에 의해 형성되는 가격)의 세 가지 형태의 가격구조를 인정하였다.

농산물 부문에 있어서는 돈육·계란 등 주요 부식품의

가격을 자유화하고 곡물·면화 등 주요 농산물의 수매가격을 대폭 인상하였다. 원자재 및 자본재에 대해서는 기계·전기설비·건축자재 등의 정부매입가격에 변동가격제도를 도입('80년)하고 철강·석탄·시멘트 및 주요 공업제품에 대한 가격규제를 부분적으로 철폐('84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소비재 부문에 있어서도 담배·화학섬유·자동차 등의 생산목표 초과생산량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주판매권을 인정하였고, TV·술·일용잡화·문구류·전기제품 등의 가격자유화 조치가 잇달아 시행되었다.

거시경제운용체제의 개혁

거시경제운용체제의 개혁은 계획경제체제의 중앙집권적 통제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획과 행정적 통제에 의한 경제활동의 직접규제방식을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거시경제운용체제의 개혁은 구체적으로 계획제도 자체의 개혁과 재정 및 조세제도의 개혁, 그리고 금융제도의 개혁으로 나누어진다.

계획제도의 개혁은 국가에 의한 指令性計劃의 범위를 축소하고 일선 생산단위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국가는 경제정책과 통제수단을 적절히 운용하여 계획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정·조세제도에 있어서는 우선 기업의 유보이윤과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시켜 기업의 총이윤 중 유보이윤의 비율을 증가시켰고('88년에는 62.2%까지 증가) 중앙과 지방 간의 재원배분을 명확하게 하여 '80년 이후 中央·省·市 정부는 독립적인 자체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89년 지방정부예산은 국가예산의 50.7%). 또한 경제조정에서 조세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80년 이후 일부 농·공산품의 稅源과 세율을 조정하여 工商稅수입이 총재정수입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2.2%('79년)에서 64%('89년)로 증가시키고 종래의 단일세제를 복합세제로 개편하는 등의 개혁이 추진되었다.

금융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금융이 경제발전과 기술혁신에 대한 지렛대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이자율과 환율, 총수요 관리에 있어서의 중앙은행(中國人民銀行)의 기능을 강화시켜 종래의 국고수납취급소의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금의 수급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전환시켰다.

경제의 대외개방정책

경제의 대외개방정책은 경제개혁의 추진과 밀접한 관계

를 갖고 있다. 양자는 경제의 대외개방을 위해서는 경제체제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며, 경제체제개혁의 추진은 다시 경제의 대외개방을 촉진시키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79년 9월 廣東, 福建 두 省에 외국의 자본·기술·관리 경험과 지식을 도입하기 위한 창구로서 4개의 경제특구(深圳, 珠海, 汕頭, 廈門)가 처음 설치되었다. 중국의 개방정책은 그후 14개 연안도시의 경제기술개발구 설정, 3개 삼각주(長江, 珠江, 閩南) 및 요동, 산둥반도의 추가적인 개방구 지정으로 이어지면서 북으로는 요동·산둥반도로부터 남으로는 海南島에 이르는 장장 3천km의 연해지역이 개방되어 이 지역의 三資企業(合資企業·合作經營企業·獨自企業)이 사실상 중국경제의 성장 및 국제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90년도 중국의 총수출 중 3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2.7%였음).

그러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인플레이의 만연,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보수·개혁파의 대립으로 인한 政情의 불안 등으로 인해 지금의 중국은 '治理整頓'이라 불리는 긴축조정정책이 지속되는 조정국면에 들어서 있다.

경제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개혁의 성과

'79년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약 10년간의 경제개혁 추진에 따른 주요성과는 우선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연평균 9.6%의 높은 경제성장률, 16.6%의 무역규모 증가 등 외형적인 경제성장은 물론 임금수준의 향상과 내구소비재

〈표 2〉 중국의 주요경제지표

項 目	'52	'78	'80	'85	'89	年平均增加率(%)
○ GNP(億元)	-	3,588	4,470	8,557	15,788	14.4
1人當 GNP(美달러)	-	215	229	255	352	4.6
國民所得(億元)	126	1,099	1,162	2,457	4,515	13.7
○ 部門別國民所得						
1次産業(億元)	-	1,018	1,359	2,542	4,228	13.8
2次産業(·)	-	1,745	2,192	3,866	7,380	14.0
3次産業(·)	-	825	919	2,119	4,180	15.9
○ 物 價						
全國小賣物價指數	100	122	131	156	247	6.6
都市勤勞者生活費價格指數	100	125	137	168	275	7.4
○ 貿易規模	19.4	206.4	381.4	696.0	1,116.8	16.6
輸出(億달러)	8.2	97.5	181.2	273.5	525.4	16.5
輸入(·)	11.2	108.9	200.2	422.5	591.4	16.6

의 공급증가로 국민생활수준이 크게 개선된 점을 들 수 있다(표 2 참조).

경제개혁추진의 각 부문별 성과를 보면, 먼저 농업부문에 있어서 농업생산액의 증가('78년의 1,397億元⇒'89년 6,535億元으로 4.6배 증가)와 농민생활수준의 향상(1인당 소득이 '78년의 134元에서 '89년 601.5元으로 증가)등이 주목되며, 기업부문에 있어서도 기업의 자율권 확대, 기업경영제도의 확립(소유와 경영의 분리, 다양한 請負責任制 실시 등), 기업의 지도체제변화(공장장 책임제 실시) 등 경영관리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경제개혁의 문제점

중국경제는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괄목할 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산업구조의 왜곡, 경기과열(인플레이), 수급의 불균형, 지역간·계층간 소득격차의 확대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우선 산업구조면에 있어서 공업과 농업간, 기반산업과 제조업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에너지산업, 수송·통신, 기초 소재산업, 하부구조의 발달이 지연되어 제조업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분야에서도 계획성 없는 중복투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 경제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두번째 문제점으로는 총수요와 총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시장의 불안정을 들 수 있다. 경제규모와 공급능력이 부족한 가운데 초과수요에 따른 물가상승, 통화팽창, 재정적자의 증대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더욱 가속화됨으로써 결국 개방정책의 추진을 제약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셋째로는 지역간·계층간의 소득격차의 확대를 들 수 있다. 沿海地域의 중점적인 개발과 외국자본·기술의 집중적인 유치로 인해 내륙과 연해지역 사이에 현격한 소득수준의 차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되었으며, 산업간·직종간 임금소득격차의 확대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의 이중구조로 인한 이념적·현실적인 갈등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경제·사회체제의 변화에 따른 이념적 갈등은 차치하더라도 이중가격제도에에서의 매점매석과 지하경제의 발생, 개혁추진과정에서의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사회적 범죄의 증가 등도 경제개혁추진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경제개혁의 장애

최근의 중국경제는 인플레이와 실업·재정적자·소득불균형 등 산적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조합

과 경제체제를 선택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90년도 중국경제의 운용실적을 살펴보면 경제성장률이 4.4%, 공업생산증가율이 6.0%를 기록하였고, 물가상승률은 3%, 무역은 수출이 620억 7천만달러, 수입이 533억 6천만달러로 87억 1천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수치로 미루어 본다면 '90년도의 중국의 경제사정은 '89년도에 비하여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인플레이션율은 '89년도의 17.8%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여 ('90년 2.1%) 일단 진정국면에 접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사정의 변화는 '8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긴축조정정책이 정부의 강력한 통제력에 의해 뒷받침되어 나타난 결과로서 사회주의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정부의 규제를 통해 목표수치를 달성하려는 사회주의식 계획경제적 접근방법의 부활은 장기적인 중국경제의 성장에 제약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경제의 장래를 전망하기 위해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특수성의 하나인 정치적 영향력이다. 중국에 있어서 경제개혁은 중국 국내의 정치적인 변혁과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개혁에 대한 전망을 위해서는 먼저 중국의 미래 정치상황을 예견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중국은 개혁의 추진을 둘러싸고 보수파와 개혁파 사이의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黨(강택민 총서기), 행정부(이봉 수상), 軍(양상곤 주석)으로 권력이 분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권력체제는 鄧小平이 사망할 경우 상당한 재편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견되며, 권력의 재편과정을 통해 출범하게 될 중국의 정치체제를 상정해 보면 앞으로 중국이 채택할 수 있는 경제체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시나리오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보수편향의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이다. 이러한 가정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만연되어 중국 전체가 극심한 혼란상태에 빠질 경우 陳雲을 위시한 보수파가 군부의 지원을 통해 전국을 장악함으로써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회귀현상은 이미 중국경제가 상당부분 시장경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잠정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결국은 개혁파의 새로운 개혁정책으로 대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는, 군부통제체제를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등소평 사후 심각한 정치혼란이 야기될 경우 국내의 혼란을 수습할 유일한 권력은 군사력뿐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군부지도자에 의한 戰時 사회주의체제는 인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중국지도부 역시 군부의 개입을 배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나 체제의 지속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개혁·개방정책을 지속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의 폭을 축소시키고 이념적·사상적 통제를 강화시키는 체제이다. 이것은 조자양이 주창한 개혁모델로서 그의 재집권여부와 관계없이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구조, 공유재산 제도에 대한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경제개혁의 추진은 '80년대 중국이 겪었던 제문제들을 재발시킬 가능성이 높고 점진적인 개혁의 추진은 반대파들에게 공개적·비공개적인 저항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장애물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급진적인 시장사회주의 체제이다. 이는 '6.4천안문 사태'를 통해 제시된 바 있는 급진적인 개혁모델로서 시장원리가 경제를 주도하고 사유재산권이 인정되며 정치개혁이 진행되어 당의 독재가 타파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개혁의 추진을 위해서는 고르바초프와 같은 강력한 정치지도자가 요구되며 중국의 정치구조와 분위기가 상부주도의 급진 개혁운동은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네 가지 시나리오 중 향후 중국경제가 나아갈 길을 예측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은 어떠한 체제든지 일관성 있고 양립가능한 하부체제가 구성되어야만 존속가능하다는 체제이론의 가르침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경제체제와 정치체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경제체제의 경우에도 분배구조는 소유제도와 양립 가능하여야 하며 생산물시장은 관련 생산요소시장과 동반관계를 유지해야만 존속가능한 것이다.

중국의 경제개혁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경제체제 자체의 非整合性 및 경제체제의 개혁·개방과 정치체제의 보수편향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로부터 야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이러한 사회의 이중구조를 극복하여 개혁·개방정책을 성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한글]

미국은 그동안 기술혁신으로 경제발전을 이뤄 국제우위를 확보하였으나, '70년대 중반부터 무역적자가 누적되고, 특히 '80년대부터 첨단기술분야에서 조차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자 상품교역 이외에 지적재산권 등 서비스교역으로 무역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86년 미국통상대표부(USTR)에서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서도 지적재산권 보호규정을 강화하였다. 한편, 각 선진국들은 기존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기구인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로서는 지적재산권의 보호통제가 곤란하다고 주장하면서 GATT의 협상을 통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상차원에서 강화함과 아울러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협상(UR / TRIPS)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

나라경제 논단

국제산업재산권 분쟁과 대응방안



이상열
특허청 관리국장

※ 이 글을 쓸 당시 필자는
특허청 심사4국장이었음.

첨단기술일수록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로 인하여 그 기술정보에의 접근이 어려울 뿐 아니라 기술 이용시 막대한 로열티의 지불을 요구하고 로열티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산업재산권 국제분쟁으로 발전되는데 이러한 분쟁은 단순한 기업간의 문제를 넘어 국가간 통상마찰로까지 비화되는 경향이다.

는 경향이다.

산업재산권분쟁의 발생 원인과 배경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하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80년대부터 고부가가치의 반도체·VTR·PC 등 첨단제품의 수출비중을 증대하여 왔으나 한국의 기술수준을 볼 때 해외기술의존도가 선진국의 1.6% 내지 7.9%보다 월등히 높은 26.5%나 되고 있다. 기초과학 기술수준도 세계 38위(과학연구논문 수록편수 기준)에 머무는 한편 연구개발투자비는 2.1% 수준에 그쳐 선진국의 핵심기술 이용없는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첨단제품의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첨단기술일수록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로 인하여 그 기술정보에의 접근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기술 이용시 막대한 로열티(순매출액의 10% 수준까지 되는 경우도 있음)의 지불을 요구하고 있고, 로열티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산업재산권 국제분쟁으로 발전되는데 이러한 분쟁은 단순한 기업간의 문제를 넘어 국가간 통상마찰로 까지 비화되는 경향이다.

더욱이 다른 신흥공업국보다 기업단위 생산시설의 규모가 크고 첨단제품수출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산업재산권분쟁이 발생하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와 한국기업의 반도체기술침해분쟁에서 한 회사가 지불한 로열티가 8,500만달러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등 최근 그 분쟁이 심각하여 로열티가 큰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생산중단 내지는 전환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국내 산업재산권 전담부서 현황 및 관리체제

'70년대말까지 산업재산권 관리전담부서를 갖추고 있는 기업은 4개 업체에 전담요원이 20여명에 불과하였으나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점차적으로 산업재산권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90년말에는 전담부서를 갖춘 기업이 612개 업체로 늘었고 전담요원도 1,980여명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더라도 아직 타 부서에 부수적으로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규모면에서도 과 단위 이상으로 전담요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은 20여개사 뿐이고, 전담부서의 책임자가 이사급 이상인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여, 분쟁발생시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기업의 산업재산권 관리체제는 최고경영자의 직속 기구로 하여 업무의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이 부서의 책임자는 특허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특허전문가를 선임하여 특허분쟁 발생시 최고경영자의 입장에서 각 관련 부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며, 특허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영·업무·법무·발명 및 개발 등의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재산권 국제분쟁 현황

국제분쟁 유형 및 현황

분쟁은 국내기업 등이 외국의 산업재산권 보호기술을 직·간접적으로 침해하였을 경우 경고장을 받는 것으로부

터 시작되는데 '83년부터 '90년말까지 사이에 24개 기업으로부터 조사·확인된 경고장 건수는 150여건이고 국내 전체 기업으로 볼 때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분쟁의 유형은 당사자간에 협상하는 방법과,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국제무역위원회(ITC) 또는 법원에 제소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의뢰하는 방법이 있고, USTR에 의한 통상차원의 해결방법 등이 있는데, 최근에는 전문 특허 브로커까지 등장하여 국제분쟁의 양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ITC에 제소된 미관세법 제337조 관련 분쟁 전체 현황은 '74년부터 '90년 12월까지 사이에 조사개시된 건이 총 320건이고 그 중 특허침해분쟁이 80.2%인 248건으로 특허가 분쟁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판정결과 침해로 인정된 것은 종결된 287건의 69%인 199건이다. 연도별 제소추세를 보면 '83년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84년도를 기점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한국기업이 ITC에 제소된 현황은 '74년부터 '90년 12월까지 사이에 조사개시된 건이 총 19건으로 총 제소건의 5.9%에 해당된다. 그 중 침해(수입배제명령, 화해)로 인정된 건은 10건으로 종결 건인 17건의 58.8%에 해당되는데 ITC에서 침해라고 판정된 전체 비율인 69%보다 적은 비율이다. 그리고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무선전화기 등 첨단제품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으로 미국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전체 현황은 '88년 9월부터 '89년 9월까지 사이를 보면 제1심인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건이 총 53건으로 그 중 특허침해소송이 89%인 47건이고, 제2심인 미연방고등법원(CAFC)에 항소된 건은 총 276건으로 그 중 특허침해소송이 62%인 171건이며, 대법원에는 특허만 2건 상고되어 소송의 대부분이 특허침해 분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 특허청에 당사자간 분쟁으로 심판(제1심)을 청구한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 처리결과를 보면, '87년부터 '90년 10월까지 사이에 무효심판은 2,179건을 처리하였는데 그 중 성립(승소)건은 48.9%인 1,066건이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1,341건을 처리하여 그 중 성립건은 54.9%인 736건이다. 또한 동 기간내에 내·외국인간의 국제특허분쟁 처리건은 총 709건으로서 심판결과 한국인 승소율이 55.2%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한국 법원에 제소된 산업재산권 분쟁 현황은 '56년부터 '89년 상반기까지 조사된 산업재산권 승소판례 건수는 총 79건이고 그 중 침해를 인정한 판례는 43%인 34건이며, 내·외국인간 국제분쟁건은 11건으로 전체 판례의 14%를 차지하며 그 중 침해를 인정한 판례는 4건으로

침해판례비율이 36%에 해당된다. 또한 산업재산권 판례 총 79건 중 상표가 28건, 특허·실용이 26건, 의장이 12건, 부정경쟁이 7건, 저작권이 6건 순으로 되어 있다.

그밖에 중재기관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이 있는데 미국에는 미국중재협회(AAA), 한국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있으며, 최근에는 산업재산권분쟁도 중재기관에 의해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89년도의 경우 산업재산권분쟁으로 AAA에 중재신청한 건은 총 63건이고, '87년 이래 대한상사중재원에 내·외국인간 산업재산권분쟁에 대해 알선을 신청한 것은 총 11건이며 협상이 이루어진 것은 2건이다.

한국기업의 로열티 협상 및 지불현황

외국기업의 로열티 청구현황은 '83년부터 '90년까지 사이에 미국·일본·서독 등 9개국의 80개 회사가 173건의 로열티를 국내 전자업체에 청구하였고 그 중 미국이 68.8%인 119건으로 산업재산권분쟁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품목별 로열티협상 현황은 컴퓨터가 46건, 반도체가 31건, VTR이 25건 순으로 첨단분야 품목일수록 로열티 청구건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기업의 주요 품목별 로열티 지불현황은 첨단제품일수록 로열티 지급률이 증가되고 있으며 개인용 컴퓨터(PC)는 순매출액의 약 7% 수준(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가 3%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면 10% 수준이 예상됨)이고 반도체는 약 9.4% 수준이며, VTR은 약 10% 수준, CDP는 약 4.8%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62년부터 '89년까지 사이에 총 기술도입 건수는 6,206건이며 동 기간내 지불한 총 기술료는 38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89년도에 지불한 기술료만도 8억 8천만달러에 달한다.

국제특허 분쟁사례 분석

PC업계 대 IBM사

한국기업이 IBM사의 호환기종인 PC를 저가로 생산하여 미국의 시장을 잠식하게 되자, IBM은 '88년 6월 국내 7개 PC업계의 제품이 IBM의 특허 160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우리 업계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한국에 등록된 특허는 단 1건뿐으로서 동 1건에 대한 특허료로 약 736만달러를 소급 적용하기로 '89년말 협상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IBM은 '89년 후반기에 3건의 특허를 한국에서 추가로 등록받자

국제분쟁의 유형은 당사자간에

협상하는 방법과, 협상이 성립되지 아닐 경우

국제무역위원회(ITC) 또는 법원에 제소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의뢰하는 방법이 있고

USTR에 의한 통상차원의 해결방법 등이 있는데,

최근에는 전문특허 브로커까지 등장하여

국제분쟁의 양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로열티를 1%에서 2%로 추가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분쟁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

본 사례의 교훈으로서 본건과 같이 일시에 100건 이상의 특허침해를 통보하여 사실상 법적기간내에 응답을 불가능케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평상시에 동종업계의 특허확득 동향과 기술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동아제약 대 Bristol Myers

동아제약이 '82년 항생제인 Amikacin을 개발하여 제품화를 진행하던 중에 Bristol Myers사(B·M)로부터 동 제품에 대한 사업포기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받았으나, 자사특허 제조방법으로 Amikacin을 계속 생산키로 결정하자, B·M사는 '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B·M사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패소하게 되자 USTR에 통상차원의 조치를 청원하였으나 그 청원이 사실상 기각됨에 따라 두 회사가 서로의 특허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cross license) 로열티 지불 없이 협상을 종결지었다. 본 사례의 교훈은 동아제약이 자사 특허를 외국에 등록하였더라면 그 특허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서 논란이 없었을 것이다. B·M사의 경고장을 받은 동아제약이 신중한 검토 없이 'B·M사 특허침해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바 있어 소송진행중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경고장에 대한 회답은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산업재산권 분쟁의 대응책

대외 정책

UR지적소유권협상에서는 반도체 칩 설계 및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강화에 협조하는 한편, 국경초치에 있어서는 위조상품에 한정하는 등 개도국의

입장도 반영하여 선·후진국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미 쌍무협상을 철저히 이행하고 양국간의 법제도 차이에서 오는 오해를 없애 분쟁을 완화하여야 할 뿐아니라 EC와 일본의 물질특허 소급보호에 대한 대미 동등조치 요구에 대하여는 UR협상 타결후 신속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대내 정책

원천기술의 개발 및 개량기술의 개발로 기술의 해외의존도를 줄이고 비교우위의 산업기술연구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기업내 발명자에게 판매이익금의 일정률을 지불하는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 직무발명보상지침을 설정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해외특허권의 취득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보조율을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특허분쟁연구회의 활동강화를 위하여 본회를 상설화하는 등 기업의 분쟁대응능력을 지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창설이 요망되며,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확보방안으로서 산업대학원 또는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에 미국 Patent Attorney 수준의 변리사 양성과정의 신설과 심사의 질 향상을 위한 심사관 증원 및 전문화도 절실히 요망된다.

한편 특허기술의 정보이용 체제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의 특허정보센터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이 필수적이고, 기업의 산업재산권 관리능력 지도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그밖에 지적재산권 침해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구제제도도 적극 활용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의 근본적 대응책

R & D 투자확대로 기술개발 및 업계 공동연구체제를 구축하고, 국제특허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허전문가를 확보함과 아울러 특허전담부서를 최고경영자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방안 및 해외 경쟁기업의 최신 특허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제공자 확보 등 기업의 특허분쟁 대처방안을 강화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로열티가 차지하는 비중을 품목별로 정확히 예측하여 생산설비의 신·증설시 이를 고려하는 등 장기적인 경영전략 구상이 필요하며, 주요품목 도입시 특허권 관련 조항을 삽입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분쟁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기업의 분쟁 사전대응책

생산설계 단계에서부터 선진기술을 철저히 조사하여 특허권 저촉가능성을 파악하고, '선특허·후생산'의 원칙을 이행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전에 분쟁회피 방안을 마련하고, Patent Map을 철저히 활용하여 경쟁기업의 특허동향을 체계적으로 감시하여야 할 것이며, 개량발명의 촉진은 물론 해외출원 확대로 분쟁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쟁회사의 부실특허권을 무효화하는 견제노력을 배가함과 동시에 제소정보의 조기입수를 위한 체제를 구축하여 소송시 기선을 제압하도록 대처해 나가는 것이 요망된다.

기업의 분쟁발생후 대응책

경고장을 받으면 그 내용이 자사제품과 관련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한 후 회신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분쟁제소시 사건을 전담할 팀을 즉각 사내에 구성하여 지원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국내의 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국제분쟁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리사를 선택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또한 제소인의 특허권을 법률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특허권의 무효화 또는 권리범위 축소 등에 대한 제심사를 특허청에 청구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분쟁제기회사의 분쟁저의를 파악하여 로열티 증액이 주목적인 경우에는 증액협상으로 소송을 피하는 것이 유리하다. 시장독점이 주목적인 경우에는 회피설계 또는 크로스 라이선스로 대응하거나 생산전환의 필요성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화해를 하기 위한 전략적 회피설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분쟁을 협상으로 종결할 것인가, 재판에 응소할 것인가를 빠른 시일내에 결정하여 소송비용이나 로열티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승·패소의 전망이 불확실할 경우 화해의 적절한 시기를 포착하여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는 화해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밖에 중재기관의 중재 또는 알선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제소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였을 경우 역제소를 하는 등 부당한 제소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도 구상하여야 하며, 현지생산으로 전환하거나 반제품으로 수출하는 영업전략에 의한 해결방안도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 모두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성장의 열매가 국민 모두에게 고루 나누어지지 않아 계층간의 갈등이 짝트게 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87년 6·29선언을 기점으로 각계의 요구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밖으로 드러났다.

'87년 하반기부터 '89년까지 불과 2년 반 사이에 무려 7,200여건의 노사분규가 터졌다. 이 기간중 산업현장은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었다. 이러한 노사분규의 소용돌이 속에서 산업현장에는 국가사회의 기틀인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모든 문제를 힘으로 풀려는 풍조가 널리 퍼졌다.

사용자측은 사용자측대로 그간의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한 채 정부에만 매달려 사태를 손쉽게 해결하려는 안이한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인간적인 대우를

나라경제 논단

노사갈등해소를 위한 제언



고광섭

경제기획원 경제교육기획과
사무관

왜 노사갈등이 싹트나

선진국이 100년에 걸쳐 이룬 경제발전을 우리는 불과 30여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해냈다. 그것은 바로 근로자와 기업가의 땀과 정성이 뭉쳤기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자리가 없어 생활을 꾸려나가 기조차 어려울 무렵에 우리 기업인은 놀라운 창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기술과 자본이 전혀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장을 짓고 수출시장을 개척하여 물건을 내다 파는 등 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근로자는 오직 일자리를 얻었다는 보람으로 몸을 던져 열심히 일했다. 정부도 기업의 발전을 돕고 근로자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는 등 꾸준히 힘써왔다.

외치는 근로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골치 아픈 기업경영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눈을 돌린 기업가도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는 무질서 속으로 빠져들면서 우리 경제를 벼랑으로 내몰았다. '89년에는 수출물량이 감소하였고 지난해에는 국제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섰다. 근로의욕도 기업의욕도 크게 떨어져 우리 경제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산업평화 정착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자 지난해부터 과격한 노사분규는 근로자, 기업인 모두에게 이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자리잡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노사분규가 크게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산업현장에는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전노협'을 비롯하여 여러 법외 노동단체가 인사 및 경영권 쟁취 투쟁을 벌이고 있는 반면 기업측은 비타협적 태도를 못 버리고 있다. 나아가 일부 급진노동세력은 좌경이념 전파와 체제전복을 위한 폭력투쟁을 꾀하고 있다. 근로자측의 임금인상 요구도 기업측의 주장과 거리가 멀어 임금교섭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임금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지만 '임금-물가'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예전보다 살기 어려워졌다고 하나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복지국가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노사간의 갈등을 말끔히 씻고 화합과 전진의 길로 가야 한다. 이는 바로 근로자와 기업가의 양보와 타협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리고 조정자로서의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서로가 한발짝씩 물러서야

지금까지 노사관계가 순조롭지 못했던 것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기 때문이다. 노조가 강하면 파업으로, 기업이 강하면 불성실한 협상으로 임하였다. 그리하여 노사간의 불신의 벽은 높아만 갔던 것이다.

우리 산업의 대외 경쟁력이 극도로 악화되고 우루과이 협상 등 선진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심해지고 있는 이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잘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근로자든 사용자든 각자의 주장이 타당한 면도 있지만 한발자국씩 물러서서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질 때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물가가 뛰었다고 임금을 올리면 악순환만 되풀이 돼

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하나 물가가 뛰고 집세나 집값이 지난 수년 사이에 몇 배가 올라 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과소비와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상승, 투기적 가수요와 같이 어쩔 수 없는 문제도 많았지 않나 생각된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면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경쟁상대국에 비해 지나치게 임금이 많이 올라 여러 모로 애를 먹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상품이 국제경쟁에서 자꾸 뒤져가고 물건이 팔리지 않고 있는 마당에 임금이 더 오르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데도 문제가 크다. 임금

이 오르더라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긴 하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현실은 '임금-물가'의 악순환으로 인하여 임금인상이 결코 근로자들의 실질 생활향상에 큰 보탬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생산성이 향상되어 기업경영의 성과가 좋아지면 임금을 높일 수 있어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어렵게 살아가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생계비 수준에 맞춰 대폭 올리는 것도, 산업간·직종간 임금격차가 심하다고 높은 쪽의 임금수준에 맞춰 무조건 올리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개별 기업의 경영사정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도 곤란한 방법이다. 우리 근로자들이 생활해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임금은 받아야겠지만 생계비라는 개념이 애매하고, 생계비 수준이 지역에 따라 사람 씹씀이에 따라 모두 다른 것이어서 일률적으로 계산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생계비는 임금결정시 참고사항은 될 수 있지만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려운 우리 경제를 살리면서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생활향상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일해서 생산성이 늘어나는 만큼 임금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산성증가율은 관계없이 임금을 일시에 대폭 올리게 되면 기업이 견디내지 못해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금인상은 생산성향상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경쟁력의 변화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변화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기업경영의 성과가 좋아지면 기업도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므로 결국 그 혜택이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일부기업이나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성과배분제도(연초에는 임금을 안정된 수준에서 올린 후 일년동안의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몫을 나누어 갖는 제도)의 도입을 권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한다. 성과배분제도의 도입은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성과배분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몇몇 기업에서도 보아 왔듯이 제도도입 후 매출액이 늘고 임금이 더 크게 올라갔던 사례가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도 임금을 요구대로 올려주지 않는다고 힘으로 밀어붙이려 할 게 아니라 물건을 만드는 데 열과 성을 다해 생산성을 늘려 매출액 신장에 힘써야 하겠다. 그래서 경영성과가 좋아지면 임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겠다.

근로자측도 인사 및 경영문제에 의견을 밝힐 수 있어

근로자나 노조의 경영·인사권 참여문제와 관련하여 노사간의 의견이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또 정부가 기업편을 들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사실 인사 및 경영권은 그 폭이 넓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나 사용자의 인사결정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인사원칙, 배치 전환기준의 설정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노조가 인사나 경영문제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사전에 협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결정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채용·해고시 노사합의, 인사·징계위원회의 노사 동수구성, 근로자에 의한 특정 부서장의 선출 등의 주장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울러 사용자측은 근로자를 기업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여 의견을 존중하고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는 동시에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측도 기업경영에 대한 사용자의 전문성과 권한을 존중하여 노동권과 경영권에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지켜져야

근로자나 노조측에서는 파업기간 중에도 임금이 지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이라는 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면 임금청구권이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서독 등 선진국의 관례로 되어 있다.

노동계 일부에서는 파업기금이 모아져 있지 않으므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나, 파업기금의 적립은 노조 스스로의 문제이다. 기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내라는 것은 공정한 노사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근로자이든 사용자이든 법과 질서를 지켜야

최근 노사분규의 양상이 연대파업 등과 같은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른바 준법투쟁이란 이름으로 집단조퇴, 집단연월차 휴가를 신청하거나 식당 배식구에 한줄서기, 정시출퇴근 등이 행해지고 있다. 여러 법외 단체가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정보를 나누거나 친목도모 등 건전한 활동을 한다면 문제가 될 게 없지만,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쟁의발생 신고 등 임투일정을 시달하거나 연대투쟁을 할 경우는 법에 어긋난다. 준법투쟁의 경우도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은 쟁의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노동관계법상의 절차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사용자측은 문제해결을 위해 걸으려는 양보와 타협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구사대를 동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지불을 늦추거나 임금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행위도 법을 어기는 사항이다.

근로자이든 사용자이든간에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질서가 파괴되고 노사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게 된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묵과하면서 근로자만 억압하는 게 아니냐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근로자의 불법파업이나 폭력행위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사법조치가 진행되나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는 노동위원회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 사법절차가 그 뒤에 진행되기 때문에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우리 경제의 앞날을 위협하고 있는 노사간의 갈등은 단순히 노동현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마찰만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의 해소도 노사는 물론 정부와 사회지도층 인사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함께 나서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지난 3월 19일에 '사회적 합의'를 통한 산업평화와 경제 재도약의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리고, 노사 및 공익대표가 모여 자율적으로 '산업사회의 성숙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도 바로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모두가 인식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도 '70년대 이후 물가와 실업문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을 때 노·사·정이 각자의 이기적 논리에 집착하기보다는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다같이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름으로써 국가적 어려움을 이겨낸 예가 많이 있다. 우리도 노사간의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한 호주, 독일 등 선진국의 경험과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고 만 남미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발짝씩 물러서서 고통과 보람을 함께 나누는 공감대를 하루빨리 형성해 나감으로써 선진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다.

정부는 물가안정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힘써야

무엇보다도 근로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는 물가와

집 문제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자리수 물가안정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집세 및 집값을 안정시켜 집없는 근로자가계의 어려움을 덜어 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올해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아 불로소득을 아예 막아야 한다. 근로자 주택 25만호를 짓고 그 밖에 장기근속 근로자가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미 실시되고 있는 근로소득세 감감 외에도 근로자들이 세제상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 있어서도 노사대표의 참여기회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들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개방대학, 야간대학, 사내대학 등에 근로자들이 쉽게 취학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생산직 근로자들이 보수, 승진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기능인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근로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기업인 상을 세워야

근로자가 바라는 것은 임금인상 못지 않게 인격적 대우를 받는 것이다. 근로자는 기업발전의 소중한 동반자이다. 그러므로 사무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생산직 근로자도 대우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생산직 근로자는 늘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재해로부터 불안한 상태에 있으며 어려운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기술훈련이나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하며, 임금체계도 개선하여 학력이나 직종에 따른 차별보다는 일의 난이도나 중요도, 성과도 등에 따라 보수를 주도도록 관행을 고쳐나가는 한편 생산직에 더 많은 복지혜택이 주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노력도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믿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경영은 어렵다면서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

일부 부도덕한 기업가의 문제이지만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며 혼자 배부르겠다는 근로자가 열심히 일을 할 리 없다. 경영자료 공개를 통해 기업의 실상을 소상히 알려주고 노사의 어려움을 상호이해하는 토대 위에서 임금협상을 조속히 매듭지은 뒤 노사가 합심하여 열심히 일해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 성과를 나중에 정산하여 몫을 공정하게 나누어 갖는 제도(성과급제도)를 도입한다면 불필요한 임금분쟁을 피할 수 있고, 노사화합과 생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전문경영인 체제

를 만드는 것도 미룰 수 없는 일이다. 근로자 복지증진에도 힘써 기업가가 존경받는 풍토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근로자는 정당한 대가를 요구해야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정당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권익을 주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제품을 만드는 데 열과 성을 쏟지 않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중의 힘으로 몰아붙이려 한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수출납기를 지키지 못하고 불량품이 늘어나고 생산성은 나빠져 기업이 휘청거린다면, 임금을 더 올려달라는 근로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일한 만큼 받겠다는 분배논리뿐만 아니라 받은 만큼 일을 한다는 생산논리에도 충실하여 왕성한 근로의욕을 되찾아야겠다. 또 기업의 경영사정이 어려울 때는 참는 슬기도 필요하다. 그래야 기업과 함께 근로자의 발전이 가능한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근본원인은 정치(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자율적 질서가 자리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경제사회 전반에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있다. 질서의식이 바로 잡히지 않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질서의식이란 바로 이기심을 버리고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데서 출발한다.

이제 노사는 물론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몇 배의 노력과 인내가 요구되고 있다. 그리하여 경제선진국 실현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가는 데 각 경제주체가 뜻을 모아 힘써야 할 때이다. 이 시점에서 각자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빈틈없이 실천해 나감으로써 국민적 역량을 뭉쳐 나가야 한다.

특히 노사는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로서 균형이 깨지면 배가 뒤집히고 만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일이 몹시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인내와 화합의 자세로 고통과 보람을 함께 나누겠다는 결의와 각오만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